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으로
다시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

10.29

이태원참사,

인권으로

다시쓰고

존엄으로

기억하다



I. 들어가며

- 1. 참사를 정의하며: 10월 29일 밤, 국가는 없었다 08
- 2.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리하며: 사라진 국가, 박탈된 권리 09
-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의 배경 10
- 4.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구성 11
 - 1) 조사단의 구성
 - 2) 조사 진행 방식
 -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참여자 그룹
 - 4) 보고서의 구성

II.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09

-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중요한 이유

- 1.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21
 - 1)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
 - 2) 구조 받을 권리
 - 3) 생명과 안전은 뒷전, 통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시민들
- 2. 존엄에 대한 권리 31
 - 1) 존엄을 지킬 권리
 - (1) 마지막 순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 애도를 보장받을 권리
 - (2) 존엄한 일상을 보장받을 권리
 - 2) 유해 및 유산에 대한 권리
 - (1) 희생자 신원 확인과 시신 인도 과정의 문제점
 - (2) 유류품 인도 과정의 문제
 - (3) 국가의 공백을 채운 손길들
- 3. 진실에 대한 권리 38
 - 1)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1) 참사 초기 정보제공 부재
 - (2)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문제
 - (3) 정보에 접근할 권리
 - 2) 진실규명에 대한 권리



4.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43
1) 지원의 원칙들	
2) 의료·심리지원	
(1) 심리지원	
(2) 의료지원	
3)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4)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	
5. 애도와 연대의 권리	54
1) 정부의 일방적 애도의 문제점	
2) 차별없이 애도받고 애도할 수 있는 권리	
3) 혐오·폭력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	
4) 연대의 권리 침해	
III. 피해자의 인권침해 상황	71
- 누구를, 왜 참사피해자라 하는가	
1. 희생자와 유가족	74
1)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	
(1) 혐오·폭력을 방치, 조장하는 국가	
(2) 반복되는 참사와 깊어지는 혐오	
2) 마지막 순간에도 지킬 수 없었던 존엄	
3) 애도의 권리를 박탈당한 유가족	
(1) 온전한 애도를 가로막은 기계적 행정	
(2) 존엄과 인권을 보장 못한 취재·보도	
4)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재	
5)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	
6) 연결을 통한 치유와 회복	
2. 생존자	87
1) 참사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	
(1) 신체적 부상과 후유증	
(2)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2) 생존자로서 드러냄의 어려움	
(1) 혐오와 낙인, 국가의 무책임으로 가중되는 고통	
(2)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생존자의 이야기	





- 3) 치료 및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의 부족
 - (1) 신체적, 심리적 손상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 (2) 직업, 학업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부재
- 4) 연대와 연결을 통한 회복

3. 구조자 103

- 1) 참사 현장에서 국가의 공백을 채운 사람들
- 2) 참사 이후에 느끼는 무력감과 심리적 고통
- 3) 참사 이후 어려움과 지원의 부재
- 4) 사회적 연결을 통한 치유의 필요성
- 5) 소방관·경찰관 등 공적 구조자에 대한 지원 부족

4. 지역 주민, 상인 111

- 1)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특성
 - (1) 다양성과 다름이 공존하는 공간
 - (2) 상업과 관광 지구
- 2) 경제적 피해와 국가의 실질적 지원 부재
- 3) 참사의 목격자, 구조자로서 겪는 고통
- 4) 연대를 해치는 혐오와 낙인

IV. 국가의 책무 119

- 재난의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무 121

- 1)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의 책무 방지
 - (1) 안전관리대책의 부재
 - (2) 위험신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
 - (3) 미흡한 초기 응급 대응 과정
 - (4) 국가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응체계 부재 및 미흡한 현장대응
- 2)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무책임한 태도

2. 피해자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책무 126

- 1) 희생자의 존엄을 보장할 책무
- 2) 진실에 대한 책무
- 3) 혐오 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
- 4) 책임을 규명하고 사죄할 책무



3. 적절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	133
1) 배제없이 평등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	
2)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	
3) 즉각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	
4)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책무	
4.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무	138
1) 정부의 무책임과 유가족의 몫으로 남겨진 진상규명	
2) 유가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한 폄훼와 연대 방해	
3) 한계가 남은 국정조사	
4) 특별법 제정,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필요성	
5) 기록하고 기억할 국가의 책무	
5. 추모와 애도를 보장할 책무	144
1) 추모와 애도, 연대의 공간으로서의 합동분향소	
2) 참사를 기억하는 추모 공간 마련의 필요성	
3) 연대와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	
V. 사회의 책무	149
- 인권과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의 책임	
1. 언론 및 미디어의 책무	151
1) 왜곡·허위 정보와 혐오의 확대재생산	
2) 지켜지지 않은 피해자 보호 원칙	
3) 온전한 애도를 가로막은 취재·보도	
4) 혐오표현 댓글에 대응할 책무	
5) 사회구성원의 책임이 요구되는 유튜브, SNS	
2. 사회구성원의 책임	157
1) 연대하고 공감해야 할 책임	
2)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해야 할 책무	
	*
VI. 결론	161
1. 10.29 이태원 참사가 새기는 인권의 원칙과 공존을 위한 질문들	162
2. 재난·참사에 관한 인권의 원칙	163

I. 들어가며

I. 들어가며

1. 참사를 정의하며: 10월 29일 밤, 국가는 없었다

158명의 삶이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의 존엄도 지키지 못했다. 10월 29일 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저녁 6시 34분 첫 112 신고를 시작으로 11번에 걸친 신고 전화가 있었다. 응답하는 국가는 없었다. 곁에 있던 친구가, 시민이, 지역주민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 밤을 버텼다. 느장 부리던 국가의 공백을 시민들이 대신했다.

참사의 시작은 그날 밤이 아니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어 찾아왔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 위기는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재난참사 이후 제대로 책임지는 책임자는 없었으며 처벌은 경미하게 끝났다. 참사 직후에만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안전대책’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갔다. 진실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늘 뒷전이였다. 이는 무책임의 연쇄작용을, 비극의 반복을 가져왔다. 긴 시간 우리 사회가 품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10월 29일 밤 국가의 무책임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사람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는 없었다. 정부의 대응은 ‘왜 돌아올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삭제했다. 놀고 즐기는 이태원, 축제, 마약 범죄 의심으로 연결된 고리는 피해자들의 존엄을 박탈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참사 희생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대신 잠재적 범죄를 의심하는 방식으로 마약 검사, 부검 요구, 경찰조사 등이 진행됐다. 참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정부의 대응에 누구도 선뜻 피해를 드러내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정부가 참사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들을 할퀴는 날카로운 말은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잃지 말아야 할 소중한 삶을 떠나보내야 했다. 159번째 희생자였다.

참사는 모두의 삶에 상처를 남겼다. 사랑하는 존재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그 슬픔이 아물기도 전에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섰다. 이들을 위로하는 국가는 없었다. 생존자로 불리게 된 이들은 어떠한가. 그날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차가운 시선과 말들 속에 말하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누군가를 살리려 애썼던 구조자들, 이태원이 삶의 터전인 지역주민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겪은 피해는 구체적으로 일상과 밀착되었지만 실질적 지원은 부재했다.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추모와 애도의 시간은 정부에 의해 철저히 부정당했다. 일방적인 국가 애도 기간은 참사 피해와 연결된 사람의 얼굴을, 슬픔의 실체를 지워버렸다. 참사의 피해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관련된 문제이며 우리 사회에 내포된 모순의 결과라는 것을 연결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떠한 사건과 사

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만이 남았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부재하다는 사실은 내 삶의 반경을 넘나드는 다른 곳을 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0월 29일의 기억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묻고 있다.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재난과 참사가 일상이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생명, 존엄,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남겨야 하는가. 10월 29일을 경험한 우리는, 사회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2.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리하며: 사라진 국가, 박탈된 권리

10.29 이태원 참사는 어쩌다 일어난 불운이 아니다. 수많은 재난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히려 국가의 무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10월 29일 밤, 국가는 없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이 159명이라는 생명이 사라진 참사로 드러났다. 희생자를 찾기 위해 병원 응급실, 원호로 다목적 체육관, 한남동 주민센터를 오가던 밤, 재난참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국가를 확인했다. 희생자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 존엄도 지킬 수 없었다. 국가가 부재한 순간 경험했던 혼란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참사에 대한 의문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둘째,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외면당했다. 참사 이후 희생자의 시신 인도 과정에서 존엄을 지킬 수 없었다. 유가족은 온전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빼앗겼다. 참사의 발생 원인과 과정, 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도 없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결도 철저히 차단당했다.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 등 참사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없었다. 참사 이후 인간다운 삶을 이어가기 위한 권리보장과 생존을 위한 지원도 전무했다.

셋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책임을 묻는 과정도 부재했다. 어렵사리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아랫선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났다. 이후 112 신고 기록 조작, 재난 통신망 기록 폐기 등 참사의 흔적을 바꾸고 지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외침은 오히려 침묵을 강요당했다.

넷째, 추모와 애도를 부정당했다. 일방적인 국가 애도 기간은 애도의 실체를 가려버렸다. 영정과 위패 없이 협소하게 한정된 기간으로 진행된 합동분향소는 누구를, 무엇을 위한 추모인지 불분명했다. 이후 어렵사리 설치된 시민분향소 역시도 지속적인 행정대집행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다섯째, 참사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사실을 겪어야 했고 참사의 트라우마는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아닌 그들이 '왜 그곳에 갔는가'라는 책임추궁뿐이었다.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은 2차 피해를 확산시켰다.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조치는 찾을 수 없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10월 29일 그 밤에 머물러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이하 인권실태조사단)은 참사와 연결된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보고서는 그들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참사의 피해와 인권침해 현실을 마주했다. 그렇게 인권실태조사단은 10월 29일 밤 국가는 없었음을, 그로 인해 참사의 피해는 더욱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보고서가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의 배경

인권실태조사단은 국가의 무책임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어떻게 체계화되었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보기로 했다. 참사와 연결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이하 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으로부터 나왔다.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참사와 연결된 이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해왔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친척, 지인, 친구,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생존자, 당일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구조자, 이태원 지역주민 등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사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규정한 피해자의 범위는 너무 협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참사를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태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 하나였다. 이태원은 술, 놀이, 문화, 여가를 즐기는 자유로운 곳이며 이주민,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다양성의 공간이었다. 유희, 휴식과 즐거움은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돈과 성공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문화는 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태원이란 공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여기서 기인했다. 헬러윈 축제 역시 마찬가지다. '서양에서 들어온 귀신문화'쯤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과 지자체, 마을별로 축제가 열리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자유로운 다양성의 공간 이태

원에 헬러윈 축제가 정착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었다. 이태원을 상징하는 축제로 해마다 수만의 인파가 찾았다. 축제 문화 속에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넘쳤다. 2022년 10월 29일 헬러윈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던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술과 놀이가 벌어지는 축제, 혼잡한 인파속에 벌어질 범죄의 가능성만 우선에 두었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은 10월 29일 마약 수사에만 집중하고, 혼잡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이 많을 줄 알면서 왜 그곳에 갔는가' 라는 질타와 '그 곳을 찾았던'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무분별하게 축제를 즐기다 사고를 당했다'라는 악의적인 여론이 재생산되었다. '놀다가 죽은'이라는 낙인과 차별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들이 진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태원이라는 공간, 헬러윈 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결국 참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결되고자 했던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참사는 10월 29일 밤에서 멈추지 않았다. 참사의 피해는 다층적이고 다양했지만 드러나는 이야기는 일부였다.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드러나지 못하는 이야기들의 반경과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미완일 수밖에 없다.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듣지 못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난과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국가의 부재를 확인한다. 진실을 찾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늘 피해자들의 몫이었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처와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 안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을 갱신하며 살아간다. 안전한 사회가 지연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가 미뤄지는 것의 다름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재난참사에서 국가의 역할, 인권, 피해자 권리의 중요성을 드러낼 것이다. 새롭게 쓰는 보고서이지만 수많은 재난참사 과정에서 반복된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비통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우리를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로 안내할 열쇠말이기 때문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길을 찾는 과정의 기록이다. 그 여정에서 인권, 생명, 존엄,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말하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구성

1) 조사단의 구성

인권실태조사단은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

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실태조사단은 (1) 10.29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2)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행해졌던 인권침해 문제를 드러내고, (3) 사회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인권실태조사단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김용균재단 셴, 다산인권센터 라이언, 랄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TF 정지민, 서울인권영화제 고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영희,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안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최규진 총 10개 단체의 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비수도권 유가족 실태조사에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구파란이 참여했다. 심층면접조사를 정리하고 녹취록을 해제하는 과정에는 변정필 활동가가 함께해주었다. 10.29 이태원 인권실태 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심층면접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험을 나눠준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준 희생자 유가족과 지인,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 등 참여한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2) 조사 진행 방식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 심층 면접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은 언론 기사, 논문, 책 등을 참고하였다. 인권실태조사단의 활동가들이 조사자로 참여했다. 심층 면접은 참사 직후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 희생자 지인 등을 주로 심층면접 했다. 2023년 3월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연결된 이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었다. 2022년 12월부터 진행한 심층 면접은 실태조사 사전 준비를 위한 과정이었고, 실제 본 심층면접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전 준비를 위한 심층 인터뷰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분석하였다.

3)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참여자 그룹

우리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양한 그룹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권실태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는 희생자 유가족 13명과 지인 1명, 생존자 5명, 지역주민 4명, 구조자 2명으로 25명이었으며, 추가로 이번 참사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반복되는 참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난 소방 공무원 1명을 더해 총 26명을 인터뷰했다.

A	112최초신고자, 지역주민
B	지역주민(상인)
C	지역주민(상인)
D	지역주민(상인)

E	생존자
F	생존자
G	생존자
H	생존자
I	희생자 지인
J	구조자
K	구조자
L	비수도권 유가족
M	유가족
N	희생자 지인/생존자
O	비수도권 유가족
P	유가족
Q	비수도권 유가족
R	유가족
S	유가족
T	40대 희생자의 유가족
U	10대 희생자의 유가족
V	유가족
W	40대 희생자의 유가족
X	유가족/생존자
Y	유가족
Z	소방 공무원

첫 번째 그룹은 참사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주변인이다. 희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희생자의 수도권 거주 유가족은 희생자 부모(4명)와 형제·자매(2명)로 총 6명이 인터뷰에 참여했고 ‘유가족’으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고려되어야 할 것은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는 연령과 거주지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인터뷰에는 비수도권 거주 유가족(3명), 10대·40대 희생자의 유가족(3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각 ‘유가족(비수도권)’, ‘유가족(10대 희생자)’, ‘유가족(40대 희생자)’로 표기하였다. 유가족 중 참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가족(1명)도 조사에 함께했다. 희생자의 지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참사의 흔적은 법률상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지인 등 광범위하게 남겨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총 15명의 유가족 및 지인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두 번째 그룹은 생존자(5명)로 참사에서 생존한 이들이다. 참사의 현장에서 지인의 마지막을 지켜본 F, N,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던 G, H, 그리고 E가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참사 생존자들의 현재와 처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그룹은 지역주민(4명)으로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이다. 참사 당일 위험을 감지해 112 최초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이들이었다. 참사 현장 부근이었던 세계음식문화 거리의 상인과 참사 현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을 나누어 조사했다. 피해의 규모와 범위, 지역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네 번째 그룹은 구조자(2명)로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시민들이다. 참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 애썼지만, 참사 이후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사회가 주목하지 못했다. 구조자들 역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인권의 당사자이다.

4)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총 6개의 장과 별첨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장은 이 보고서의 서론으로, 10.29 이태원 참사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리한 이유와 보고서 안내 등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II 장부터는 보고서의 본문에 해당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어떠한 권리가 박탈되었는지 권리 목록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존엄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지원에 대한 권리, 애도에 대한 권리로 구성했다.

1.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에서는 재난참사 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보장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에 대해 정리하였다.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 구조받을 권리, 생명과 안전은 뒷전, 통제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시민들이라는 목차로 구분했다.

-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는 이태원과 헬러윈 축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왜곡된 인식과 예방 및 안전대책 미흡이 어떻게 참사로 이어졌는지 정리했다. 구조받을 권리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느장 대응으로 구조가 지연 되었던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들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결국 159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2.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인권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재난참사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 인간 존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존엄에 대한 권리는 존엄을 지킬 권리와 유해 및 유산의 권리로 구성했다.

- 존엄을 지킬 권리에서는 뒤늦은 시신수습과 신원확인, 마약수사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어떻게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 존엄이 지켜지지 못했는지 정리했다.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참사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장했다. 존엄한 일상을 보장 받지 못한 결과 159번째 희생자가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해 및 유산에 대한 권리는 죽음 이후의 유해, 남겨진 유품과 기억 모두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유해를 찾기 위해 헤매이던 시간과 일방적인 부검제안, 유품 인도 과정에서 부재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 진실에 대한 권리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참사의 원인과 진행, 이후 책임을 포함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이며,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피해자들의 참여권 등을 포괄한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진실규명에 대한 권리로 구분했다.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서는 참사 초기 정보 제공의 부재가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했는지 정리했다. 정부의 선별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제공과 참사 책임 규명 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결국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했지만 과정은 더뎠고 책임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진실규명에 대한 권리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온전한 진실과 기억을 남기기 위한 시작이다. 특수부 수사, 국정조사 등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미흡했다. 결국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4.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시급성, 보편성, 지속성, 소통과 참여의 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당장의 피해에 대한 시급하고 차별없는 지원, 이후 지속될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한 체계적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피해자들의 소통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심리지원,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로 정리했다.

- 의료·심리지원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의 과정과 함께가야 함을 강조했다. 진실 회복이 없는 일방적인 지원은 피해자들을 병리화하고 개별적 치료로 환원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의료·심리지원은 의료와 심리지원으로 나누어 접근했다. 심리지원은 재난참사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세심한 접근과 피해자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지원은 기한과 내용이 한정적인 문제를 짚었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학업, 직업, 경제활동 등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외면한 정부의 문제점을 짚었다.

5. 애도와 연대의 권리는 참사의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이 장에서는 정부에 의해 어떻게 권리가 박탈되었는지 정부의 일방적 애도의 문제점, 차별없이 애도받고 애도할 수 있는 권리, 혐오·폭력을 방지하고 조장한 정부, 연대의 권리 침해로 구분했다.

-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유가족과 어떤 소통도 없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배제하고 희생자를 온전하게 애도하지 못하게 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유가족이 결성되고 녹사평과 서울 시청 앞 분향소가 설치되며 사회적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누구나 차별없이 애도받고 애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참사 직후 이어진 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근거없는 비난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희생자와 연결된 다양한 관계에 있는 모두가 차별 없이 애도 할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와 혐오표현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혐오·폭력을 방지,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연대의 권리 침해에서는 정부가 유가족의 모이고 말할 권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드러냈다.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등이 서로 연결되고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와 서로의 연결이 만든 위로와 회복,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III장 피해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는 참사 피해자의 정의와 각 피해자별 인권 침해 상황을 정리했다.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는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 희생자와 연결된 이들,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 참사 현장 수습에 참여한 구조자, 이태원 인근에 거주하거나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으로 정의했다. 피해자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분류했지만 생존자이자 유가족 구조자이자 지역주민과 같이 피해의 경험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참사의 피해는 다층적이고 다양했지만 사회에 드러나는 이야기는 일부였다. 아직 연결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해의 반경은 더 넓고 깊을 것이라 예상된다.

앞선 II장에서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가 박탈 되었는지 정리했다면 III장에서는 각각의 피해자가 겪

있던 구체적인 경험을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1. 희생자와 유가족, 2. 생존자, 3. 구조자, 4. 지역주민(상인) 순으로 정리했다.

Ⅳ장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정리했다. Ⅱ장에서 정부로 부재로 인해 박탈된 권리를,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자들별 인권침해 상황을 정리했다면 Ⅳ장에서는 이를 보장할 의무와 책임 주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했는지 중심으로 서술했다. 크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무,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책무, 적절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보장할 책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무, 추모와 애도를 보장할 책무로 구성하였다.

1.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무에서는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린 문제점을 짚었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정부의 안전관리대책과 위험신고에 대한 단일한 대처가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미흡한 초기 응급대응과 현장대응이 참사의 피해를 확산 시켰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책무에서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희생자의 존엄을 보장할 책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 책임의 중요성을, 진실에 대한 책무에서는 피해자의 알권리,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짚었다.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에서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 방치하는 모순적 태도를 정리했다. 참사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책임을 규명하고 사죄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3. 적절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는 재난참사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참사의 피해만으로 이미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한 피해자들에게 배제없이 평등하게, 즉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한 지원과 사회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야 한다. 참사의 발생은 10월 29일이지만 연결된 피해의 마지막은 알 수 없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거나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를 재난참사 해결의 주체로 보지 못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이 중요한 권리임을 사회적으로 강조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무에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참사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닌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응이었다. 결국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진상규명은 유가족의 몫이 되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유가족의 노력에 정치인들은 '재난 정쟁화', '과잉입법' 등 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진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다.

5. 추모와 애도를 보장할 책무에서는 재난참사에 대한 사회적 애도와 기억해야 할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정리했다. 추모와 애도, 연대의 공간으로서 합동분향소의 의미와 추모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서술했다.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참사가 남긴 의미를 후세대에 남기는 과정이기도 하다. 추모와 애도는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추모와 애도를 이어가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 모이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도, 유가족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았다.

V장에서는 사회의 책무를 담았다. 재난참사는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론 및 미디어의 책무와 사회구성원의 책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 언론 및 미디어의 책무에서는 재난참사마다 반복된 언론의 과열, 경쟁보도가 어떻게 차별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했는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살펴본다. 언론 및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짚었다.

2. 사회구성원의 책임에서는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연대와 공감의 필요성,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해야 할 책임에 대해 서술했다.

VI장은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으로 국가가 해왔던 조치들이 어떻게 참사로 이어졌는지, 왜 피해자의 권리박탈로 귀결되었는지 정리했다. 그리고 재난참사에서 필요한 인권의 원칙 1)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존중 원칙, 2) 보편적 권리 주체들의 자유·평등·연대 보장의 원칙, 3)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를 통한 인권 증진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난참사에서 인권의 원칙을 통한 접근, 사람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II.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II.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중요한 이유

재난참사는 그 자체만으로 사회에 큰 흔적을 남긴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상실을 경험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때문이다. 재난참사는 누군가의 불운이 아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렇기에 진실을 규명하고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숙제이기도 하다. 재난참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재난참사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그 양상은 복잡하고 해결 과정 역시 그 려하다. 사람 중심,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재난참사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마주친 사회적 모순과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해나갈 때 우리는 안전한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 피해자들을 단지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혜적 관점의 지원으로 귀결되거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 만든다. 유엔의 피해자 권리장전 및 국제 규범 등은 피해자 권리의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피해자는 정의, 진실,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수많은 재난참사 피해자들 역시, 재난참사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도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며 시혜적인 공급자 중심의 피해지원을 사람·인권·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¹⁾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는 없었다. 오히려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모습은 ‘왜 그곳에 갔냐는 힐난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이 장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외면해왔는지, 그것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고립시켜 왔는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려고 한다.

1) 유해정, 「이슈-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 '피해자 권리'로 참사 바라보기」, 『월간 참여사회』, 2022.11.30

1.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닌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며, 다른 기본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안전을 권리로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열망을 높여왔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해야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을 ‘위험’이라고 할지에 대한 것은 위험을 판단하는 방식,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에 대한 잘못된 인지는 엉뚱한 대처로 빠지고, 관료적인 대응방식으로 매몰된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을 통제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며 재난을 반복되게 한다. 이것은 올바른 해결책일 수 없다.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과정은 보호를 빌미로 국가가 사회구성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하고, 재난 피해자들이 능동적인 권리주체임을 견지해야 한다.

안전할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는 안전할 권리를 보장할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이다. 안전한 상태란 위험이 없는,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안에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안전이란 잠재 위험이 있더라도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안전은 끊임없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때 안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일 수밖에 없다.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공간에서든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때문에 안전한 상태를 만든다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개인단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며, 따라서 개인의 책임일 수 없다. 또한 안전할 권리는 인간 존엄에 기초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이므로 국가는 대상이 누구든, 무엇을 하고 있었든, 어디에 있었든 무관하게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²⁾

2) 2004년 터키에서 일곱 살의 학생이 귀가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심한 눈보라로 수업이 일찍 끝났는데 스쿨버스가 미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첫 핼러윈을 맞
아 사람이 충분히 많이 모일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운집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스
스로의 잘못을 축소하고자 정부는 참사 직후 ‘주최 없는 행사에 안전매뉴얼이 없다’며 책임을 회
피³⁾했고, ‘참사’가 아닌 ‘사고’로,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표현⁴⁾했다.

둘째,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안전한 상태를 위해 국가는
언제나 상황을 예측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고, 어떤 상황
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예방조치를 했고, 무엇이 부족했으며, 어떻게 참사 대응 시스템
을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로부터 진실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일선 실무자, 심지어
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 또한 재난의 피상적 원인 뒤에 숨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
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부는 참사 발생 직전 수차례의 112 및 119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집회통제와 마약수사에만 열을 올렸다. 159명
의 생명을 한순간에 잃게 된 원인은 많은 사람이 밀집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재난대응시스템
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안전할 권리의 주체인 사회구성원 모두는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안전할 권리가 있는 이들은 누구나 국
가에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 구조할 것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상황
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있을 권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안정할 권
리가 있다.

처 도착하지 못하고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음날 동산한 채로 발견된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터키 정부가 생명권에 대
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신생아가 출생
직후 호흡곤란을 겪자 부모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몇 차례 이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의무 위
반이라고 판단했다. ‘병원 상호간 협력 부족, 신생아 센터 내 장비의 불충분, 응급의료검사의 부재라는 세 가지 상황이 이이를 사
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때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은 국가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했다. 아이는 호흡곤란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응급치료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한 점”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김
성진,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 의무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2017)

3) 『정부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41종인데…‘다중인파 사고’는 부재』, 『한겨레』, 2022.11.4.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5800.html>)

4) 『“이태원 ‘사고’ 아닌 ‘참사’가 맞다”…인권위원장의 쓴소리』, 『한겨레』, 2022.11.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5462.html)

그러나 이번 참사 당시 국가는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경찰조사를 우선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희생자와 가족/지인을 바로 만나지 못하게 막았고, 휴대폰 등 소지품을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바로 인계하지 않았다. 구조된 피해자의 치료를 최우선하지도 않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체육관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참사현장과 멀리 떨어진 병원들로 흩뜨려 이송했다.

참사를 수습할 수단과 권력을 가진 국가는 그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했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간데없고, 통제권력으로서의 국가만 존재했다.

권리의 주체로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기 위해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 위협에 처했을 때 구조 받을 권리,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물리적·정신적 상황 등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피해자들은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난채, 이와 같은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했다.

1)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

이태원은 평소에도 주말이 되면 사람이 많았지만 헬러윈이 다가오면 훨씬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곳이다. 토요일인 2022년 10월 29일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 예상되었다. 헬러윈 직전의 주말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등의 제한이 풀린 첫 해였기에 더욱 그러했다. 실제로 하루 전인 28일 금요일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5만 9천 명으로 지난 5년간 이용객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⁵⁾

당일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 역시 이전에도 사람으로 가득했던 이태원거리를 기억하고 있고, 경찰이 배치되어 흐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태원 신호등을 건너서 이태원 1, 2번 출구 쪽으로 가서 이제 해밀턴 호텔 앞으로 지나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사람이 너무 많긴 했는데 원래 많았으니까, 원래, 원래 그 정도였어요. 지하철 앞은. 그래서 그냥 이려고 이제 해밀턴 앞을 지나서 그 해밀턴 동쪽 골목, 그러니까 사고 난 데는 서쪽 골목이면, 반대쪽 동쪽 골목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메인 스트리트란 말이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끝으로 가는 게 보통의 행진이에요, 이

5) 「이태원 참사, 부재의 시간」, 『뉴스타파』, 2022.11. (https://pages.newstapa.org/n2211_timeline/)

태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코스튬 한 사람들이 서로서로 사진 찍고 한 게 보통 몇 년간의 이태원, 원래 이태원이었던 말이에요.

생존자 G

원래 토요일이 제일 많은데 금요일도 예상만큼 엄청 많았어요. 그때도 길을 지나다니는 거 자체가 힘들 정도로 많았고. 오랜만의 할로윈이라 내 지인들도 구경왔는데 뒷길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려 안 가곤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 소방관에게 사람이 많을테니 지원을 해주라고. 우리 주관이 아니고 코로나 전에는 아주 루틴하게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도 큰 사고가 없었던 거. 그때도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40분이 걸렸죠. (중략) 나름 우리로서는 준비를 했는데 매년 배치되었던 경찰이 없어 당황했어요.

지역주민(상인) C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몇 년 동안 자주 계속 봤기도 했지만 원래가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몰카도 되게 많고 방송 촬영하는 어그로꾼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경찰들이 항상 제 눈에 띄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눈에 띄고 그 사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옆에 경찰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그 장면들을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날은 진짜 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던 삼거리인가 삼거리에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가 본 경찰의 다고.

생존자 G

왜 인파 관리를 하지 않았냐는게 그게 제일이고 그리고 생존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주변에 없었대요. 그냥 인파 관리 하는 경찰, 경찰복을 입은 사람 자체가 없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경찰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모순인 게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몇 십 명, 몇 백 명의 경찰을 배치를 했으면 그 이유가 9시 10시에 쏟아져 나오는 인파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처음으로 거리두기 해제 한 그 해였는데 두 배 세 배의 인파 관리에 그걸 좀 중점을 두고 좀 대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없었나...

유가족 Y

관련기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측이 대책마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는 다중인파의 위험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태원 헬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었으나 이 보고서는 무시되었고 용산서는 정보관 23명을 참사 당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장소에 모두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역시

용산서의 보고서 및 서울경찰청 자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마약 등 범죄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전전날 특수본도 간담회를, 용산구청도, 파출소도 역장도 내가 알기로는 경찰,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약단속반이 배포를 부탁하는 간담회였어요. 성범죄 관련이라든지. 그 간담회는 할로윈에 대해 구청은 쓰레기처리 담당자만 나왔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그것뿐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왔듯이. 우리도 구청도 경찰도 다 자료가 있었을거예요. 매번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

지역주민(상인) B

이는 사회구성원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 장소가 아니라 집회·시위 장소에 경찰병력을 우선배치한 것은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리와 통제를 우선시하는 국가의 태도를 보여준다.

국가에게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통제해야 할 공간일 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관련 범죄 소탕을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10월초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할러윈을 앞두고 인파관리보다는 마약범죄 단속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웠다. 서울경찰청의 <할러윈 데이 대비 마약류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 (2022.10.28.) 문건⁶⁾을 보면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고 적혀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나 대응 계획은 보이지 않고 “마약류범죄 예방·단속”만이 명시되어 있다.

‘할러윈 데이 대비’ 마약류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 (10.28.)

□ 추진 배경

-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첫 할러윈 데이(10. 31.)를 맞아 클럽 등 유흥 밀집 지역 등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
- 축제에 참가한 젊은 층 및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유통 등 우려, 이태원·홍대 지역에 대한 마약류범죄 단속·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전개
 - * <언론 보도> “죽은 상권 오명 씻을 기회” VS “30만 인파에 마약 확산 될까”... 할러윈 앞둔 이태원 기대 우려 반반, (헤럴드경제, 10. 27.)

▲ 서울경찰청의 ‘할러윈 데이 대비’ 마약류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특별 형사활동 계획 (10.28.) 문건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2022년도 <이태원 할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 보고 서>의 세부계획에서도 인파 관리가 아닌 “불법·무질서 엄정 대응”을 기조로 하고 있다⁷⁾. 실제로

6) 경찰청, 국정조사 요구자료(1차), 진선미의원에 대한 12번 답변자료

7) 참고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2023.1. p.744)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22년 할러윈데이 대비 마약류 범죄 예방·단속 특별형사활동 외에 할러윈 시기 마약단속 경력 동원사항 없음.

도 예년 대비 40여명이나 경찰인원이 늘어났는데 이중 50명의 형사들이 마약류 단속 목적으로 투입되었고, 이태원 현장의 112 신고 처리에 배정된 파출소(지구대) 경찰은 단 32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교대근무 인원을 포함한 인원으로 20시까지의 주간근무 인원인 11명이 모든 112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 당일 정복 경찰의 배치 현황

기능	구분	임무·역할
교통기동대(20명)	정복	무단횡단·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흐름 관리
교통(6명)	정복	
생활안전(9명)	사복	모의총포·과다노출 등 생활질서 위반행위 단속
112(4명)	사복	관광특구연합회·지하철역사 등 협업, 현장상황 관리
외사(2명)	사복	외국인자율방범대·미군 헌병 합동 순찰
형사(50명)	사복	마약단속 등 범죄 예방(자서 25 / 타서 25명)
여성청소년(4명)	사복	성범죄·불법촬영 계도·단속
이태원파출소(32명)	정복	112신고 처리
관광경찰대(10명)	관광 경찰대복	외국인 민원 처리, 범죄예방 순찰 등
합계		137명

▲ 경찰청에서 국정조사 시 제출한 <당일 정복 경찰의 배치 현황> 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마약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마약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국가의 책임 방기하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이태원의 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로 남았다. 국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회구성원이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

2) 구조 받을 권리

국가가 다른 일에 집중하는 사이 참사 발생 초기 피해자들은 금방 상황이 해소되고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8시 34분 112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래 11건의 구조요청이 이어졌지만 21시 30분야 경찰기동대 20명이 투입되었고, 22시에 52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 소방 구조대는 22시 19분에 도착했으나 현장에 곧바로 접근할 수 없었다. 경찰과 소방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은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었다. 너무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구조대는 투입이 된 이후에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미 걸잡을 수 없게 심각해진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기도 했지만, 뒤늦게나마 투입된 인원 역시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신고했을 테니 금방 구조되겠지,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나이브하게 ‘빨리 용산에 가서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집에 가야지’, ‘운전하는데 종아리가 아픈데 운전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설마 부러지지는 않겠지’…… 얇은 숨만 계속 이렇게 몇 십 분 동안, 그리고 숨 쉬는 데만 집중했어요. 어떻게든 숨 쉬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그 와중에도 또 한 몇 분 뒤면 구조대가 오지 않을까, 한 10분이면, 20분 이면……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안 와요. 한참 후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소방관들이 왔대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근데 그러고도 한참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시간이 오래 느껴져서가 아니고 제가 진짜로 충분히 그걸 감안하고도 시간을 계산했을 때 30분은 기다렸어요. 갸 상태로.

생존자 G

다리 위에 누가 주물러준다고 막, 치마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여기 스티커 붙인다고 가슴도 막 풀어 헤쳐져 있고. 근데 제가 어떻게 추스릴 힘은 없고 말도 못하겠고 눈도 못 뜨겠고 의식만 잃지 말자 이 각오랄까? 그 생각 하나로 의식만 정말 붙잡고 귀만 열려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정말 한참 방치돼 있다가 드디어 구급차에 실렸는데 구급차 실리고 나서도 한참을 출발을 못 했어요. 한참을 출발을 못 했어요……○○병원으로 가기로 결정된 뒤에도 출발을 못 했어요. 정리가 안 돼서. 교통 정리가.

생존자 G

10시 50분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소방관 두어 명, 사복경찰 3~4명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시민과 상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이나 다른 분들은 연락을 받았어도 진입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선 길을 뚫는 게 목표였고, 직선도로가 있는데 한강진역 방향의 길을 트느라고 몇 친구들과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길 여는데도 20~30분 걸렸어요. 소방대원도 오고, 경찰도 오고 길 틈 사이로 구출하기 시작한게 11시 30분~12시 쯤. 너무 늦게 왔는데... 왜 그리 늦게 왔는지 몰랐지만 그 당시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차가 진입을 하거나 기계들이 빨리 왔으면 생명을 구했을텐데. 그런 판단이 덜되지 않았나...

지역주민(상인) B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경찰은 초기의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20시경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종료되었지만 집회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병력이 이태원에 재배치되지는 않았다. 또 22시 55분경 용산서 형사과에서 마약단속과 관련한 문자메시지가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등 참사 발생 직후까지도 마약단속에 집중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

그러는 사이 국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수많은 자발적인 구조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구조가 된 이후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재난의 상황에서 구조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즉시 치료받을 권리 역시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 때문에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를 놓치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갇혀 구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와중에 경찰은 상황 보고서를 조작하고 허위보고했다.⁸⁾ 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용산경찰서 김○○ 경사는 국정조사에서 정보과장·정보계장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계속 어떤 걸 잡아낼 때까지 계속 지키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방치를 해버린 거죠. 방치를 하는 바람에 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런 거를 다 겪어봤을 때, 결국은 마약 수사를 위한, 마약 수사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희생자들이)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라는 거가 제가 이제 결론으로 딱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가족 M

그간 우리사회는 슬한 사회적 참사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국가의 부재라는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 왔으나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며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제2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역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며 개선방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규정은 규정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생사의 기로에 있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함

8) 「이태원 참사 첫 신고 처리 조작 정황…서울청 압수수색」, 『KBS』, 2023.3.29.

(<https://v.daum.net/v/20230327213017809>)

「참사 도중 '상황보고서 조작'…대통령실에도 허위 보고」, 『KBS』, 2022.12.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7786>)

은 국가시스템에 닿지 못했다. 18시 34분부터 구조요청이 시작되었으나 서울경찰청장은 23시를 넘겨서 보고를 받았고, 경찰청장은 자정을 넘겨서야 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시 20분에야 보고를 받았다.

3) 생명과 안전은 뒷전, 통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시민들

구조와 수습의 전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였다. 뒷장에 나오지만 희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과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고, 휴대폰 등의 유품을 돌려받을 때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연되었다. 경찰의 조사는 취조와 같은 인상을 주며 배려 없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법률상 미성년자에게 보호자의 조력 등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유족의 동의 없이 시신에 대한 검안을 진행하고 이 유도 설명해 주지 않거나,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바로 옆에서 생명이 스러져 가는 것을 목도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안정과 치유는 고려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어딘가로 가려면 가고,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했고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 엄마 같은 경우는, ○△ 엄마 같은 경우 다 애들이 맥이 있었고, ○△엄마 같은 경우는 애가 앞에 있었잖아요. 내가(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하면서 경찰이 막았어요. 조사할 게 있다고 용산 경찰서 가 있으라고. 결국에는 애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6시간 뒤에나 찾았으니까.

유가족 R

(장례식장에서) 검사 한 분하고 또 형사 몇 분하고 또 아마 또 구청 관계 직원분인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경황이 없으니까 누구 누구라고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검사 포함해서 여섯 분 정도 오셔서 검사분이 지금 SNS상에 지금 마약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정황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부검을 해보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은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그리고 2차 가해다, 우리 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가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면 뭐 사기를 쳤냐 뭐 마약을 했냐, 우리는 안 한다고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그래서 알겠다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일단 그냥 그렇게 돌아갔고.

유가족 O

희생자들이 현장에서 사망했는지, 이동 중에 사망했는지, 병원에 도착해서 사망했는지, 생존 가능성은 없었는지, 참사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도 없었음.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시급하게 검안을 했고, 마약 이야기를 했으며, 유가족들의 의사 확인도 없이 분향소를 운영했는지 등에 대해 왜 아무런 설명이 없는지?

(국정조사 청문회 유가족 진술 중 발췌)

최근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태원 역장의 업무상 과실치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희생자를 비롯해 부상을 입었던 생존자들까지 450여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사전 동의 없이 사찰했다.⁹⁾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댔지만 교통카드 기록만이 아니라 입출금내역까지 들여다 보았다.

이태원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랑받아왔고, 핼러윈축제는 그런 특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날일뿐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태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집안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즐기거나 쉬기 위해 방문한 공간에서, 언제 어느 때건 일상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상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안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신뢰를 저버렸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수식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뽑아본다면 다양성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 최초의 모스크를 비롯해 여러 각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며, 외국인과 이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 성소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다름을 포용하고 낯섬을 꺼리지 않는 곳이기에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질적인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서 이태원을 상징하는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핼러윈에 저 역시 이태원에 놀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지러우면서도 동시에 여러 개성적인 모습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해방감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10월29일, 그날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올라왔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한겨레』에 연재된 “위로와 연대의 편지” 세 번째, 성소수자·피해자권리위원회 활동가 박한희의 편지 중 발췌)¹⁰⁾

9) 『영장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450명 계좌’ 살폈다』, 『JTBC』, 2023.3.20. (<https://v.daum.net/v/20230320201019996>)

10) 『“성소수자로 해방감 느낀 이태원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한겨레』, 2022.12.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3432.html)

2. 존엄에 대한 권리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윤리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인간의 존엄은 단지 추상적인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존엄은 권리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키고, 지켜져야 할 가치이자 약속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매 순간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참사의 순간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피해자들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너무 많은 순간 무너지는 존엄을 확인해야 했다.

1) 존엄을 지킬 권리

(1) 마지막 순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 애도를 보장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와 조건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재난참사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피해자들의 존엄은 더욱 중요하게 지켜져야 한다.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마지막 순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 남겨진 이들이 삶을 유지하고 회복과 치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는 재난참사에 대처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10월 29일, 반복된 구조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국가로 인해 158명의 삶이 사라졌다. 참사의 희생자가 된 이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었다. 이태원 참사는 우발적인 사고도, 범죄사고도 아닌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사회적 참사였다. 그러나 대규모 참사에 대한 인식과 그에 맞는 정부의 대응은 부재했다. 참사 희생자의 시신을 존엄하게 수습하고 가족에게 인도하는 과정도 없었다. 시신 수습은 뒤늦었으며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인계하는 시간은 더뎠다. 마약 수사 등을 이유로 부검을 권하고 희생자를 잠재적 범의자처럼 부당하게 대우했다.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한지, 어디서 어떻게 구조되었는지, 신원이 확인되고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조차 현재까지 의문투성이다.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존엄한 마지막을 침해한 것은 바로 국가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하여 희생자와 연결된 이들은 참사에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참사의 원인과 결과 대응 과정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참사 이후에도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며 사회적 관계망을 잃지 않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이며, 국가는 최대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을 인도받는 과정에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희생자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시신이 훼손된다며 막아선 경찰 때문에 마지막 순간 희생자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보내야 했다. 국가는 왜 시신이 참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들로 분산되었는지, 왜 희생자의 옷이 탈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남겨진 이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희생자는 마지막 순간 최소한의 존엄도, 유가족들은 마지막 애도의 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2) 존엄한 일상을 보장받을 권리

10.29 이태원 참사는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희생자와 유가족 및 당일 현장에서 생존한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참사의 피해자들은 충분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참사의 진실에 대한 회피, 책임을 전가한 일련의 과정으로 피해자들은 존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없었다.

10월 29일 당일 밤, 현장에 대한 유언비어와 탈의된 시신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자정 없이 인용하면서 참사의 책임을 헬러윈 축제를 즐긴 개인의 일탈로 초점을 맞췄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 혐오를 조장하는데 일조했다. 피해자들은 참사 초기 몸과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근거 없는 비난을 직면하게 되었다. 일례로 MBC는 “이태원에서 약이 돌았다는 말”¹¹⁾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참사 이후, 정부는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 책임으로 돌렸다. 심지어는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토끼 머리띠’ 유언비어를 따라 생존자들을 조사했다.¹²⁾ 참사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국가가 정당화하는 방식이었다. 참사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잠재적 범죄를 의심하는 국가의 대응은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생존자였던 이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정부와 사회의 대응이 빚어낸 죽음이었다.

2) 유해 및 유산에 대한 권리

유해 및 유산에 대한 권리는 죽음 이후의 유해, 그리고 남겨진 유품과 기억 모두가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는 재난참사 희생자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연결된 주변인과 또

11) 「“이태원 참사” 신중치 못한 보도들」, 『미디어오늘』, 2022.1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31>)

12) 「경찰, ‘토끼 머리띠’ 남성 무혐의…‘아보카도 오일 뿌린 각시탈’ 의혹엔 “당사자들 곧 조사”」, 『강원일보』, 2022.11.7.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10713394649300>)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 이후 세대에 남길 기억과 교훈에 깊이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이다. 재난참사 과정에서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키고, 남겨진 유산을 기억하는 것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참사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 구조될 권리가 있으며, 사망했다 하더라도 가족을 만날 권리가 있다. 희생자는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를 가지며, 희생자 가족은 국가와 사회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 책임에 관한 선언, 제네바 협약 등과 같은 국제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다.¹³⁾

(1) 희생자 신원 확인과 시신 인도 과정의 문제점

참사 당일 희생자의 가족들은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 원호로 다목적 체육관 등을 찾았다. 참사 당시 함께 있던 생존자를 통해 신원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현장에서 유가족임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실종신고를 하고 수 시간 기다린 끝에야 희생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제공도 부재했다. 공식적인 정보제공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들은 기자들을 통해 알음알음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시신 한 구씩 한 구씩 이제 이렇게 원호로 체육관에 넣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기자들이랑 막 잔뜩 와 있었고 저는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유가족들을 부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확인하고 여기로 쫓아온 거니까 그냥 신원 확인을 여기서 하면 된다고 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략)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계속 기자들이 와서 이제 오히려 정보를 줘요, 소스를. 기자들이 와서 지금 어느 병원으로 다시 이송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여기 다 여기 왔는데 또 무슨 병원으로 또 가냐고 여기 와서 여기서 유가족들 부르겠지 다시 병원을 왜 가냐 그러고 있었는데 한참 지난 이후에 하도 이제 그계(확인이) 계속 안 돼서 내가 아들보고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확인을 좀 해봐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가니까 이제 한남동 주민센터 거기에 2층에 센터를 만들어 뒀으니까 실종자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실종이 아니라 가족이 와 있고 확인을 했는데 무슨 실종이냐.

유가족 M

13) 416 인권실태조사단,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2016, p25

나는 우리 애 언제 보냐니까 신원확인이 끝나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제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중략)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3시 반부터는 대기했던 구급차에 시신이 하나씩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침대가 나와서, 이동하는 침대가 나와서, 구급차에 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봐도 시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 했더니 처음에는 옆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원확인하러 국과수로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별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는 거기 있다고 구급대원이 얘기했으니까, 개는 애는 예외일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3시 반이 넘어가니까 기자들이 자꾸 실종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실종신고하셔야 된대요. 이 번호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자꾸 알려주는데, 저는 “우리 애는 실종된 게 아니고 우리 애기는 여기 있어요.” 근데 자꾸 기자들이 “아니, 어머니 실종 신고를 해야 찾을 수 있대요.” 그러기에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그랬거든요.

유가족 L

희생자가 안치되어 있다는 병원에 찾아가면 유가족은 탈의된 상태인 희생자를 만날 수 있었다. 유가족들은 시신 훼손을 이유로 희생자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 연락을 받고 병원을 가는 도중 검사 일정상 일단 검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유가족도 있었다. 검찰이나 경찰이 무조건 부검을 해야 한다며 유가족에게 동의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소 18건의 부검 제안이 있었고, 마약을 이유로 부검을 제안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다.¹⁴⁾ 희생자의 시신을 만나기까지의 공백과 탈의된 채 만난 희생자의 시신, 일방적인 부검 제안 등은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 이제 안치소에서 다 빠지도 않아요. 아이를 다 빠지도 않고, 반만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더니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뿌리치고 가서 만졌더니, 그 관계자가 만지면 안 된다고, 시신 훼손된다고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정신 없는 와중에도 애가 짜증을 낸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유가족 L

내가 내 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죽은 걸 확인을 해보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그랬더니 왜 만져보려고 하느냐 ‘시신이 훼손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는 범죄자가

14)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한 유가족은 서울지역의 응급실에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부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유가족이 부검하지 않겠다고 하자 해당 경찰관은 ‘검사가 마약과 관련해서 부검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가족이 화를 내자 경찰관은 ‘자신이 검사에게 부검 의사가 없다고 전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마약·범죄 부검’ 언급한 검·경 또 있었다」, 『경향신문』, 2023. 1. 12.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121502001>)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참사를 당한 희생자인데, 난 부모고 내 아
이가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을 충분히 확인을 할 저한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었어요.

유가족 U

처음에 연락했던 사람과 달랐는데 경향도 없고 누군지 물어보고 사실 이런 것도 안 됐고, 언
제 오냐 도착 시간이 몇 시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전
화가 와서 어디쯤 왔냐 그래서 어디쯤 가고 있다. 근데 남편은 계속 운전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계속 통화를 했었고요.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중략) 오후 6시 44분경에 검사가 '다른
데를 가야 된다, 일정이 있다. 다른 사람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러면서 '양해를 구해주면 먼
저 검시를 하겠다. (중략) 가족들이 양해를 구해주면 하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도착하기
전에) 검시를 먼저 하겠다고, 유족이 동의를 해 주면.

유가족 W

이와 같은 신원확인 및 시신 인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경찰은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
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정은 '자연재해 등 사고성 사망'을 변사로 규정하고 있기에(제2조),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도 '변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당 훈령 제3조
는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이 원칙은 지
켜지지 않았기에 대해 국정조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¹⁵⁾

하지만 규칙의 일부 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지금의 규칙 하에서도 영문도 모른 채 경찰조사를 받고 나중에 변사라는 통지만을 받고 유가
족이 고통을 겪는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범죄혐의를 중심으로 한 부검
에 집중하지 않고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시 제도 및 부검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¹⁶⁾ 한편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재난 현장에서 사망한 이들을 수습하고 유족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디모트(DMO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국정조사 공청회에서 제시되었
다.¹⁷⁾ 희생자 신원확인 및 유해 인도 전 과정에서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

15) 「현장생중계 - 이태원 참사 청문회 ⑩」, 『YTN』, 2023. 1. 16.
https://www.ytn.co.kr/_ln/0301_202301061204444913

16) 「죽은자' 권리 외면하는 사회...법외관이 사라져간다」, 『메디게이트』, 2023. 3. 26.
<https://medigatenews.com/news/2321114194>

17) 미국에서 디모트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가 보였던 대처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디모트는 대규모
재난 현장 인근에 이동형 영안실을 마련한다. 그리고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곳에서 마무리된다. 재난 현장
에서 시신을 수습할 때부터 유족에게 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디모트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구멍뚫린 이태원 참사 수습, '디모트' 도입이 대안 될까」, 『시사IN』, 2023. 2. 10.

요하다.

(2) 유류품 인도 과정의 문제

예를 갖추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일은 희생자에 대한 존엄과 예우를 지키는 일이다. 시신 인도는 생애 마지막 존엄으로서 예우를 다해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희생자가 남긴 유품 역시 남은 이의 품으로 인도적으로 인계되어야 한다. 유품이 온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유가족에게 인도되는 것은 희생자의 권리이며, 소중한 이를 잃은 유가족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참사 초반 희생자는 참사의 피해보다 범죄 연루 가능성에 초점을 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시신의 인도와 유류품의 인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류품 인계가 지연되기도 했다. 부검을 위해 벗겨진 희생자의 옷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산경찰서로 찾아갔죠.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신원 확인이 됐냐, 했더니 안 됐대요. 자기네 들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핸드폰이라도 줘라. 우리 핸드폰이라도 줘라, 했더니 조사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너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변사자고 뭐... 사건에 무슨 연루가 됐기 때문에, 아니, 바깥에서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무슨 사건에 연루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해야겠다는 거야.

유가족 L

그러니까 어떤 소지품을 보관했던 곳에 가서는 이제 찾았는데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략)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못 찾으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는 어쨌든 병원에 간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가위로 잘랐거나 옷을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다른 분들 병원에 가셨다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비닐봉지나 이런 거에 다 모아 두셔가지고 보관하셨다가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 CCTV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경찰의 공문이 필요하대요. (중략) 처음에는 저희한테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경찰이 이제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CCTV를 보안 요원들이 다 확인을 했대요. 확인을 했는데 버렸대요.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유가족 Y

(3) 국가의 공백을 채운 손길들

국가의 공백은 시민의 손길로 채워졌다. 도로에 누운 희생자들 사이 생존자를 보호하고, 친구의 시신이 이송되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며 마지막을 지켜주기도 했다. 한 생존자는 의료진을 도와 희생자의 손과 다리를 모으고 다녔다.¹⁸⁾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을 위로하며 입관할 때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존엄을 빼앗긴 빈자리에 존엄을 채우는 손길의 주인은 경찰도, 정치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이었다. 그 빈자리가 빈자리로 남지 않도록 누군가는 노력하고 연대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체가 절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존엄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로에 나오다 보니깐 시신들이 누워있고 그리고 도로에서도 CPR하고 있었고. 근데 거기... 도로에서도 이수라장 이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랑 차도 섞여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시민들이 손을 잡고 인간으로 만드는 울타리 (질문자: 인간 띠로?) 네, 인간 울타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길 막고 있었거든요. 저도 같이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구조자 J

이제 그 남자들이 다른 여성분한테 저를 이렇게 맡기고 떠나갔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구급차 실릴 때까지 계속 봐주셨어요. 혹시 누가 심폐소생술 하러 오면 '아니다. 이 사람 의식이 있다.' 이려고.

생존자 G

18) 「긴급취재 이태원 참사」, 『PD수첩』, MBC, 2022. 11. 1.

3. 진실에 대한 권리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상황과 이유, 배경과 조건, 원인과 책임을 포함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다.¹⁹⁾ 진실에 대한 권리는 진상규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불러온 재난과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보의 취합과 공유를 요구하고 참여할 권리까지 포괄한다. 재난참사의 진실규명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기에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이기도 하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추모와 기억의 과정,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과 연결된다. 참사의 진실이 기억되어야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추모와 애도로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제대로 정보 제공을 받지도, 접근하지도 못했다. 일방적으로 참사를 처리하는 정부의 소통방식은 피해자들의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다.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몫이 되어야 했다. 정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모습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남겼다. 참사에 대한 진실 왜곡 역시 문제였다. 참사 초기 정부는 ‘이태원 참사’ 대신 ‘이태원 사고’로,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표현하고²⁰⁾ 주체가 없는 자발적 행사라며 피해자의 책임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졌다. 정부의 안전대책 부재보다 ‘그곳에 갔던’ 개인의 책임을 부각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온전히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진실을 묻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1)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1) 참사 초기 정보제공 부재

재난참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참사 현장과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신원과 상태를 가족과 지인 등이 최대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혼란과 불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사 초기 사건을 접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은 생사여부를 알기 위해 밤을 지새워야 했다.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알지 못한 혼란의 상황이 지속되었다. 피해자들이 이송된 병원에 대해 물었지만, 실종 신고를 한 후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참사 직후 희생자들은 이태원에서 원호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원호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또다시 수도권 각각의 병원으로 흩어져 이송되었다. 유가족들은 병

19) 416재단,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매뉴얼』(2021), 14p

20) 『“이태원 이미지 나빠질까 봐”…참사 대신 ‘사고’』, 『MBC 뉴스』, 2022. 11. 02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3253_35744.html

원 이송정보를 알지 못해 스스로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고 뒤늦게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다.

이게 빨리 정보들이 빨리 공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저희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12시간 뒤에서야 어디에 안치됐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됐죠.

유가족 S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찾는 이 인상착의랑 연락처를 써서 주면 연락이 닿을 수 있겠다는 말에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포스트잇에 써서 드렸고, 먼저 찾은 이들이 그 연락처에 상황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보들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겼고 기자들이 중간에 전해 주기도 했어요.

희생자 지인 I

그러면 (새벽)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거의 네 시간 반가량을 다목적 (체육관)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중략) 그러면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7시 5분에 용인 세브란스로 옮길 때 체온을 34.4도로 뚝 떨어뜨린 거 너 시간 전 최근 많이 잡아서 4시간 전에 사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목적에 있을 때는 분명히 호흡이 뛰고 있고 맥박이 뛰었지 않았나, 라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가) 45번이니까 최소 45명까지 다목적으로 갔다고 치면 그 상황에서 애들이 호흡이 있는지 맥박은 뛰고 있는지 그 정도 기본적으로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의심이 들죠.

유가족 O

참사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다. 피해자들은 참사 초기 정보의 공백으로 인해 ‘어떻게, 왜 이송되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 시신 이송과 신원 확인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도 부재했다. 공무원 1:1 매칭을 통해 장례와 피해자 지원을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원활한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식장에 찾아왔었어요. 팀장이란 분이, 그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연락이 한 번 왔는데 그 연락 한 번 온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이 안 왔거든요. 추후 상태에 대해서나 이런 거는(물거나 확인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그냥 연기해주고 끝이었고 의료비도 시청에서 달랑 문서 하나 사진으로 딱 전송한 거 외에는 따로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있다고 말씀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딱히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그냥 문서 하나 사진으로 달랑 보낸 게 끝이었고. 공무원 일대일 전담 그것도 장례식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유가족 V

(2)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문제

정보의 공유는 정부가 선별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이나 정보전달 체계를 갖춰놓는 것 역시 중요하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재난참사 해결에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참사 이후 10월 30일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31일에서야 첫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중대본이 종료된 12월 2일까지 총 23회 브리핑이 이루어졌다. 참사 피해 진행, 수사 상황, 안전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중대본의 브리핑은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수사 진척 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될 필요가 있었다. 유가족, 생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대본의 브리핑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얻는 중요한 창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본의 브리핑은 책임을 피하거나 원론에서만 맴돈다는 비판과 구체적 답변이 부족한 맹탕 브리핑이라는 지적이 있었다.²¹⁾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수사 과정 전달,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과정 역시 부재했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진 진실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은 불신과 의혹을 가중시켰다.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청문회를 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저희에게 지금 수사가 돼서 상황이, 어느 어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어떤 증거물이 나왔고 이런 브리핑을 저희는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그러니 우리는 궁금증이 계속 쌓이는 거지. 그리고 계속 추측을 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까지라도 확실하게 밝혀진 게 있다면 그냥 투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도 '아, 거기까지는 조사가 됐구나'라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 하나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이 생기고.

유가족 U

21) 「논란의 33일...이태원 참사 중대본, 오늘 저녁 7시 문 닫는다」, 『한겨레』, 2022.12.2.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9937.html>)

(3) 정보에 접근할 권리

정보제공의 부재로 인해 참사 이후 의혹들이 쌓여갔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도 전무 다. 답답한 피해자들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했지만, 과정은 더디고 책임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²²⁾

이제 오빠가 어떻게 어디서 몇 시에 정확히 사망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때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때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 했고 처음. 시작했을 때 구급일지 요청을 드렸거든요. 구급일지 요청을 드렸고 이제 신청하고 다음날 소방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정리가 대조가 안 돼서 대조 작업이 안 돼서 못 준다. 거의 저... (참사 이후) 한 달 (되기) 전 날이었으니까 한 27일... 28일쯤일 거예요. 대조가 안 돼서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조가 안 됐냐 라고 하니깐, 이제 소방청에 서는 일주일 전에 경찰청에 명단 신청을 했고 지금 처리 중이라, 처리 중이라고 아직 명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좀 어이없었죠.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왜 이제서야 신청을 한 거고 요청을 한 거냐, 왜 아직까지 대조가 안 된 거냐,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하니깐, 그냥 죄송하다는 답변밖에 못 들었고, 그럼 언제쯤 받을 수 있냐라고 하니깐 그럼 대조되는 대로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공개 신청하고 나서 이제 2주가 넘어서야 이제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 첫 구급 일지를.

유가족 V

2) 진실규명에 대한 권리

참사 당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피해자들을 진실규명의 길로 이끌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추모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추모와 애도는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얼마나 존엄하게 여기는지와 연결되며, 참사의 진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와도 관계되어 있다.

참사 이후 경찰 특수본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특수본 수사는 최대한 ‘아랫선’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끝이났다. 국정조사는 여야의 대립으로 기간도 축소되었고 결국에는 야3당의 채택으로 반쪽짜리 마무리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예방 계획 부재,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냈지만,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책임자 정부의 사과는 부재했다. 결국 유가족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를 촉구했다.

22) 『“오빠가 어떤 사고당했는지, 영원히 모를까 두렵습니다”』, 『프레시안』, 2023.1.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1310202951459>)

참사 이후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단 한차례 공청회 형식으로 피해자들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피해자들에게는 마지막 순서에 단 한번의 발언기회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품고 있던 의문을 제대로 해소할 수 없었다.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솔직히 불만이 많았던 게 뭐냐면 그 현장에 있었던 부모도 있었고 솔직히 많았어요. 그 사고 소식을 듣고 그 현장으로 갔던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유가족의 얘기를 먼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들어보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맨 마지막이었죠. 순서가 모든 게 다 끝나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가족 U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이 옷가지를 쫓겨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팬티까지 그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임의대로 벗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비닐봉투에 어디에 받아온 거를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검안하기 전에 저희는 그 옷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안하기 전에 벗겨졌다는 건 검안검사가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왜 아이가 나신으로 왔고 12시간 동안 신원조회가 안 됐고 우리 ○○이는 분명히 신원확인을 해줄 구급대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서류도 있었는데 애가 왜 신원확인 안 되고 변사자가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 걸 안 밝히고 그런 거를... 우리 처음에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유가족을 불러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수습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불러서 어떤 걸 궁금해 하는 거고 어떤 걸 조사해야 되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반대로 한 거잖아요.

유가족 L

피해자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특수본의 수사와 국정조사는 피해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112 최초 신고를 조작하고, 참사와 관련한 재난통신망의 기록을 폐기했다는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다시 한 번,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안전한 사회가 쓰여지고 있다.

4.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실태조사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야기한다. 피해자들은 개인이 맺고 있던 모든 인적 관계는 물론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 경제적 상황, 시민으로서 사회와 맺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감당해야 했다. 급작스럽게 맞닥뜨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유와 평등, 생명권 등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다. 이러한 사후 책무라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피해자들이 당장의 안녕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송두리째 뒤흔들린 삶을 장기적으로 조금씩이나마 복원할 수 있다.

1) 지원의 원칙들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은 기계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한다고 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시급성이다. 참사의 피해는 즉각적이며, 순식간에 피해자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지원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지연될수록 참사의 피해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둘째, 보편성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는 참사 당시 현장에 머물렀던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태원이라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또한 이 참혹함을 지켜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고, 불합리한 선별 요건을 제시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

셋째, 지속성이다. 참사의 피해는 정해진 기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수년 후 참사의 상흔이 드러날 수 있고, 어떤 피해는 장기적으로 점차 심화될 수 있다. 참사의 피해는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평생 전체에 걸쳐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기간은 한정적이었다. 의료비 지원 기간은 참사 이후 6개월, 이후 심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상속과 관련된 법률·행정 지원 또한 마찬가지로 참사 6개월까지를 ‘마감’ 기한으로 설정해놓았다. 6개월의 문턱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멈추게 하는 정부의 지원책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행정적 편의를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5년 뒤, 10년 뒤에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돼서 지원이 끊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가서 만약에 정신적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몇 년 후에를 바라봤을 때 당장 그걸로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후유증이 남는다면 그것도 걱정되고…….

생존자 G

넷째, 소통과 참여이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참여 없이 하달식으로 제공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없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낳을 뿐이다. 모든 참사는 정형화할 수 없는 구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사회의 참사에 대한 섬세한 대응에 따라 참사의 피해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목소리를 안 듣잖아요. 일방적인 통행이잖아요. 지금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치우고, 1차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뭘 원하는지를 듣지 않으면서 뭘 해주는 건데요. 그러잖아요. 뭐가 힘든지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걸... 저희가 ‘왜’란 얘기를 하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지 거기서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지 않잖아요. 본인들 책임을 인정 안 하니깐...

유가족 W

2) 의료·심리지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심리지원은 참사피해로부터 회복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참사 피해자를 환대하지 않는 사회환경에서는 피해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기 쉽다. 그럴 때일수록 국가가 나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와 심리상담행위를 형식상 제공했다고 해서 저절로 피해자들의 건강할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지원과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이 부재한 상태에서 의료·심리지원이 강조되는 것은 참사 피해자를 병리화하고 참사의 해결을 ‘개별적 치료’로 환원시킬 수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와 사회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할 참사의 해결을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연결하는 과정은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켰다. 이는 진정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이 참사가 침해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재난참사 과정에서 의료·심리지원은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진실규명,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할 권리의 침해는 참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참사와 그 경과를 지켜본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따라서 심리적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건강의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장기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는 병리학의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생색내기용에 그치지 않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대상 및 지원 범위 측면에서 포괄적인 의료 심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심리지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은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심리검사와 지원이 아니라 참사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섬세한 접근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한 심리 지원을 경험한 여러 피해자들은 심리적 지지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이 해소되기보다 조사받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여러 명의 내담자를 동시에 상담하며 같은 질문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심리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심리 지원을 신청했으나 상담이 우선 전화로 진행되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상담 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는 피해자들도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전문성에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저기 윗 센터로, 학교를 좀 와서 해주면 안 되냐? 아니면 전화로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많은 방법으로 해주겠어요'. 해놓고선 정작 A시로 오라는 거예요. B시에서 A시까지23). 그래서 아빠랑 아들이랑 둘이 갔어요. 약속은 해놓은 거니까 갔어요. 갔더니 처음에는 정신병원에서 하더라고요.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둘을 똑같이 들어가게 해서, 둘이 똑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똑같은 말, 아빠랑 요즘 어떠냐? 기분은 어떠냐? 아들한테도 어떠냐? 기분은 어떠냐? 잠은 잘 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와서 옆에 있는 상담센터를 심리상담센터를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도 또 둘이 같이 앉혀놓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둘이 상담하는 게 20분도 안 돼요. 20분. 두 군데를 다 가서 한 게, 상담이 20분도 안 된다는 말은 그냥 체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받아서 오면서, 우리 아기 아빠가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와서, 엄마 나 이제 거기 보내지 마. 그냥 조사받고 온 느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지 말아라. 그러고서 이제 말았어요.

유가족 L

저도 트라우마 대상자가 돼가지고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연락을 받았는데 상담사가 약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말하면서 약간 웃으시기도 하고 그게 뭐 상담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연락 안 하셔도 된다고

23) A시와 B시는 터미널 기준 60km 이상 떨어진 도시로,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이 소요된다.

하긴 말씀드렸었는데... 상담사들을 너무 약간 좀 기준 없이 배치시키지 않았나 좀 그런 좀 의심을 좀 해봤었어요. 그때는.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이 내용을 그냥 궁금해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유가족 S

또한 심리지원은 피해자별 상황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심리지원은 시간적, 지리적, 내용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정부 연계 상담을 받으려면 3주 이상 기다려야 했고, 결국 대기가 길어지는 동안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했다. 또한 피해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자원 배정으로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 연결된 상담사가 상담 내용의 연구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등,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워 상담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유아·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 상담 그거를 진짜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게 순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순번을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각 지자체로 내리고 서울시에서 또 구청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 단계별로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못 참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신과를 찾아서 갔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진료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3주 그때 오더라고요, 연락이. 그래서 그때 그냥 다른 데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했고.

유가족 Y

트라우마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전화 상담에 치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 상담보다는 좀 만나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보건소에 6시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안 열고 평일에는 6시까지는 못 가고 (중략) 그래서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이제 처음에는 전화 상담 이런 걸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면담 대면을 하고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담하실 분을 지원해 드리겠다 하시면서, 이제 저기 어디냐, ○시에 있는 상담사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시에 있는데.24) (중략) 안내를 고지하면서 제 상담이 나중에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중략) '왜 근데 내 상담 내역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라는 이제 불신이 생겨서 못하겠다고, 이제 못하겠다고라고 이제 말을 했고...

유가족 V

24) ○와 △시는 50km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자가용으로 1시간 이상,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된다.

트라우마 치료 받으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도 좀 화가 났었죠. 그 ○○동 그쪽으로 와야 된대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동으로 가야되냐 거기 한 군데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받을 수 있냐. 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거기 아니면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어딤냐. 왜 이렇게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만 당신들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버렸어요.

유가족 R

아이 여동생 심리 상담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아서 (중략) 여긴 병원이 아니라 심리상담센터인데 이게 지원이 될까 안될까 궁금한 거예요. 역시나 안된대요.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심리 상담 정신치료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의료기관이고 아니고 무슨 상관이에요.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 P

또한 상담내용이 정부기관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이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심리상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진료 및 상담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료윤리 및 전문가윤리에 위배된다. 뿐만아니라 그런 행태가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참사 피해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뿐 아니라 심리상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경찰의 잦은 연락이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 것이,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경찰에서 전화와 ‘상담 다녀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연락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국정조사 유가족 공청회 발언 중 발췌)

(2) 의료지원

의료비 지원은 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다. 직접적 부상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 삶의 변화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증상 혹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참사로 인한 건강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받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상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 가족,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에 한해서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의료비 신청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참사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절차 도중에 요구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도 있었다. 자신의 피해를 다시 상기하고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큰 고통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절차에서 그런 고려는 찾기 어려웠다.

제가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해 준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동사무소 가서 제가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할 때 (중략) 생존자인 거를 증명하라고 이런 얘기를 안 했다가 몇 주 후에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서 ○○시청측에서 (중략) 중앙정부가 생존자인 거 사진 보내라고 했다고. (중략) 카톡 대화 내용도 가능하고 그냥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아무것도 다 괜찮으니까 현장에 있었던 걸 증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사실 몇 주 전에 그런 뉴스를 봤었어요. 생존자를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조달된다는. 그 뉴스를 보고 그 모자가 어떤 모자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저 그 뉴스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아무리 생존자라고 얘기를 해도 믿을 사람이 줄 수도 있겠구나'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직접 정부로부터 직접 확인 사살을 당하니까 (중략)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생존자 E

지원 범위도 협소했다. 병원 치료를 받고있는 생존자는 상당한 규모의 간병비를 본인 부담하고 있었다. 참사의 피해에 더해 간병비 폭탄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행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공분을 불러 일으키자 정부는 그제서야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²⁵⁾ 하지만 이 역시 불충분한 지원이었다.²⁶⁾

또한 의료지원에 있어 중요한 피해자의 권리는 지원받는다든 것을 이유로 공격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는 피해자들이 건강할 권리를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한 생존자가 참사 현장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가던 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왜 거길 갔느냐, 지원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들

25) 「정부,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키로」, 『경향신문』 2023.03.13, (2023년 5월 2일 접근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31941001>))

26) 「이태원 참사 간병비 '찜뭍 지원'... "참사 반복돼도 '땀질' 여전"」, 『경향신문』 2023.04. 2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051818001>)

고 치료를 포기한 일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²⁷⁾ 또한 온오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받는 지원에 대한 혐오세력들의 공격은 피해자들이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고,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의료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차별없는 의료를 제공하고, 혐오세력의 발언으로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참사는 피해자들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고통,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경험했다. 생활 환경과 처한 상황,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피해자들의 경험은 각기 달랐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의 단계적인 해결이 아니라 일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 직업,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포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당장 저는 발이 이러니까 원래 하던 알바를 하기에도 서 있어야 되니까 못하고 뭐 운동을 하기에도 괜히 더 잘못될까 하는 그것도 있고 뭘 하려고 해도 사실 항상 지장이 있어요. 밥집을 가도 앉아서 있으려면 소파에 다리를 뺀고 밥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영화관도 못 가고 그냥 대부분이 집에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운전을 해주면 제가 뒷좌석에서 이제 다리를 피고 가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생존자 H

피해는 경제적 문제로 연결되었다.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로 퇴직을 하거나 희생자가 생계 책임자였던 경우에는 재정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는 유가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자, 지역주민, 구조자 등 참사의 모든 피해자가 겪는 문제였다. 생존자의 가족들은 간병을 위해 직업활동을 중단했다. 트라우마로 인해 노동을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경우 이태원 지역사회가 참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직면하게 되었다.

(간병은 부모님이?) 네. (부모님 직장은?) 있는데 저한테 할애를 하셨죠. 회사 안가시고.

생존자 G

저는 남편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애가 만아들이고 이러니까 엄마 경제적인 지원을 이 아들

27) 『"이태원 갔다는 얘기 못 하겠어요"... 트라우마 어떻게?』, 『KBS NEWS』 2022.11.28, (2023년 5월 5일 접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1709>)

이 다 하고 있었어요. 생활비도 다 대주고 근데 이거 생활비가 푹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걱정이 되고. 40대면은 자기 가족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있을 거고. 부양해야 할 부모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얽힌 게 많을 것 같아요.

유가족 T

뭐라 이야기해야하나 너무 다양하죠. 일단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안되는 문제, 주변사람들은 전화하기 미안하다고 연락이 없고, 연락와도 내가 싫고 잘 있어란 말이 싫고... 우리는 가게 앞이 하루 종일의 풍경인데 문앞의 모습은 그러니 이제 가게 접어야하나 했다.

지역주민(상인) C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사 피해자들이 당장의 생계 문제가 생긴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휴직을 보장받거나, 재취업 지원 혹은 고용유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생존자 간병을 위해 가족이 직장생활을 중단하게 된 경우 지급된 생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유가족 중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관공서에 방문했으나 관련 공문이 없다며 반려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학령기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학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전과 같이 학교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 학령기에 있는 생존자, 구조자, 희생자의 자녀등의 경우 학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병원비 이외에...가족들한테 생활지원금처럼 나왔어요. 70만 원인가? 딱 70만 원. 그게 막 병원 밥값 이런 거예요. 그런 명목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병원 보호자 생활 지원 명목으로 그렇게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 말고는 아직...

생존자 G

이제 퇴직하면은 실업급여에 대한 거는 한 번 나오는데 (중략)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절차도 이제 실업급여를 일을 하지 못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서 그만두고 이제 찾아갔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래서 세 번을 찾아갔는데 세 번 다 퇴짜 맞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전달받은 게 없다. 공문 받은 게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저희가 다시 공문 내려달라 하고...

유가족 V

제 일상생활이 좀 많이 변했죠. 왜냐면 지금 제가 재활하면서 엄청 많이 좋아져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걸 못한다 했잖아요. 그 두 개 만으로 제약

을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학교도 못 가고요 학교 가서 수업을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고 버스를 타고 오래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지하철을 타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요 몇 번 탔다가 공황 와가지고 많이 그래서 약 먹고...

생존자 H

제 기억에는 제가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봤었는데 사고 이후에 최소 3개월까지 휴식 시간을 거쳐서 그 세월호 생존자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런 휴식시간은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세월호 생존자들이 그래서 많이 부러웠어요.

생존자 E

이태원이라는 지역사회가 입은 타격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속가능한 이태원 지역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에서도 또한 피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고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태원 그니까 여기 인접 내 생각에는 이쪽이랑 이 여기가 이동이 이쪽이랑 여기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7천만 원 대출을 해주는데 그것도 이자도 그렇게 싸지도 않더라고 5%인가 7%인가 막 이런 거 대출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 받으려면 알아서...

지역주민(상인) D

또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원인을 알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치유되기 힘들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일부 생업을 포기하거나 퇴직을 하는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외면한 정부로 인해 유가족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참사의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고 원인 및 국가 등의 안전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²⁸⁾ 이러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당연한 피해자들의 권리이기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8) 416재단,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매뉴얼』(2021), p20

4) 법률구제를 받을 권리

피해자 권리 회복에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묻기위해 민형 사상의 대응이나 참사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혹은 상속과 관련된 문제들에도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법률구제가 필요한 영역은 희생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법률구제의 영역은 이러한 맥락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희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문자를 받고 행정기관에 문의하였지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 화재, 재난, 재해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라는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원을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 애가 ○○구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세입자가 희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 이자를 우리가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몇 억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금 현재 우리가 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달이... 근데 만료일이 내년 3월이거든요. 3월, 4월인가 돼요. 3월인가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자를 내고 있어야 돼요. 법률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집주인한테 지금 현재 세입자가 없으니까 돈 다 내줘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뭔가 좀 바꿔줘야 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드린다면지 이런 생각은 하나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힘들죠. 애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힘들기는 힘들죠.

유가족 ○

그때 나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사회재난 서비스 관련된 문자. 열 몇 가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상속세 취득세 이런 거 막 된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중략) 이제 저희도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동생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물어봤더니 지방세 감면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준다는데 뭐가 있냐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윈스탑 서비스에 그랬더니 화재, 재난, 재해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 공제를 해주다 하더라고요. 화재, 재난, 재해 재산상의 손실. 근데 저희 이태원사고는 안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중략) 화재, 재난, 재해,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 공제를 해주는데 아니다. 없다. 여기서 재난이 아니래요. 그럼 뭐 무슨 뭐냐고 그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유가족 W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나, 막상 피해자 법률지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작동한 결과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이태원 헬러원 참사’ 법률지원단은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담자들에게 “국가 책임과 관련 신중한 상담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언론으로 드러났다.²⁹⁾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할 기구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이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언론인터뷰에서 “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며 “국가 책임을 입증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선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상담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이라고 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소송구조를 한다’는 관계자의 발언은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소송 가능성에 중점을 둔 법리적 판단만을 주 업무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지켜지고 있지 못한 권리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위에서는 몇 가지 지원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의 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권리의 공백과 지원의 부족한 점들을 짚어보았다. 주지할 것은 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위의 몇 가지 단편적인 지원 영역으로 모두 이야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살펴본 원칙들 아래 피해자들이 권리의 공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와 그것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29) 「이태원 참사’ 법률지원한다더니...」국가배상 상담은 신중히」, 『경향신문』, 2022. 11. 02.
(2023년 4월 27일 접근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102115501>)

5. 애도와 연대의 권리

모든 참사의 희생자는 애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희생자를 애도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 공론의 장에서 함께 애도하고 연대를 통해 연결될 권리를 지닌다.

애도는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의 상실을 마주했을 때 인간으로서 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에서 말하는 애도는 오직 개인적 영역에서의 실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참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애도는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나아가 진실을 밝히고 사회정의 실현을 국가와 사회에 촉구하며 남은 사람들이 함께 실천하는 ‘애도의 정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³⁰⁾ 즉, 사회적 참사에는 사회적 애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없이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애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과정들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사회적 애도를 위해서는 함께 만나고 행동하는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연대는 단지 함께 모여서 슬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사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애도의 과정은 각자 다르며, 이를 엮어내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국가 등에 의해 애도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지고, 희생자와 참사를 모욕하는 혐오가 만연한다면 온전한 애도의 연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사를 마주한 이들이 연대하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현재를 돌아보고 서로의 곁이 되어주며 이후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연대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후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1) 정부의 일방적 애도의 문제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정부는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고, 대국민 국정 최우선 순위를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³¹⁾ 또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서울광장을 비롯하여 서울 시내 각 지역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다른 참사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바로 선포된 국가애도기간은 정부가 이번 참사를 특별히 심각하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 아닌 사망자’라는 공식 명칭³²⁾과

30) 정원옥,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애도의 정치」, 『문화/과학』 79호(2014), p57

31) 「내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선포…유족·부상자 최우선 지원」, 『한겨레』, 2022. 10. 3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64940.html>

32) 「“피해자” 아닌 ‘사상자’로 용어…중대본 회의 지침 논란」, 『KBS』, 2022. 11.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1742>

근조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달라는 지침³³⁾들이 이어지며 참사의 의미는 축소되었고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차단되었다.

이렇게 국가 주도의 애도가 이루어지면서 애도의 방식 또한 통제되었다. 애도 기간 동안 헬러원 관련 행사만이 아닌 공연, 축제, 문화행사 모두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 연주, 공연, 전시 등 예술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수단임에도, 예술이 국가의 일방적 애도에 동참할 수 있는 방식은 오로지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강요된 애도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오고 희생자에 대한 혐오를 야기했다.³⁴⁾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도 온전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도 없는 국가애도기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일방적 애도의 문제는 희생자의 이름도 사진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합동분향소 설치에서도 드러났다. 단지 비공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었던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가족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위패·영정이 있는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부터 10월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가족 연락처가 포함된 희생자 명단을 확보받았음이 국정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³⁵⁾

삼오재 때 이 유류품 가지러 올라오고 올라와서 내려가다가 이제 분향소에 들어서 다른 아이들도 좀 위로해 주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근처에 어디 있나 했더니 국회의사당 앞에 분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이제 거기서 분향을 했는데 정말 분향소가 두 평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 너무 거기에 분향소를 지키는 지킴이가 경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향소를 지키는 게 아니고, 분향소가 이렇게 있으면 분향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경찰이 있어요. 분향소를 지키려면 여기 와서 오는 사람들 맞아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 뒤에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방치가 된... 그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없고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제대로 된 분향소가 나오든가 아니면 아직 지금 정비를 못했구나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끝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유가족 L

33)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 달아라? ...공무원들, 리본 뒤집어달라 "이런 일 처음"」, 『경향신문』, 2022. 11. 1.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1010630001>

34) 이동연,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 『[긴급토론회] 10.29 : 참사와 문화정치 - 국가권력의 통치, 성 애도의 방식, 예술의 자율성』, 2022, p5.

35)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p649.

처음부터 장례식에 2차 가해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했거나 아니면 전담 공무원들 다 배치했잖아요. 그때 합동 장례식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상의할 수 있고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흐지부지 그렇게 넘어가 놓고 이제 와서 영정, 위패 올리기 싫은 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2차 가해를 주도하고 방치해놓고 처음부터 합동 분향소나 이런 것들을 아예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정부가 간접적으로 좀 그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중략) 그래서 여태 사고나 참사 피해자들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나 찾아 봤는데 그것도 또 압사 사고만 찾아봤었어요. 근데 심지어 60년도에 일어났던 압사 사고도 위패는 있더라고요. 그 상주콘서트 거기 압사 사고도 영정 위패다 모신 합동 장례를 치렀는데 왜 이번에만 왜 이번에만 없었을까.

유가족 Y

이제 저는 좀 궁금해서, 장례 치르고 이틀? 이틀째 3일 째 됐을 때 또 이제 담당 경찰관이 왔어요. 이제 서울에서 우리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왔는데 그 경찰관 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궁금해서 혹시 저희 합동 같이 하는 장례식이나 이런 건 없냐 합동 장례식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없냐라고 하니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분향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제가 뭘 준비를 해야 되나 제가 뭘 준비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준비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거기서 준비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장례식 끝나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분향소였던 거죠.

유가족 V

이렇게 일방적 애도로 인한 애도와 연대의 권리 침해는 정부 주도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 후에도 이어졌다. 참사 보름 후인 11월 14일 시민연론 민들레에서 희생자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물론 유가족의 동의가 없거나 반대함에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은 문제적이고,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인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³⁶⁾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배제하고 연대를 방해하며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하지 못하게 만든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은 채 유가족의 동의 없는 공개가 문제라는 입장만을 내놓았다.³⁷⁾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유가족

36) "피해자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개당할 수 없는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외 35개 단체, 「[연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2022. 12. 5.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920221>

37) 「한동훈 "유족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법적 문제 있다"」, 『동아일보』, 2022. 11. 1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114/116470361/2>

은 철저히 배제되고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도 모든 유가족이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를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에도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민들레도 화가 났지만, 정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여태까지 공개도 안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사건이 나면 속보가 뜨잖아요. 희생자 이름 하나하나가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알 거잖아요. 그러면 이상민이 유가족을 못 찾아서 자기는 연락할 수가 없었고 연락처를 줄 수가 없고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속보만 띄웠어도 그 명단만 띄웠어도 그날, 유가족들은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짓을 했다면 우리 이제 유가족 중에 하나가 엇그저께 얘기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잘 잤어. 나는 밤새 잠을 너무 잘 잤거든.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들었대요. 텔레비로. 근데 그게 내 자식 이름이 안 나오니까 모르고 자기는 잤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유가족 L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발언이 되고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내뱉어지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민들레 명단이 공개가 돼서 저는 이제 그때 엄청 화났죠.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끌려 다니는데 이렇게 이용당하는 와중에 우리 오빠 이름이 공개됐고, 우리 오빠는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겠구나. 이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때부터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유가족 V

요즘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40대여가지고 사실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서 인터넷을 하니까 인터넷을 치면 이제 아빠가 어떻게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희생당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러면 그 아빠에 대한 좋은 감정이 또 아빠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까봐 머느리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공개 안 하고 사진도 공개 안 하고 유가족 참여만 했어요.

유가족 T

그렇게 유가족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애도에 맞선 것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였다. 참사 40여일이 지난 2022년 12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이하 '유가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각각 출범하였다. 그리고 참사 47일 만인 12월 14일, 녹사평역 이태원광장에 76명의 희생자의 영정 사진을 비롯하여 158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졌고,³⁸⁾ 이를 통해 비

38) 「참사 47일 만에 영정 놓인 분향소...」이제야 '잘 가라' 말해", 『경향신문』, 2022. 4. 1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142045015>)

로소 온전한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후 2023년 2월 4일 합동분향소는 시청광장으로 이전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의 결과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분향소 설치를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직후부터 불법설치물이라며 계고장을 날리고 철거를 요구하였고, 2,900만원의 변상금까지 부과하여 애도와 연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³⁹⁾

음... 그때... 좀 기념적인 날이었죠. 이전에 정부에서 했던 거는 위패랑 영정이 없던 분향소였잖아요. 근데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위패와 영정이 있는 진짜 분향소를 차려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컸어요. 이제야 진실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느낌도 들고 추모제 때 많이 느꼈던 거는 그전까지만 해도 시민분들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그 시민분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힘내세요!’ 하는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소리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가 이렇게 저한테 몰아치는 것 같은 거예요.

유가족 X

정말 이게 저희가 정부가 안 도와줘서 저희가 직접 다 찾아가지고 영정 위패 저희가 다 취합해서 제가 심지어 이제 다른 형제 자매분들 중에 한 분이 그걸 또 취합을 해 주셨거든요. 영정 사진 취합해서 손수 올리고 분향소를 차렸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안 한 것을 저희 피해자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차렸던 그 장소잖아요. 위패없는 분향소와 같은 장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추모를 이제부터 저희가 원하는 추모를 저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애도기간 설정이랑 그런 분향소, 합동 분향소를 저희 의사가 전혀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라도 하겠다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하는 걸 보고

유가족 Y

4월 1일부터 5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서울시청 서울 합동분향소를 우리가 너희를 도와 같이 할 테니 5일까지만 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진짜 수 골 백번을 수천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진실을 왜곡된 진실을 밝힐 것이며 시민들을 만날 것이고 국민들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위로를 받았고 그게 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 그 장소를 우리가 정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중략) 우리는 우리 아이들 지키겠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참 나쁜 게 서울시가 자꾸 우리랑 아무런 의논도 되지 않은 것들을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요.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도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계속 거기다 두느냐 그러니까 ‘우리랑 얘기가 잘

3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무단 점유』 유족에 2900만원 변상금 부과한 서울시, 『경향신문』, 2022. 4. 1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112110015>)

되고 있다. 지금 협상 중이다.’ 저희랑 얘기 될 것도 없고 협상도 없어요. 본 적 없는 거죠. 만난 적도 없어요.

유가족 U

이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해에 맞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연대를 통해 합동분향소를 지키고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합동분향소는 단지 시민들이 추모와 애도를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 그곳을 통해 유가족들은 함께 만나고 서로의 곁이 되어 줄 수 있으며, 연대하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볼 수 있는 광장에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참사의 의미를 사회에 알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합동분향소는 온전한 애도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진상규명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연대와 정치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번 주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야간으로 지킴이 하고 있어요. 좀 졸리긴 하지만 또 가족분들이랑 또 얘기를 할 시간도 많고 원래 보던 분들만 보잖아요. 근데 지킴이 하다 보면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뵘어도 얘기를 해보지 못한 분들이랑 밤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도 받고요. 그런 것 같아요.

유가족 X

서울 시청에 이렇게 분향소를 해놓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몰랐던 분들도 이거 뭐야 라고 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신 분들, 또 많이 물어주신 분들, 내 자식처럼 아침저녁으로 10시부터 새벽 5~6시까지 3천배해주신 분, 같이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들...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유가족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가족 O

왜 부모들이 자식이 죽고 나면 쉽게 생을 마감하는지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희망이 없어. 여태까지는 애들이 잘 되고 이게 웃고 막 이런 모습 그리고 애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런 걸 상상하고 살았는데. 애가 갑자기 딱 사라지니까 왜 살았지 그냥 존재 이유가 없어진듯.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폐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열심히 살 수 있는...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막 모이긴 모였잖아요. 분향소가 생명의 장소라는 말은, 유족들한테는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장소. 우리의 살아갈 힘을 주는 장소. 정말 이게 엄청난 장소예요. 저희들끼리는 소리내서 웃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이 됐어요. 한 달 동안엔 모이면 떠나보낸 사람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서로를 챙겨주는 단계죠. 일단 우리는 표정이 근육이 이제 이렇게 막 쪼그렸던 근육이 이제 다 펴졌거든요. 가족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추모해 주면서 애들한테 편지

글 쓰고 또 사람들이 와서 응원해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유가족 Q

2) 차별없이 애도받고 애도할 수 있는 권리

애도의 권리는 차별 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참사 직후와 그 이후에도 이어진 헬러윈 축제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⁴⁰⁾과 소위 ‘놀러 가서 죽었다’는 희생자에 대한 혐오⁴¹⁾는,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애도를 가로막았다. 이러한 혐오 앞에 생존자는 ‘살아 돌아왔다’는 마음과 축제를 즐기러 갔다는 것만으로 위축되어 목소리를 드러내기조차 쉽지 않았다.⁴²⁾ 그러나 이번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린 국가이지 2022년 10월 29일 당시 이태원에 있었던 이들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태원과 헬러윈은 잘못된 게 없고”, “일상을 지키고 싶다”는 한 생존자의 이야기⁴³⁾처럼, 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살어나갈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 진짜 뉴스를 안 봤거든요. 뉴스 볼 겨를도 없었고 보면 뭐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그 상황이 떠올라서 안 보고 있다가 그냥 좀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쯤 한 달 지나고 나서 우연치 않게 기사를 그냥 클릭해서 보게 됐는데 댓글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 너무 반대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국민이 저희 편인 줄 알았거든요. 정반대의 표현들을 써놔서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정부의 잘못된 걸 당연히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욕을 하고 있어서 왜 놀러 가서 그런 거를 희생자라고 표현하나 그런 것 같아서 놀러가다가 죽었으니 당연히 그거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아파서 바로 꺼버렸죠.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안 봤어요.

희생자 지인/생존자 N

일반적으로 유가족으로 이야기되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이전의 재난참사 관련 법률에서도 유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며, 추가로 직계존속의 배우자 정도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어 있다. 이에 비

40) 「헬러윈이 뭐길래...알파한 상술과 결합한 변종 외래문화」, 『노컷뉴스』, 2022. 10. 30.
(<https://www.nocutnews.co.kr/news/5840872>)

41) 한국갤럽이 2022. 11. 8. ~ 10.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가 참사의 1차적 책임이 ‘당사자/그 곳에 간 사람들’에 있다고 답을 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19호(2022년 11월 2주)」, 2022. 11. 10.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38>)

42) 「왜 놀러 갔냐고 묻는 폭력...’뭘 하다 죽으면 괜찮은 겁니까」, 『한겨레』, 2022. 11. 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430.html)

43) 「이태원 생존자 “내년 헬러윈에도 다시 찾을 것...일상 지키고 싶다”」, 서울신문 (2022. 11. 2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9500215>)

해 2023년 4월 20일 국회에 발의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유가족의 범위에 '3촌 이내의 혈족'도 포함시켰다. 희생자들 다수가 20대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삼촌, 이모 등 친척들이 실제로 유가족으로 함께 애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⁴⁴⁾

훈인,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은 일반적으로 희생자와 가장 가깝게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며, 따라서 유가족의 애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희생자와 관계를 맺고 그 상실에 슬퍼하는 이들이 반드시 이러한 훈인, 혈연 가족만은 아니다. 동거 커플, 친구, 동성 배우자 등 희생자와 가깝게 지내며 삶을 공유했음에도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없는 다양한 관계의 사람이 있고, 이들 모두가 차별없이 애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⁴⁵⁾ 그럼에도 법률과 사회의 한정된 유가족 개념은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참사에서 애도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중환자실에 전화를 돌리고 확인 안 된다 올 거면 가족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 정말 법적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죠. 장례를 가족이 원치 않으셔서 치르지 않았고요. 그다음 날 바로 화장하고 장지로...저희 친구들끼리 그렇게 결혼을 안 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장례를 안 하고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뜻이 맞는 이들이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하고 언니의 삶의 자취가 담긴 사진들도 함께 보고 언니와 만들어 먹던 음료들을 만들어 나눠먹고 나누고픈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을 이들 동안 하루 한 두 시간정도 저녁에 모여 갖았어요. 나중에 언니 가족들도 와서 함께 했고 참 좋아하셨어요.

(중략)

49재 때도 그렇고 좀 참 이렇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의 지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49재에 갔다오고 나서 되게 외롭더라고요. 같이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는데 우리의 친구의 이름이 없고 부를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 지인 I

3) 혐오·폭력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

혐오 표현으로부터의 보호는 피해자들은 물론 사회 전체를 위해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4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1515, 남인순 의원 등 183인).

45) 가령 일본 구마모토시는 재난 발생 시 희생자의 안부 조회할 수 있는 사람에 ① 동거친족(사실혼 포함), ② 동거 외 친족이나 직장 관계자, ③ 기타 지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동성 배우자는 동거친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熊本市防災会議, 『熊本市地域防災計画』, 2022, p79.

녹사평 분향소부터 시작된 극우단체의 혐오 표현은 온·오프라인 공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신자유연대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지 않았다.⁴⁶⁾ 애도를 위해 사회 전체가 지키고자 했던 공간에 대한 근거없는 날조와 공격을 퍼붓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그러한 혐오를 용인하는 것이었다.

이제 녹사평 갈 때마다 그 이제 저희에게 폭언을 퍼부으시는 분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받았죠. 너무 대놓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놓고 그 분향소가 보이는 상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현수막을 막 주위를 분향소 주위를 둘러싸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깐.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심해서 이제 내가 찾아봐야 되는 댓글들이나 이런 거에는 별로 상처를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유가족 V

비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가족에 대해서. 이런 지금 행동 운동이나 하는 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놀러 간 친구들이 죽었는데 국가가 애도하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게 이런 국가의 태도지 않을까 싶어요. (중략)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가벼운 사건처럼 약간 희생자들의 잘못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만든 게 이런 방치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유가족 S

피해자들은 스스로 혐오 표현의 발화자가 된 정부와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도 큰 분노를 느꼈다.⁴⁷⁾ 정부의 책임 회피와 외면은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참사에 대해 냉소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봤던게 이제 뉴스를 보는데 대통령이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에 ‘뇌출혈도 있었다’ 이 얘기를 했던 거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육성으로 욕을 했죠. 저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인가 사람들 앞에서 (중략) 진짜 너무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냥 그런 건 잘 생각을 안 하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고 그때당시에 아는 형님이 오셔가지고 돌이켜 TV를 보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저는 원래 형들 앞에서 욕을 아예 안 하려고 하다가 처음으로 어제 ‘저판 게 사람 ○○냐’라는 말을 해버려가

46) 『이태원 분향소에 보수단체 접근 금지』 유가족 가처분 기각, 『YTN』, 2023. 2. 6.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61447289858

47) 대표적으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혐오 표현이 있다. 『“인간이길 포기했나” 이태원 참사 유족들, ‘혐오발언’ 김미나 창원시의원 고소』, 『여성신문』, 2022. 12. 15.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83>)

지고 그 정도 당황하고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에는 뉴스를 아예 안 봤어요.

구조자 J

제3의 피해자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이제는 좀..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참사를 지속되지 않게끔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말로만 트라우마 할 게 아니고 진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너무나 무뎠고 답은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걸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을 제대로 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가나네요...

유가족 Y

정부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는 재발 방지를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요소로 작동한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재발 방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바라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책임 회피가 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죠 근데 저는 이런 참사를 너무 많이 봤죠. 세월호도 그렇고 성수대교도 그렇고 대학교 아이들이 엠티를 갔다가 눈이 많이 와서 무너져서 또많은 아이들이 또 그렇게...그런 것들을 볼때마다 매번 제대로 된 진상 조사나 책임자 처벌이 매번 없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묻기에 급급해요. 묻고 숨기고 그리고 진짜 그 밑에서 뭔가라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제대로 된 조사나 제대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매번 그런 일이 터지면 잘 수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매번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났고요. 근데 그 참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공통되게 일어난 참사는 하나도 없어요. 매번 다 틀린 참사들이에요. 매번 그렇다면 이 이후에 또 어떤 참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이 아이에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되고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 친구의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지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사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자면 뭐가 됐든 진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가족 U

4) 연대의 권리 침해

피해자들은 서로를 확인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고립된 피해자는 상실된

존엄과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수준의 변화는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그것을 용인한 사회적 구조에 대해 공동체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어떤 구조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모이고 말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연대의 토대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단체의 형태로 모여 있는 피해자들은 유가족이 유일하데,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락처 공개에 동의한 이들의 연락처라도 공유해달라는 요청에도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유가족 Q&A’문건을 배포했을 뿐이었다.⁴⁸⁾ 유가족들은 답답함에 직접 납골당을 찾아다니거나 주변의 장례식장에 연락처를 남기는 등 다른 유가족에게 가담고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

처음에는 제가 합동 분향소에 갔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장례가 끝나고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며칠 있었어 합동분향소가 있다고 하길래 시청 합동 분향소를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분향을 하러 간다고보다는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연락처를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가족분들은 경황이 없어서 그게 아예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거든요. 합동분향소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중략)

저희는 사실 이게 유가족들이 좀 이렇게 모이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행안부 윈스톱 지원센터에서 유가족 협의회 결성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왔었는데 거기에 대부분 찬성했다고 말을 들었는데도 그 이후에 전혀 그런 연락처를 서로 공유를 해준다는가 연결을 해준다는가 모임 장소를 제공해준다는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찾아다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납골당에서 그 유골함을 봤어요. 저희 납골당이 그래도 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거기로 들어오신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걸 못 보다가 조금 시간이 좀 몇 주 지났을 때 이제 좀 둘러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있으신 거예요. 희생자분은 바로 옆에 계셨어요. 심지어 나이도 똑같은 분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분 보고 두

48) “보도에 따르면 한 유족은 정부에 직접 다른 유가족과 연결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연락처가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다른 유가족은 이에 자신의 연락처를 정부에 알려주고 다른 유가족에게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정부가 참사 유가족 연락처 공유 막아…누구 지시인지 밝혀야”』, 『프레시안』, 2022. 11. 2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2715071558587>)

분 보고 세 분 보고 그러니까 열 분도 넘게 계시고, 거의 지금은 스무 분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놀란 거죠. 날짜를 29일 아니면 30일 이걸 계속 29일 아니면 30일인데 이제 거의 또 이제 생년월일 보면 또 나이대가 다 어르신 분들이고 근데 또 100%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 뭐지? 무슨 명단이 한번 보게 됐었잖아. 그거를 또 보고 이분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찾기도 했고 근데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저희는 뭐 하루 종일 납골당에 거의 있었다 보니까. 초기에는 우연히 만나고 그랬어요. 그 앞에 계신 분... 우연히 만나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이래서 들어오시고 그때 아셔서 그런 분들 몇분 좀 계시거든요. 그렇게까지 한 거죠. 유골함 찾아다니면서 유가족 Y

정부는 참사 초기에는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주장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⁴⁹⁾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간의 연결을 위한 최소한의 도움도 주지 않고 외면했다.

정부가 물리적으로 유가족 간의 연결을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한 유가족은 같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다른 희생자의 빈소에 찾아가려고 했으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다. 장례식장의 출입구를 지키고 서서 검문을 한 사례도 있었다. 같은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서로 위로할 권리조차 가로막은 것이다.

○○하고 ○○이 어디 무슨 장례식장인가 1층하고 2층에 있었는데. ○○ 이모부님이 그걸 알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형사 4명이 못 올라가게 막더라. ○○ 이모부님이 저한테 여기 와서 얘기해 주셨어요.

유가족 Q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가 2층인가 그리고 ○○이가 1층인데, ○○이 삼촌이 2층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올라가려고 했대요. 장례식도 못 올라가게요 못 올라가게... 아니 조문객인지도 모르는데 왜 막아요. 근데 이미 다 파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삼촌인지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니 만나지 못한다고, 고의적으로 못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왜 왔겠어요. 보통 경찰은 그냥 가거든요. 근데 경찰관이 온 이유는 다른 유가족들은 혹시라도 만날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유가족 R

장례식장 1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경찰이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서 유족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니는 1층에다가 이제 주차를 한 거예요

49) 『유족 명단 없었다』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 증거 입수... 서울시 내부 자료, 『뉴스타파』, 2023. 1. 4. (<https://v.daum.net/v/20230104170001824>)

요. 모르니까 그냥 (주차)하고 저희를 만나러 밤에 이제 내려왔는데 저희 가고 1층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왜 가냐 1층에서 저희한테 왜 가냐 물어봤고 올라갈 때 너 왜 가냐 이런... (중략) 저희 내려갈 때 저희도 이제 모르니까 저희는 이제 지하로만 가는 줄 알고 일단 내려왔는데 검문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나', 이태원 사고로 왔다고 하니깐 열어주고.

유가족 W

유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유가협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일방적 설문 문자를 받았다.⁵⁰⁾ 그러나 문자를 못 받은 유가족도 있었다. 또한 답변을 했는데도 정부에서는 유가협 운영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나 조력도 하지 않았다. 결국 온전히 유가족들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유가협이 결성되었고, 생존자와 구조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도 모임을 꾸리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연대와 결속의 노력은 온전히 피해자의 자구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의 조력에 맡겨져 있다. 행안부에서 구성한 유가족지원단은 유가협 결성에도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협 활동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고 있었잖아요. 참사 후 3주 쯤 되었나. 문자가 왔었어요. 용산구청에서. 혹시 유족 협의회를 만들면 거기에 참여하시겠냐. 그래서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내가 보냈죠. 근데 연락이 없는 거야. 나를 인터뷰한 기자가 용산구청에 문의도 했는데 이후에 연락없이 끝이었죠.

유가족 Q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가족 협회가 발족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찾을 줄 몰라가지고 그 친구 아들 친구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민변 협회가 어디냐 해가지고 전화번호 간신히 받아가지고 연락해서 들어간 거예요.

유가족 T

민변도 제가 계속 기사를 검색하다가. 와서 민변에서 저희를 먼저 연락을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됐고 그때 한 유가족이 한 20가족 정도가 처음 만났어요. 그런 과정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가족 S

피해자들은 어떤 지원보다도 모이고 연결되어 같은 목소리를 낼 연대를 필요로 한다. 유가족들이 생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아오는 이유는 이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추구

50) 「이태원 유족에 “6시까지 연락 없으면 의견 없다고 간주”」 『한겨레』, 2022. 11. 24.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68817.html)

하는 시민의 연대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모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존재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구조자 또한 녹사평역에 설치되었던 분향소에 먼 거리를 이동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이유는 혹시라도 당일 현장에서 구조활동 덕에 소생된 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고 이야기한다. 분향소의 운영은 참혹했던 현장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피해자들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참사에 대한 사회의 연대는 배제되거나 고립되어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참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특히 생존자들이 스스로 생존자임을 드러내는 데 제약을 겪고 있다는 점은 연결되고 연대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참사가 더 큰 참사로 번지지 않고 예방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저는 ○○가 그 시간 동안 ○○ 같은 학생들 있잖아요. 생존자들 중에 그런 학생들을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계속해 보면 저는 어쨌든 아이를 그때 당시에 아이 심정이나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느끼는 건 굉장한 외로움이거든요. (중략) 왜냐하면 제가 유가족을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그냥 똑같은 걸 겪었다는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나만 혼자 이걸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유가족 P

(159번째 희생자의 소식을 들었을 때)그때 처음으로 그 진짜 공황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그래가지고 원래 정신과 상담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그걸 그때 완전 패닉이 와서 정신과 상담 요청하고 했는데.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친구 두 명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둘이 잘못돼서 그렇게 그랬던 거니까 그리고 입원도 하고 치료도 했더라고요.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저희도 친구가 정말 운이 좋아서 너네 둘이 살아남은 건데. 개네들이 잘못됐으면 저도 그 친구랑 똑 같이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정신과 상담받고 좀 안정되고 막 이러는 거지. 그 때 생존자○○이 연락 와서. 그 때 좀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주고 받는...

(중략)

일단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준다 하더라도 물론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가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위로가 있잖아요.

(중략) 내가 유가족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생존자분들한테는 내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또 도움을 그런 과정에서 나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존자 G

저는 유가족들끼리의 연대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 혼자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점차 ○○이 가족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 49재 때 처음으로 이제 가가지고 다 같이 추모제 하고 해서 저는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가족분들이랑 함께하고 있구나, 다 같은 똑같은 슬픔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그때 이제 '난 혼자가 아니구나' 다들 저를 감싸주고, 제가 희생자 가족이 아니고 그냥 생존자인데 저를 포용해 주시구나. 유가족분들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어서, 그래서 가족들끼리 연대가 너무 소중하다고 그게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추모 공간이나 그런 게 꼭 필요하다

희생자 지인/생존자 N

유가족들은 정부의 심리지원보다도 오히려 연대와 연결이 가장 큰 도움이자 위로가 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 연결을 통해 서로의 회복을 돕고 치유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힘은 정부의 방해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발화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사회에 권리주체로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제 생각에는 유가족들을 만난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만나기 전에는 이 정부에서 하는 말들이 답답하고 그걸 지인이나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답답한 걸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기가 걱정되니까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또 유가족들 만나고 특히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래 알던 사람들처럼 진짜 속에 있는 얘기가 잘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스스로 깨달는 건 이런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있을 때 정신적 치료나 심리 상담보다 유가족들끼리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는 느낀 것 같아요.

유가족/생존자 X

그러나 지금껏 정부가 연대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는 방해와 탄압뿐이었다. 예컨대 가장 열려있는 연대의 공간인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부터 가로막았으며 분향소를 지키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는데 데 일조했다. 피해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역할을 하기는커녕 방해에 앞장선 것이다. 정부 또한 이 애도와 연대를 권리를 침해한 이 모든 과정을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행안부는 일부 유가족에게 별도로 만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유가족과 단체로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자 연락을 두절했다. 피해자들의 연결을 최대한 억제하고 개별화된 협상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는 유가족을 비롯하여 유가족과 연대하는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참사의 경험은 파편화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며 피해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동체와 사회의 차원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참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정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행안부 쪽에서 가족 만나고 싶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한 게 저였거든. (중략) 행안부장관이, 비서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뵙고 싶어 한다고 우리 집으로 오겠대요. 장관님이. 그래서 ‘누추한 집에 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높으신 분 나는 만나면 떨어져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도 없고 유가족들이 다 모여서 만났으면 좋겠다. (중략)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 나는 만날 필요도 없고 유가족이 다 모이면 나를 꼭 좀 불러달라, 나 장관님한테 정말 할 얘기, 할 얘기가 많다.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제 장관은 그렇게 발뺌만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유가족 T

저 혼자만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한 10여 명 모여서 목소리 내기 시작한다면... 혼자로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한 명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지만 둘이 모이면 4배 일을 할 수 있고 10명이면 100배 일을 할 수 있는 게.

유가족 Q

III. 피해자의 인권침해 상황

III. 피해자의 인권침해 상황

누구를, 왜 참사피해자라 하는가

피해자의 권리는 재난과 참사의 피해에 한하거나 타인이 일방적으로 짐작하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참사의 순간 입게 된 피해에 국한해서 정의되지도, 어떤 피해가 더 큰지 고통을 저울질하는 위계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는다.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와 피해자 역시 다양하고도 광범위하다.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심리적, 신체적 부상을 입은 생존자 외에도 구조와 수습 과정에 참여한 구조자와 참사의 목격자, 다양성을 상징하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에 위치한 지역주민과 상인, 그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아야 했던 시민들 모두가 참사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이를 대략적으로 유형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상실을 겪은 유가족이 있다. 여기서 희생자는 참사 당일 또는 참사의 직접적 부상 등으로 희생된 이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159번째 희생자와 같이 국가의 책무 방기와 혐오, 2차 가해로 인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⁵¹⁾ 유가족 역시 혈연과 혼인으로 이어진 '법률상 가족' 외에 희생자와 삶을 공유했고 상실에 슬퍼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된다.

둘째,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가 있다. 생존자는 참사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심리적 손상을 입었고, 한 생존자는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⁵²⁾ 그럼에도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지 않는 국가,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 등으로 인하여 많은 생존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생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이거나, 구조자, 목격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차하는 생존자의 상황은 피해자로서 생존자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셋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참사 현장 수습 등에 참여한 구조자가 있다. 구조자는 참사의 생존자이자 목격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가의 공백을 매운 구조자는 참사의 피해자가 아닌 이른바 '의인'으로만 여겨지곤 한다. 세월호참사 당시에도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은 아직도 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⁵³⁾ 따라서 이번 참사에서는 피해자로서 구조자들이 겪

51)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으로, 생존 고등학생 극단적 선택 '트라우마' 인정」, 『경향신문』, 2023. 1. 3. (<https://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31538001>)

52) 「이태원 참사 마지막 입원 생존자, 월 500만원 간병비 '막막」, 『한겨레』, 2023. 2. 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112.html)

53) 「세월호 '피해자'로 불리지 못하고 '죄인'이 된 사람들」, 『미디어오늘』, 2017. 11. 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738>)

은 인권침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점을 운영하는 주민과 상인 역시 피해자이다. 이들은 참사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구조와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참사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이태원 지역의 상권 축소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이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하여 이후의 삶을 지속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피해자들 각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분류할 수는 있지만, 생존자이자 유가족, 구조자이자 지역주민과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경험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한다. 또한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전국 곳곳에서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기에 희생자와 생존자, 구조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참사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기에 참사 피해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인권 침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4가지 유형별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살펴봐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 각자의 다양한 배경과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다양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1. 희생자와 유가족

159명의 희생자와 상실의 고통을 겪은 유가족은 참사로 인해 수없이 인권을 침해당했다. 참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일방적 애도를 강요한 정부, 희생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경찰,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간 혐오와 낙인으로 인하여 이들이 겪은 고통은 가중되었다. 희생자를 비롯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가해를 초래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지하거나 심지어 가중시키고 있다. 혐오와 낙인으로 인하여 유가족은 사회적 고립을 겪는 등 현재까지도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그렇게 유가족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원만을 내세울 뿐이다.

1)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

(1) 혐오·폭력을 방지, 조장하는 국가

희생자들의 신원이 미처 다 파악되기도 전인 10월 30일 오전,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10월 29일 밤 그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듯, 국가애도기간에도 애도는 없었다. 정부는 참사의 책임을 외면하며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왜곡하고 축소했다. 정부는 애도의 의지 또한 부재했다.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는 애도 없는 국가의 민낯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국가애도기간에 대한 그 어떤 안내도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 국가의 일방적 애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이었다.⁵⁴⁾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그 이후에도 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 없다. 계속되는 책임 회피, 소극적인 진상규명은 희생자의 죽음을 더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이 오히려 앞장서서 가해를 하기도 했다.⁵⁵⁾ 책임지지 않는 국가는 애도할 수 없다. 애도하지 않는 국가는 참사에서의 죽음을 희생자의 탓으로 돌린다. 이는 희생자의 생을 다시금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때 그래서 그 장례식 하는 와중에 인터뷰를 한 것도 사실 그런 일을 했던 거였는데. 아니 (한덕수 총리가)너무 이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마치 ○○이가 무슨 의지가 없어가 지고 정부에서는 모든 치료 지원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말 의지가 없어서 그냥 가 버린 애 마냥. 그렇죠, 딱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는 너무...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 P

그러는 사이에 159번째 희생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54) 시민건강연구소, 「국가가 ‘독점’한 이태원 참사 애도…또 다른 ‘폭력’」, 『프레시안』, 2022. 11. 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0620283800022>)

55) 「유족 “2차 가해는 총리·장관·국회의원들 말”」, 『경향신문』, 2023. 1. 12.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1122055005>)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언론) 인터뷰를 시간순으로 보면 진화 과정이 보여요. 처음에는 막 읊소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막 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로 바뀐 게 뛰나면, 이제 ○○이가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한덕수가 그러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유가족 L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 참사를 부정하는 발언, 유가족 모욕 등 2차 가해가 만연하지만 국가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혐오는 온라인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녹사평역 추모 공간을 비롯하여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게시되었만 경찰은 오히려 이들을 보호했다. 유가족은 인터넷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이러한 폭력을 맞닥뜨린다. 많은 유가족이 이 부분에서 가장 고통 받는다고 말한다. 일부 유가족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임을 알릴 수도 없다.

2차 가해라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희생자의 동생]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학교 가서도 친구들한테는 말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2차 가해는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댓글을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한 번씩 2차 가해 한다든가... 최고 열 받았던 게 김미나 창원시 의원. 김미나 의원이 했던 그런 부분이, 너무 대놓고 죽인 거예요. 그거는 2차 가해가 아니고 아예 죽인 거예요. 그건 1차 가해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개도 그런, 아직까지도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유가족 O

경찰들이 유가족 쪽을 쳐다보고 서 있어요. 그러면 영상으로 보거나 언론으로 보면 경찰이 유가족을 막아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우리 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만약에 신자유연대가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화가 나서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누구를 막겠어요. 유가족을 막아요. 그러면 유가족 막는 사이에 애네들이 엄청난 말들을 해요. 그럼 유가족은 더 달려들 거잖아요. 그러면 애네는 더 신나서, 애네를 제지하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 누구를 보겠냐고요, 유가족 감시예요. (중략) 그러니까 신자유연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경찰이) 무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개네가 경찰이 없으면 감히 유가족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한단 말이에요.

유가족 L

(2) 반복되는 참사와 깊어지는 혐오

159명의 희생자는 존엄한 생명을 참사로 잃은 피해자들이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반

복되는 국가에서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점점 치밀해지고 깊어진다. 참사 초기 희생자에게는 ‘유혹을 즐기다가’, ‘놀러 갔다가’라는 낙인이 붙었다. 일방적인 국가애도기간 선포는 이러한 혐오와 낙인을 가중시켰다. 온라인에서는 이태원에 왜 갔는지,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지, 외국인인지 따져 물으며 애도에 순위가 매겨졌다.⁵⁶⁾ 이러한 혐오는 온라인만이 아니라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추모 공간에서까지 이루어졌다. 혐오와 낙인 앞에서 유가족은 자꾸만 ‘변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희생자를 기리고 애도하고 추모하며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내 친구들도 개가 나이가 몇인데 이태원을 가냐 이렇게 욕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친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럼 그때마다 내가 변명을 해야 돼요. ‘개는 놀러 간 게 아니고...’

40대 희생자 유가족 T

둘이 어떤 이유로 갔을까, 서로 지켜주느라 못 빠져 나왔을까, 별의별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정도 지나 그분의 유가족을 따로 만났죠. 만나기 전엔 우리가 다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거길 갔느냐에 대해. 그분들도 엄청 긴장하셨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간 거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걸 애들이 인생 즐기러 간 것뿐이고 관광지고,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곳인데, 그게 뭐 상관이나고...문제는 국가가 애들을 못 지켜주는 게 문제지. 책임도 안 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전혀 그런 제 애들 잘못이 아니라고...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가족 Q

2) 마지막 순간에도 지킬 수 없었던 존엄

희생자 시신 인도, 유품 수습, 장례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유가족이 희생자를 애도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보다는 통제의 역할을 했다.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르기까지 유가족은 오랜 시간 영문도 모른 채 장시간 기다려야 했고, 경찰에 가서 조서를 써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다. 많은 유가족이 마약수사라는 부당한 명목으로 부검을 요청 받았다. 또한 희생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 추궁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는 참사 직후부터 희생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국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들이다.

56) 참사 3일째인 2022. 11. 1. 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 ‘용산 이태원 할로윈 축제 특별재난지역 철폐 요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돌아가신분이 아닌데 왜 무슨이유로 특별재난지역, 보조금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비록 해당 청원은 3,384명만의 동의로 성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반응들은 그 외에도 있었다.

「용산 이태원 할로윈 축제 특별재난지역 철폐 요구에 관한 청원」, 『국회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closed/agreeEnded/E1F01D9BE8F36C4BE054B49691C1987F>)

‘경찰서로 조서를 꾸미러 가자’고. 제가 당신 미쳤냐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서에 가서 그거 할 시간이 있냐고, 그럴 마음이 있겠냐고 도대체가 행정부가, 모든 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나라냐고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태연하게 그걸 하고 있겠냐고. 내가 책상하고 컴퓨터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와서 내 앞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짜증내더라고요.

유가족 R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게,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마약 사범으로다가 몰았었잖아요. 마약사범으로 몰다 못해 이 아이가 미성년자니까는 마약은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비행 청소년 정도는 되겠지’, 라는 식으로 밀고 가더라고요. 질문들이 그랬어요.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땠는지, 아이가 집에는 매일 들어왔는지, 안 들어오는 날이 자주 있었는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는 좋았는지,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지, 동생이 있다고 그랬더니 남자 형제냐고 그래서 남자 형제라고 했더니 자주 싸우고 자주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술을 마시지는 않는지,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지 그런 질문을 묻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 질문이 필요했는지...

10대 희생자 유가족 U

검사 포함해서 여섯 분 정도 오셔서 검사분이 ‘지금 SNS 상에 지금 마약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정황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부검을 해보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은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그리고 2차 가해다, 우리 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가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면 뭐 사기를 쳤냐 뭐 마약을 했냐, 우리는 안 한다고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그래서 알겠다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일단 그냥 그렇게 돌아갔고.

유가족 O

반면 유가족이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구조와 이송 과정에 대해 물을 땐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유가족은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알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에 대한 진상은 지금까지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이 스스로 119 구급일지 공개를 청구하며 그 과정을 추적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된 기록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그리고 소방 구급일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거의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신 분들 한 스무 분 정도 제외하면 그냥 이 현장에서 거기(장례식장)까지 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새벽 5시,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송 기록이. 그래서 딱 발견됐을 당시에 맥박이 뛰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응급 처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는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유가족 Y

그래서 이제 오빠가 어떻게 어디서 몇 시에 정확히 사망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때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구급일지 요청을 드렸거든요. 신청하고 다음날 소방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정리가 대조가 안 돼서 대조 작업이 안 돼서 못 준다.

유가족 V

왜 우리 아이가 12시간 동안 (신원확인) 조사를 받았는지도, 마지막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마지막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분명히 아이를 옮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애가 어느 장소에서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때 내가 애를 구급차에 태웠는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걸 안 알려주잖아.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사고가 났고, 이런 절차가 있고, 그런 것도 아무도 안 알려주고.

유가족 L

3) 애도의 권리를 박탈당한 유가족

(1) 온전한 애도를 가로막은 기계적 행정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온전한 애도의 기회는 요원해졌다. 장례조차 평온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장례는 생전 원했던 방식에 최대한 가깝게, 희생자를 기리며 치러져야 한다. 유가족을 비롯한 희생자의 주변인은 장례를 통해 황망한 마음을 달래고 서로를 위로하며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참사 직후 위로금과 장례비 지원을 발표했지만,⁵⁷⁾ 기계적인 비용지원 외에 실질적인 애도를 보장하기 위한 고려는 없었다. 오히려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원금을 위한 증빙을 서두르라는 전화를 독촉하듯이 계속하여, 유가족이 온전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기 어렵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의 동선을 관리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막는 등 유가족을 통제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유가족은 희생자를 잃은 비통함을 위로받지 못한 채 슬픔을 통제 당하며 애도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장례 이후로도 경찰이 유가족의 상담 일정을 파악하고 계속 전화하면서 유가족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물어본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의 공무원 두 분하고 경찰 한 분이 저한테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계속, 저희를, 장례 절차를 계속 지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찰 한 명, 공무원 두 명이 그러면서 자기네 댁에는 장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네가 나와 있으니 뭔가 필요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봐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그곳에 다른 희생자 유가족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족들이 접촉을 하는 것을 막아야 했었던 것 같고, (중략) 저희 친정 엄마가 아이를 보내놓고 밖에 바람을 쐬러 나

57) 「중대본 "사망자 신원 모두 확인"...장례비 지원」, 『MBC』, 2022. 11. 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2628_35752.html)

가고 올면, 그분들이 “여기에 기자분들이 계시니까 이쪽에서 우시면 안 된다”, 걱정을 해주듯이 “기사에 나가니까 여기서 우시면 안 된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갖고, 우시더라도 안쪽에 들어가서 우셔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 기자들이랑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와 있으니 이제 이곳에서 우시면 기사가 나간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게 우리 엄마는 본인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기사가, 외신 기사들한테 나가거나 일반 기사로 나가면 안 됐던 걸... 막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가족 U

다른 장례가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가 되니까, 너무 시끄럽게 울지 말라고. (중략) 근데 그거를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이제 유가족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다 그런 제재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희생자들이 있는데 이제 공조가 될까 봐, 우리를 조용히 조용히 시켰는지... 그러니까 다른 희생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까 봐, 조용히 시켰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략) (희생자 아버지한테) 공무원이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장례비가 지원되니까.” 애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안타깝지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장례비가 지원되니까 그거는 알고 계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아라. 장례비 지원된다. 대신 영수증 잘 챙겨라” 그랬대요.

유가족 L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게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공무원은) 장례비 얘기를 했어요. 지원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얘기해달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를 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모르대요. (중략) (경찰은)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서 내려가든지 여기서 장례를 하든지 해라”라고 하고. (중략)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해서 장례비 받아가라고 언제 받아 갈 거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중략) “받아가야 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텔하느냐.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냐”...

유가족 W

(2) 존엄과 인권을 보장 못한 취재·보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은 재난 보도가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⁸⁾ 그러나 그 이후 반복되는

58)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2014. 9. 16.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재난참사에서 언론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번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참사 직후 수많은 속보들이 쏟아졌지만 이에 대한 인권의 원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유언비어와 참사 현장의 사진, 영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목격담 등을 그대로 받아 쓴 보도들이 이어졌다.⁵⁹⁾ 희생자의 장례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유가족은 직접 언론사에 연락을 돌리느라 조문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에 줄을 잇는 혐오 댓글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치로 일관하며 2차 피해를 더하고 있다.⁶⁰⁾

아직 납골당에 안치도 안 했는데 납골당 정보가 올라와 있다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저희는 되게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너무 좀 충격받고 이랬어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기자들한테 하나하나 다 연락을 했어요. (중략) 그 대처를 해주시는 게 어느 언론사는 바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었고 (중략) 그래서 제가 계속 하소연을 해서 대부분 댓글이 달린 것들은 지우거나 아니면 그 민감한 정보들 있잖아요. 장례식장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지우긴 했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했거든요. (중략)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도 연락이 엄청 안 닿으신 기자. 언론사에 기자분이 계셨거든요. 조선일보 기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제가 이름까지 기억하거든요. 근데 최근까지 또 유족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런 기사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좀 씩씩했어요.

유가족 Y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 있는 동안) 한동안 기자들이 밖에 짝 있었는데 정말 기자들이 원숭이 찍듯이 계속 계속 정말 안을 찍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인터뷰하고 정말 정막이 흐르는데 막 자기네들 휴대폰 벨소리 엄청 크게 해놓고 해서 여기 실종자 가족들이 여기 있고요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저는 나름대로 진보적인 매체들과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었어요. 재난 상황에 언론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없이 모두가 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정말 철저히 대상화 하는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희생자 지인 I

59) 민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이태원 참사' 보도,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준수하라, 2022. 10. 31. (<http://www.ccdm.or.kr/xe/comment/315550>)

60) 유가족에서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참사 관련 댓글 폐쇄를 요청했고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네이버는 여전히 언론사의 자체 선택에 맡기고 있다. 「네이버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댓글창 폐쇄 요청 무시...유가족 고통」, 『아시아투데이』, 2023. 2. 10.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09010005635>)

4)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재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심리적 고통과 이에 수반되는 건강 문제, 희생자의 금융·행정 상속에 따른 경제적 문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음에 따른 생계 문제, 학업과 직업생활 등 일상을 지속해나갈 수 없는 문제 등 일상 전반에 다양하게 걸쳐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족이 겪는 구체적 어려움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단일 창구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며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적 지원은 제공되지 않았다. 유가족이 심리적 고통으로 상담을 요청했지만 장례비 지원 절차를 설명하며 신청만을 독촉하는 등 기계적 행정만이 이루어졌다.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면피용 지원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보의 제공은) 전혀 없었고 그냥 ‘장례비 언제까지 신청해라’ 그런 뉘달하는 전화들, 그리고 문자 이런 거밖에 없었고, 오히려 제가 요청을 했던 거는 그 트라우마 상담이었어요. 그거를 진짜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유가족 Y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우리가 그때 입원 치료 중이었으니까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끊었던 통화가 있었어요. (중략)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또 서울시의 정신보건센터인 것 같은데 거기에 저도 너무 막막해서 애가 이렇게 제 상황을 다 얘기했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보호자로서 애를 돌봐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침을 갖고 애를 돌봐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너무 상투적인 대답으로 “그냥 관심 갖고 잘 챙겨봐 봐라, 애정을 갖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전화를 받고는 그 통화를 길게 하고는 ‘이런 데량은 이제 더 이상 통화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가족 P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하는 거는 다 있었어요. 다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유가족들 들어봐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애네들이 만들든, 그러니까 빛좋은 개살구로 만든거라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엄청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빛좋은 개살구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냐하면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상을 치를 때 장례를 치를 때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치를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유가족 M

또한 이번 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20~30대 수도권 거주자지만, 그것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희생자들도 여럿 있다. 유가족의 경우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등이 있고, 법적 가족이 아니어도 희생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도 있다. 유가족의 연령대와 거주지역, 생활배경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희생자 및 유가족 개개인의 환경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봄을 맡아 했던 희생자의 유가족에게는 체계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인 청소년 유가족이 장례식을 치르고 올 수 있도록 출결 처리를 요청하자 희생자의 사망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본을 요구한 학교도 있었다.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유가협에서 각국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후 구체적인 조치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처럼 알맹이 없는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고통은 다시금 유가족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저는 남편도 없고 혼자 있으니 애가 맏아들이니까, 엄마 경제적인 지원을 이 아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생활비도 다 대주고, 근데 이제 생활비가 딱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설움도 설움이고, 내가 먹고 살 일도 그것도 막막하고,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죽고만 싶고. (중략) 40대 가장의 부모로서 경제적인 문제, 나는 정말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암담해요. 지금 한 달 지금 생활비라는 게 혼자 산다고 그래서 뭐 몇 십만 원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40대 희생자 유가족 T

요 며칠 또 지난주에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희생자에 대한) 명예 졸업장 받은 엄마들은 있어요. 받아서 부대껴서 울고 (그렇죠). 못 받은 나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애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속상해서 울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가족 L

우리 작은 애가 먼저 형을 봤잖아. 애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 작은 애가,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 언제와 무서워”...그런 모습을 그 어린 나이에 처음 보잖아요. 어른들도 시신 보면 무서운데... 형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막 도착하기 1시간 전쯤에 전화와 “아빠 언제 와” 막 이러더라고 “무섭다”고.

유가족 Q

근데 이제 최고 진짜로 어려웠던 것은 사망신고 하는 거. 저희들은 안 하려고 했어요. 벌금 물어 가면서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사망신고를 그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희생자 동생) 학교에서는 언니가 이렇게 되면, 가족사가 있게 되면 일단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 사유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은 (중략) 초본인가 등본인가를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사망으로 되어있는.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젠 언니 일은 언니 일이고, 또 이렇게 서류가 있어야 (출결)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유가족 O

한편 많은 유가족은 다른 유가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마음을 나눌 때 가장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가가 외면한 애도의 권리를 서로의 연대로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가족은 마음 편히 만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참사 직후 유가족이 또 다른 유가족을 찾고 연결을 요청했을 때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모든 요청을 차단했다. 유가족은 스스로 서로를 찾아가며 소통하고 애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으니깐.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얼굴만 봐도 그 아픔이 눈에 보이고 또 “누구 어머님 오셨어요”, 하는 것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동안은 전부 나를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희생자의 한 엄마로서 서로 위해주고 안타까워 하는 게. 참 고맙고.

유가족 T

저는 일단은 유가족 모임, 유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유가족 모임 수 있는 그 장소를 한번 마련하겠다는 그런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 심리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중략) 그러니까 그게 (유가족을 만나는 일이) 진짜 위안이 돼요. 내 딸은 이런 애였는데 또 다른 분 딸들은 뭐 이랬다 그러면 일단은 내 딸보다는 그 딸이 더 애처롭고 더 안타깝고 막 더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데서는 이런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중략) 먼저 일단 1순위로 유가족들 모임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가 (유가족), 연락처를 준다는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나중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절차부터 실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유가족 O

5)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관계이다. 인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존엄

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서로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과 고통을 개인의 것으로 돌리는 국가에서 피해자는 점점 고립된다.

특히 많은 유가족이 사회적 관계가 점차 단절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애도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기도 전에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야 하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장지애의 마음을 누구에게 위로 받을까 막막한 가운데, 참사를 둘러싼 혐오 표현은 그 마음조차 검열하게 한다. 그동안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사 이전의 삶으로, 참사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유가족들은 유가협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위안을 받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 유가협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유가족의 고립감은 더욱 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아내가 직장에서 그냥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가해라는 게 딱 게 아니라 아들을 잃은 그 심정을 물어볼 때 상처 입는 말들을 본인들은 하는데 그제 상처를 준다든 걸 모르고. '아들 잃은 심정이 어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공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중략)

처음에 거의 두 달을 식사를 못했죠.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기운이...허깨비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허깨비.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도 넘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그냥 기가 없어요. 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들은 저희 입장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편안하게 하니깐 지금은 이렇게 말할 하니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세상인 거예요. 예전의 제가 아니더라고.

유가족 Q

저는 아직 친구랑 지인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다시 만나보자고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만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웬지 그 사람들은 저를 위한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한다고 저한테 하는 말들이 괜히 제가 못 나서 그런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유가족/생존자 X

거의 단절이에요. 지금 유가협 외에 모든 관계가 거의 단절됐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단절되고. 그럴 시간도 없고. 친구 만나고 할 시간도 없어요. 저희는. 그냥 거의 여기에 다 매몰돼 있는 상태. 또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스케줄이 갑자기 막 생기고, 뭐가 생기고, 갑자기 내일 국회 가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다른 생각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유가족 M

6) 연결을 통한 치유와 회복

혐오와 낙인, 국가의 지원 부재와 방해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유가족에게 힘이 된 것은, 다른 유가족, 생존자와의 연결과 애도와 진실 규명에 함께 하는 시민들의 연대이다. 특히 국가의 방해로 서로의 존재도 확인할 수 없었던 유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곁이 되어준 것은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마음을 모아 2022년 12월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첫 유가족 간담회에서) 한 열 가족인가 이제 이렇게 와 있었어요. 간담회장에 다 처음 보는 분들이죠. 다 처음 보는 분인데 앉아서 일어나서 다 자기 소개를 하고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때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이상한 경험했던 게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듣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중략) 저는 이제 간담회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위로를 하는데도 그게 너무나 다른 느낌이 드는 게 사실 이게 딱 일이 이게 이제 벌어지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서든 어디든 제일 오래된 지인들이나 오래된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전혀 안 됐거든요. 전혀 그런 위로도 안 됐고. 그냥 뭐 그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서 나를 위로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그냥 훌러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다 지금 근데 이렇게 생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하고 한마디 던지는 게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유가족 M

제가 사실 시민단체 활동을, 전문가 시민단체이긴 한데 활동을 해왔었어요. 그런 걸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거는 아니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서 보니까 너무나 따뜻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많이 감동받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중략)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자꾸 자꾸 만나는 게 힘든 와중에도 조금씩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듯한, 몸도 좀 따뜻해지고. 목 마를 때 물 마시는 거랑 추울 때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유가족 P

이와 같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연대로 희생자를 기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동시에 또 다른 참사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유가협 결성을 문제삼고 불필요하게 정쟁화하는 발언⁶¹⁾들이 나오거나 애도와 연대

61) 「권성동 "이태원, 세월호와 같은 길 안 돼"..."유족 왜 육보이나" 반발」, 『한겨레』, 2022. 12. 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1068.html)

의 공간인 합동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방해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는 유가족의 치유, 회복과 이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2. 생존자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게는 언제나 ‘피해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하

는 데 있어 동료, 공동체, 사회로부터 신뢰를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피해자의 말하

기는 피해로부터 회복은 물론이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말이며, 진상 규명으로 안내하는 길이다.

참사를 그 사회의 상처와 고통으로만 남기지 않고 더 나은 삶이 가능한 세상으로 연결시키는 힘

이기도 하다.

참사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충격과 손상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의료행위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

다. 피해자의 저마다 고유한 특성과 상황 등을 포함하여 생애전반을 고려한 사회의 지지, 지원과

연결될 때에야 비로소 그 피해로부터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말하기가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말하기를 통해 사회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사회가 작동하는 구조에서 끊

임없이 성찰하여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10.29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이를 잃은 우리가 더 많은 생

존자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전해듣기조차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은 생존자들의 용기에만 기대서

는 안 될 심각한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참사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손상

생존자들은 참사 당시 장시간 압박을 당하면서 여러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다. 또한 참사 현장에

서 겪은 고통과 함께 간 가족, 친구를 잃은 정신적인 고통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 신체적 부상과 후유증

참사 보름 후인 11월 14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가 158명, 부상

자가 196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0명은 당시 입원 중이었다.⁶²⁾ 이러한 부상자 수

자는 이후 의료비 지원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더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12월 10

일 기준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381명이었다.⁶³⁾

많은 생존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참사 당시 수많은 사람들

62)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 늘어 158명…부상 196명』 『한겨레』, 2022. 11. 14.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7075.html>)

63) 11월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중상 환자는 33명, 경상은 124명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생존자들이 드러났

다. 기존 이태원 참사 부상자로 알려진 196명 외에도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각 시·군·구에 신고한 122명, 건강보험공단(건보

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2명이 포함된 수치다. 이들을 합하면 320명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준 이 수를 이태

원 참사 부상자 수로 집계·관리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381명엔 이뿐만 아니라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

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61명도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환자·가족 381명 신체·정신치료』, 『안전저널』, 2022.12.19.
(<https://www.anj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96>)

이 밀착하면서 받은 압박의 정도는 상당했고 이로 인해 눌러있던 신체 부위에 신경 손상을 입기도 했다. 인파에 깔렸던 하반신 등의 말초신경이 압박을 받으며 신체 일부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장시간 눌림으로 근육이 용해되기도 했다. 타박상이나 골절을 당하기도 했다.⁶⁴⁾ 이번 조사에 참여한 생존자들의 피해 정도도 다양했다. 몇 달씩 입원한 사람들도 있고, 다음날 퇴원한 사람도 있다. 단순 타박상인 경우도 있고, 다리에 가벼운 마비가 온 경우도 있었다.

뒤에서 워낙 밀다 보니까 제가 발이 뒤로 이렇게 꺾여 있었는데 이것도 필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압박이 엄청 심했어요.(중략) 정형외과 가서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단순 타박상이라고 해가지고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한 1, 2주 정도 치료받고 다행히 괜찮았어요.

희생자 지인/생존자 N

저는 이제 여기 마비가 왔어 가지고...하반신 쪽에. 아직 안 돌아온 신경들이 좀 있어요. 계속 물리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런 거예요. (중략)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안 움직이는 근육들. 좀 아직 안 돌아온 부위들 위주로 하고. 이제 기본적인 근육이 여기 밑으로 허리 밑으로 짝 이렇게 녹았었어요. 이게 산소가 안 통해서 근육이 다 없어지고 녹았었는데. 그래서 코어 근육도 되게 부족해서 그런 운동도 하고 기존에 있던 근육들 되돌리는 것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생존자 G

이제 제가 오른쪽 근육이 다 파열이 됐어요. '횡문근 용해증'이 근육이 터지면서 근육 효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신장이 단백질을 걸러야 되는데 근육이 파열이 되면서 거기서 단백질 효소, 근육 효소들이 막 나오면서 신장에 부담이 가서 소변 색이 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여가지고, 그걸로 해서 내과로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수치가... 처음에 응급실에서 수액을 한 세네 팩을 맞았는데도 수치가 안 내려가고 점점 더 올라가서 입원을 했죠. 양팔에 수액 달고.

생존자 H

적절하고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압박되어 있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부상의 정도가 커지기도 했다. 특히 참사 당시에는 큰 부상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근육 손상으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참사 초기에 구조를 받고 움직일 수 있었던 한 생존자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야 했고, 그곳에서도 부목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64) 「[Q&A] '이태원 참사' 36명 입원중...부상자 상태와 치료는?」, 『한겨레』, 2022. 11.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5324.html>)

앞에 있는 경찰분한테 가서 저 좀 혹시 택시 탈 수 있는 곳으로라도 데려다주실 수 있는지,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지금 아마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여기 너무 혼잡해서 교통도 다 막아났고 경찰차도 지금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지금 구급차도 이미 다 차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중략)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파출소라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서 이동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중략)

저한테도 아가씨도 정신 차렸으면 나가라고 멀쩡한 것 같은데 (질문자 : 경찰이?) 네 멀쩡한 것 같은데 나가라고 해가지고 저 저기 깔려있다가 나온 거다 깔려있다가 나와서 지금 보호자 기다리는 중인 거다 했더니 ‘아’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중략) 그리고 살짝 의문궁금증이 들었던 게 왜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나 간단한 부목 대는 법이나 아니면 테이핑 하는 법이나 그런 건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대로 익히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쳐도 그 경찰서에 가서 혹시 저 지금 발이 많이 안 좋은데 부목 그 응급처치는 됐고 그냥 부목이라도 댈 수 없겠냐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의료조차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존자 H

한편 참사의 후유증은 겉으로 보이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지속되기도 한다.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 조치가 끝났음에도 시시때때로 느껴지는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생존자도 있다. 또한 심정지로 뇌손상을 현재까지도 입원중인 생존자의 경우 가족이 고액의 간병비를 온전히 부담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정부에서는 간병비 지원을 결정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이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단기간의 부상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입원, 간병, 재활 및 일상 회복 전 과정에서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실 재활로 나아질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왔어요. 왜냐면 재활에서는 활동에 대한 것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고통이 올라오거나 기온에 따라서 고통이 발생하는 거는 재활로 나아질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략) 회복되길 기다려야 하는 과정인데 당장 저는 발이 이러니까 원래 하던 알바를 하기에 도저히 있어야 되니까 못하고 뭐 운동을 하기에 도저히 더 잘못될까 하는 그것도 있고 뭘 하려고 해도 사실 항상 지장이 있어요. 밥집을 가도 앉아 있고 있으려면 소파 가가지고 다리를 뻗고 밥을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영화관도 못 가고 그냥 대부분이 집에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운전을 해주면 제가 뒷좌석에서 이제 다리를 피고 가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이

65) 「이태원 참사 간병비 '절끔 지원'...'참사 반복돼도 '땀질' 여전」, 『경향신문』, 2023. 4. 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051818001>)

항상 제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주변에서 만나고 제가 자기가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으로 가서
놓고 차로 태우러 다녀주고.

생존자 H

(2)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참사는 신체적인 부상 외에도 심리적인 손상도 야기했다. 많은 생존자들이 참사 당시에 받은 정
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참사 이후에도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특히 참사 현장 인근
을 지나가거나 사람이 밀집한 곳에 갈 때면 숨이 잘 안쉬어 지는 등 공황발작을 겪은 이들이 많이
있다. 참사 당시의 장면이 떠올라서 잠을 제대로 못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다. 이러한 트라
우마는 사람에 따라서 장기간 지속되기도 한다.⁶⁶⁾ 따라서 참사 직후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이 요구된다.

외상은 없었는데 근데 저는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서 사고 이후 몇 주 좀 지나서 제가 독
서 모임이 있었는데 ..(중략)..회식 참석을 했는데 ... 클럽 분위기 식당을 예약을 했다고 하
는데 네이버 지도가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보면 그 길을 딱
지나가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하필이면 여기에 예약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
서 처음으로 공황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물론 지인들인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
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별일이 있는 것도 아닌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심장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생존자 F

물건을 좀 잃어버렸어서 새로 사려고 백화점 갔는데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어지고 숨 쉬기가 좀 힘들어서 그때 바로 나왔거든요. 사지 못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사
람 많은 데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지하철도 타고요. 대중교통도 처음에는
못타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생존자 N

처음에 수면제 복용 받을 때 수면제 제가 워낙 어디서든 잘 자던 타입이어서 하다못해 노래
방에서도 졸리면 자는 애였어서 수면제 처음에 처방받을 때 의존하게 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러면서 수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받긴 하긴 하는데 우느라 못 자니까 이거에 의존하
게 될 일이 있나 싶었는데 지금 요새 좀 느꼈어요. 제가 수면제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게 수
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66) 세월호 참사 생존자의 경우 참사 후 7년이 지나도 지속되는 트라우마로 최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7년 지나도 트라우마 지속”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배상 소송 제기』, 『KBS』, 2021. 4. 1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61676>)

(질문자 : 계속 그때 장면이 떠오르거나 그런 것 때문인지) 그런 거죠. 그거랑 관련해서도 이제 그 상황 자체도 나한테 너무 벅찬데 평소에도 그냥 당연하게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살짝 흔들거리다가 마는 상태였는데 지금 저는 그냥 평소에도 지금 너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데 그런 게 날아오며는 아예 떨어질 것처럼 무섭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여기에 약간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많이 아슬아슬한 상태가 되죠.

생존자 H

한편 생존자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유가족도 있다. 또한 생존자는 현장에서 참사를 목격한 사람이거나 구조활동에 참여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생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참사 현장의 경험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를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 등이기도 하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서 그게 된 거였죠. 누나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오기 힘들 거다 그냥 가자. 친구분들이 또 그래도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렇게 된 거죠. 누나가 혼자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고통을 아니까. 고통을 알기 때문에 누나가 얼마나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누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에 사람들 많으면 조금 꺼려져요.

희생자 지인 / 생존자 F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다시 요정이 나타나서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살고 있죠. 전화가 안 오고 카톡이 안 올리는 게 그게 좀 마음이 많이 허전하죠. 울리던 핸드폰이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밤에 또 전화 안 하고 그래서 집에 또 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밤에 항상 자기 전에 통화하고 하는데 그 허전함이 제일 크죠.

희생자 지인/생존자 N

2) 생존자로서 드러냄의 어려움

위와 같이 생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경험하고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이 참사의 생존자임을 드러내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참사 피해자를 권리의 침해가 아니라 참사로 받은 고통의 정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언론이나 주변의 시선 속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이해받지 못하곤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희생자에 비해 그래도 살아남았기에 다행이라는 인식이 생존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게도 만든다.

피해자나 생존자들이. 그 이유가 너무 잘 살고 일상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조차도 약간 희미해지고 해서 안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데. 죄책감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돼요.

생존자 G

(질문자 : 가족들하고는 어떤 지금도 약간은 조금 거리감이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많이 속상하죠. (가족들이) 뭔가 ○○을 잃었다는 그 슬픔을 같이 공존할수 있으면 좋은게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저한테 안도하는게 많은 거는 저도 이해는 하거든요. 제가 자식이니 까.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많이 서운하죠. 그래서 그거를 누나한테 많이 말을 했거든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사유 때문에 집에 있기 싫다' 해가지고 누나가 다 알고 누나 집에 와서 지내라고 그러고 아마 그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엄마 아빠가 더 눈치 보고.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속상하고 짜증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게 맞다고 맞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희생자 지인/생존자 N

이와 같이 생존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지점은 다른 재난참사의 경우에서도 일어나곤 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생존자들은 '살아났으니까 됐다'라는 주변의 시선과 이를 강화하는 언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⁶⁷⁾ 하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다른 참사에 비해 차이나는 지점이 있다. 바로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와 낙인이다.⁶⁸⁾

(1) 혐오와 낙인, 국가의 무책임으로 가중되는 고통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공청회에서 한 생존자가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유흥과 밤 문화, 외국 귀신 파티 문화가 아니라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 “누군가에게 일상이었던 이태원과 헬러윈이 왜 아직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⁶⁹⁾ 이 말과 같이 이

67) 조사단은 세월호에 탔다가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생존자들은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식의 시선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중략) 생존자들은 이런 악몽을 떠올리며 언론과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했다. 한 생존 화물기사는 “내가 원하는 말은 언론에 나온 적이 없다.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라며 “너네들은 살았으니까 됐다는 시선을 언론에서 심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살았으니 됐다? 세월호 생존자들의 상처」, 『미디어오늘』, 2015. 7. 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97>)

68) 과거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성수대교 붕괴(1994년)나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화성씨랜드 화재(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2003년)에선 적어도 '희생자 탕'을 하는 발언은 공적 공간에서 터져나오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도 심각한 2차 가해가 있었지만, “미안합니다”라는 목소리가 한국사회를 뒤덮은 다음이었다.

「이태원 참사 곧 100일...그대들 잃고 우린,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주간경향』, 2023. 1. 29.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290830011#c2b>)

69) 「'이태원 참사' 2차 공청회... "총리·장관·의원이 2차 가해"」, 『KBS』, 2023. 1. 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99152>)

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국가의 무책임한 대응과 반복되는 참사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회구조에 있다. 그럼에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침묵하고,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현장의 특정 개인을 악마화하는 왜곡·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생존자는 참사의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찍히며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한 달 지나고 나서 우연치 않게 기사를 그냥 클릭해서 보게 됐는데 댓글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의 반대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국민이 저희 편인 줄 알았거든요. 정반대의 표현들을 써놔서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정부의 잘못된 걸 당연히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욕을 하고 있어서 왜 놀러 가서 그런 거를 희생자라고 표현하냐 그런 것 같아서 놀러가다가 죽었으니 당연히 그거다 이런 댓글들이 너무 아파서 바로 꺼버렸죠.
희생자 지인 생존자 N

저는 사실 주변 주변에 알고 지냈던 친구로부터 가해자 소리도 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중국 카카오토티리라고 불리는 그 위챗 모먼트에 제가 그 중국어로 글을 잠깐 간단하게 글을 올렸어요. 많이 힘들다고 누가 인터넷에 악플을 캡처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댓글로 '언니 나는 생존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존자 E

저희도 이제 좀 그런 분들(생존자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략) 선뜻 나서고 싶어도 나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렵대요. 뭔가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그 말들이... 하다못해 병원에서도 그랬다면서요, 거기를 왜 갔느냐고. 치료 받으러 갔더니...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도 유가족, 생존자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자비 들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중략) 왜 그 아이들이 거기 간 게 잘못이 돼야 되느냐고요. 그 말부터가 잘못이에요. 왜 거길 갔어? 왜 거기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나라에서 해마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중략)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생존자들도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유가족 U

이와 같이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된 생존자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킨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 때문이기도 했다. 참사 초기 SNS를 중심으로 '토끼 머리띠를 쓴 사람이 사람들을 밀었다',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바닥에 무언가를 뿌렸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허위 소문이었음에도 경찰은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을 CCTV로 확인하여 참고인 조사

를 진행했다.⁷⁰⁾ 참사 당시 신고를 한 생존자에 대해 검찰이 연락해서 토끼머리띠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참사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국가의 대응 앞에서 생존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질문자 : 아까 검찰 경찰 조사 받으셨다고 그거는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친구들한테 다 연락 왔더라고요. 저희가 신고를 접수를 해서 아마 아셨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뭐지 주도했던. (그때 토끼 토끼띠 머리띠?) 그거를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왜 조사하나 왜 이제 와서 조사를 하시냐 물어봤더니 그거를 해라라고 명령이 와서 조사를 한다 그런 식으로. (중략) 그것도 뭐.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죠. 왜 우리가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경찰에 가서 이거를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개네들은 당연히 경찰 일이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뭐 생각이 들었지만. 당사자인 저희들은 이걸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었죠.

생존자 F

약간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히틀러가 유대인들한테 그 다윗의 별을 달게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원 생존자라는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는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제 편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가해자 소리 듣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희생자 모욕하는 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중략) 유가족들한테 대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화도 좀 많이 나고 생존자들 대하는 것도 기분이 매우 나쁘고 이거를 약간 양치기 소년이 양몰이를 하듯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한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생존자 E

이처럼 생존자는 참사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임에도 국가의 무책임과 2차 가해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었고, 결국 안타까운 159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참사 초기부터 혐오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었다.⁷¹⁾ 그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희생자 본인의 의지 문제로 이야기하며 또다시 2차 가해를 행하였다.

70) 「경찰, '토끼 머리띠' 남성 참고인 조사」, 『한겨레』, 2022. 11.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458.html)

71)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 공유를 절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정부가 2차 가해 세력과 선을 긋고, 2차 가해의 주된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가 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를 만들었나」, 『뉴스타파』, 2023. 2. 15.
(<https://v.daum.net/v/20230215140001193>)

(2)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생존자의 이야기

이와 같이 많은 생존자가 고통의 위계와 혐오, 낙인, 국가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참사의 피해자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생존자들이 있다. 함께 이태원에 갔던 친구, 지인의 유가족을 찾아가 그 날의 경험을 전달해준 생존자도 있다. 이번 참사의 경우 발생 시각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이고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급박하게 진행되었기에 참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생존자의 경험과 진술을 듣는 것은 생존자가 겪은 인권침해를 드러내고 생존자의 회복을 돕는 것과 더불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처음에 피해자 인터뷰가 증언도 없고 인터뷰도 없었어요. 구조자 인터뷰만 있지.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피해자랑 연락이 닿고 싶으니까. BBC가 딱 그때 제일 빨리 아마 피해자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BBC 측에 메일을 썼어요. 나도 피해자인데 답장이라도 달라고. 그분하고 연락처를 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일단 내 연락처를 여기다 쓸테니까 그분한테 전달을 해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메일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BBC 측에서는 없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기자들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생존자 피해자들 중에 연락되는 분 있으면, 연락이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면 연결해 달라 해가지고.

생존자 G

우리 이제 그 딸의 남자친구가 목격자잖아요. 현장에 있었고 현장의 목격자였고 가장 생생하게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한 기억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지금 유가족들은 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해하거든요. 현장에서 사망했는지 병원을 가다가 사망했는지 이송 중에 사망했는지 그런 거 자체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개가 있었기 때문에...(중략) 그 시점에 개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상하던 내용과 너무 틀려가지고 너무 근데 그 부분이 엄청 많이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보도상으로 그때 나올 때는 막 너무 밀려서 넘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압사당하고 이제 이렇다라고 했고 저도 그 상상에 계속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선채로 그냥 갔다는 거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유가족 M

그럼에도 여전히 참사 피해자라면 으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해자로서의

서사는 이러한 고통의 서사라고 보는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큰 손상을 경험하지 않은 생존자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존자의 경험과 서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스테레오 타입에 사람들이 갇혀서 인식하고, 그게 좀 싫어요. 저는 특히 인터뷰 요청할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느끼고 계신 고통이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다 이해하고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렇게 고통이, 물론 몸은 안 움직이지만 그렇게 고통을.... 그래서 나는 그런 식 지금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느낄 거라는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계신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생존자 G

3) 치료 및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의 부족

(1) 신체적, 심리적 손상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정부는 참사 이후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⁷²⁾ 또한 11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대1 매칭 공무원과 연계하여 유족과 부상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고, 치료비와 구호금 지급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1대1 매칭은 장례비 지원에 한정되었을 뿐이다.⁷³⁾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재난구호 업무에는 부상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일대일 맞춤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참사에서 이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⁷⁴⁾

생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불충분했다.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생존자들이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야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생존자의 경우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실망과 분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 생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72)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절차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11. 7.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7857#visualNews>)

73)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락이 닿아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부상자와 유가족 수를 파악한 것”이라며 “일대일 매칭은 장례 지원만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나 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로부터 취합이 어려워 현황 자료 제공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대1 지원한다더니...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 지원 현황은?」, 『KBS』, 2023. 1. 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99133>)

74)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편람』, 2016. p61.

뉴스에서 보고, 제가 아이가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입원비 정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응급실에서 입원실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돈을 내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거 다 지원이 되니까 내지 말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거나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중략) 복지부. 복지부랑 전화 통화는 그것도 연락이 온 거라기보다는 제가 그 입원비 문제나 퇴원하고 나서 다시 또 외래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서 서류가 맨 처음에는 진료비를 내라고 했다가 내지 말라고 했다가 안 내도 되면 또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병원에서도 그런 절차나 그런 규정이 딱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복지부 그 담당자 전화번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 P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도 이거 구청에다가 전화했을 때도 자기들도 모른다고.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담당자도 모르고, 있지도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느낌에는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이걸 맡은 느낌. 한 명이 맡더라고요. 여자인데. 근데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주고.

생존자 F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태원 상담받는 걸 아니까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고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 같은 거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됐죠. 피해자 신고를 사고가 나고 한 2주 뒤 거의 바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인가 제가 먼저 치료비 냈던 거 다시 좀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자동적으로 나라에서 내년에도 (중략) 저도 솔직히 처음에 많이 고민했거든요. 받기 싫어서. 정부 돈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생각이 바뀌게 내 돈까지 쓰면서 하는 거 너무 억울하다. 나라가 잘못된 건데 나라가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희생자 지인 / 생존자 N

또한 생존자 중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1대1 매칭이 아닌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겪는 생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한편으로 기존에 소통하던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면 다시 새롭게 소통을 해야 하는 형식적인 지원체계로 인하여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해 준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동사무소 가서 제가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가서 신청한 거긴 한데 그 사진을... 현장에 있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라 생존자인 거를 증명하라고 이런 얘기를 안 했다가 몇 주 후에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서 ○○시청측에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서 중앙정부가 생존자인 거 사진 보내라고 했다고 그날 같이 카톡 대화 내용도 가능하고 그냥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아무것도 다 괜찮으니까 현장에 있었던 걸 증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존자 E

그 담당자가 바뀌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한 사람이 지정이 돼서 그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따로 이태원 참사 전용으로 해서 뭐가 설립이 돼서 자기는 이제 여기서 자기가 그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원래 일을 하고 거기는 또 다른 담당자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생존자 H

(2) 직업, 학업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부재

생존자들이 참사로 인해 받은 심리적 충격은 이후의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생존자 중에는 일 또는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부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생활비, 교육비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은 부재했다. 그 결과 직장을 다니는 생존자의 경우 기존의 연차나 병가를 사용해서 회복기간을 가져야만 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단기간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 역량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움에도, 회사에서 배려가 없는 경우 모든 부담은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진다.

(질문자 : 그러면 입원했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이나 이런 게?)

제 연차를 써야 되는.

(질문자 : 개인이 다 감수한 거네요. 그거와 관련한 보상은 정부에서는 없었나요?)

딱 치료비. 영수증만 청구해서 그것만 치료비만 받고.

(질문자 :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 연차 사용이.)

저 연차도 수당도 까이는 거니까 어쩔거나

생존자 F

조금 쉽지는 않았고요. 제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때 100%를 원할 거고 저는 50%도 할까 말까 한데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하지 못하니까 근데 월급은 제 월급으로 받고 그거는 좀 회사에 민폐다 싶어서 휴직을 그래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도 그렇고 네가 100%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게 당연한 거다 동료들도 그거를 기대하

지 않을 거다. 그냥 천천히 올라와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실제로 팀원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천천히 적응 중에 있어요.

생존자 N

마찬가지로 학생인 생존자가 학교 수업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역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원과 치료로 인한 생활비의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책도 없다. 알바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사회적 비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원받는 것 자체를 상상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알바를 하고 있었고 학교에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바는 당연히 어찌됐어요. 제가 이번에 바로 사장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사장님 제가 지금 그 사고에 깔려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당장 못 나갈 것 같다. 하고 연락드리고 이제 학교 측에도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도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해가지고, 학교 출석이랑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회복에만 전념하라고 그런 거는 학교 측에서 다 출석 문제나 그런 거는 학교 측에서 다 공결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복만 하라고 해서. 사실 저는 한 달이면 퇴원해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12월 23일에 퇴원을 했어요. 이미 종강을 하고 또 한참 뒤죠. 그래서 기말 같은 것도 그냥 교수님들께서 대체 과제를 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레포트 쓰는 형식으로 해주시고 해서 학교는 그렇게 처리가 됐죠.

생존자 H

(3) 생존자의 연령, 장애, 언어 등 다양한 특성 고려 없음

참사 당일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태원 지역에 있었던만큼, 생존자들의 연령, 거주지역 등은 다양하다. 생존자 중에는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등 참사 이후 지원을 함에 있어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2년 10월 31일,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생존자 중에는 차별없는 지원은커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사람도 있다.

이게 제가 같이 갔던 일행들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외국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중에 한 명이랑 저랑 친해져서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한 2주쯤 뒤에서 그 친구랑 ○○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슬쩍 한번 물어보니까 사고 이후에 너네 또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목격자 그 친구는 정확히는 목격자인데 생존자라기보다는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고 (중략) 그냥 지원받는 거를 몰랐다가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

니까 그냥 한국말도 잘 못하는 친구기도 하고 아마 뉴스 같은 이런 거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생존자 E

나아가 청소년 생존자에 대해 참사 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동석도 없이 장기간 조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경찰이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에는 보호자 연락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하며, “아동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생존자는 경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참사의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소년 생존자를 홀로 불러내어 추궁하듯이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에 상담을 명목으로 생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다.

병실에서 아이랑 둘이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경찰이 찾아와서 잠깐 ○○이를 면담하길 원한다 조사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때 아이들 친구들이 아직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거 알아보려고 참고하려고 ○○한테 뭘 잠깐 물어드릴 게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략) 그리고 나서 애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데리고 나간 다음에 이제 한 한 50분 정도 있다가 그리고 온 거죠. (중략) 근데 아니 물어본 게 아니라 ○○이가 굉장히 기분 나빠 하면서 저한테 짜증을 낸 게, 우선은 추궁을 하는 거였을 거예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아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밤늦은 시간에 친구들이랑 유흥가를 어쨌든 놀러를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어른이 자기한테 거기 왜 갔으며 거기서 뭐 했으면 아마 계속 그런 거를 물어보거나 그랬을 건데, 그런 게 자기가 추궁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이 핸드폰을 제가 보니까 ○○이 메시지 창에 경찰 한 분이 연락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경찰분이 아니라 이분은 마포구 경찰관의 무슨 상담 프로그램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뭘 아무튼 알려준다고 그냥 전화를 했었나 봐요. (중략) 제가 화가 나는 게 상담을 하거나 뭘 하건 간에 어쨌든 애는 보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중략) 상담 때문에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자기 또 전화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제일 화가 나기도 하고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 P

한편 참사로 인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심리검사, 치료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병원에서 장기간 압박을 받았던 생존자에 대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장기간의 검사를 실시했고 이것이 결국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가족의 지적처럼 개별 병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부재 때문이다.

그 심리상담 검사가 사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게 시간이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막힌 여기서 이 정도 막힌 방 거기 안에 그 검사 선생님이랑 들어서 네 시간을 있는데 문제를 제가 봤을 때 한 몇 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계속 푸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얘기하면 얘기하고 그걸 4시간을 검사를 시킨 거예요 제가. 11월 중순, 이십 며칠에 그러고 나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그 병원 옮기는 얘기를 하자고 한 예약 일자가, ○○이가 죽은 날이 월요일인데 그 주 목요일이었어요. (중략) 그런 검사는 저희 아이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사실 그게 좀 있었다라면 이게 뭐 민간 병원에서 하더라도 그 틀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됐을 텐데 그렇게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 P

4) 연대와 연결을 통한 회복

이렇게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생존자들은 친구나 다른 생존자 간의 만남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나누고 회복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생존자들끼리 함께 연결되어 서로의 피해를 보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모임을 갖는 이도 있고, 이전과 같이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위안을 얻는 이도 있었다. 이러한 주변인과의 연결과 연대는 생존자가 참사 이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사실은 저도. 뭐, 저는 어쨌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이 상황을 받아 같이 겪었고, 저희도 매주 보고 얘기도 많이 하고, ○○도 마찬가지로 ○○를 통해서도 같이 계속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는 이게 그냥 심리 상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있어서 따로 하진 않았어요.

생존자 F

가장 제일 친한 친구들 몇 명만 만나고, 그 외 친구는 잘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편한 친구들만 만나고 요새는 좀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거의 자기 직전까지 박혀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바로 골아 떨어지는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친구들이 ○○이에 대해서 저한테 너무 조심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대해줘서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희생자 지인/생존자 N

희생자의 지인인 생존자의 경우 유가족들이 힘들어 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유가족에게 다가가기 조심스러워하기도 한다. 생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유가족도 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가까이 다가가기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같은 참사의 피

해자로서 연결되고 곁을 나누는 과정은 소중하다. 이러한 연결과 연대,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도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저 혼자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점차 가족분들 ○○이 가족분들이랑 좀 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49제 때 처음으로 이제 가가지고 다 같이 추모제 하고 해서 저는 많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가족분들이랑 함께하고 있구나 다 같은 똑같은 슬픔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그때 이제 난 혼자가 아니구나 다들 저를 감싸주고, 제가 희생자 가족이 아니고 그냥 생존자인데 저를 포용해 주시구나. 유가족분들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 지더라고요 처음.

희생자 지인/생존자 N

생존한 친구가 있어요. 학교 친구죠 학교 친구인데, 장례식을 치르는 날 아버님 한 분이 오셔서서는 막 우세요. 우시면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실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님 왜 이러세요라고 했더니 그 생존자 아이의 아버님이셨던 거예요. 집에 그냥 있자니 도저히 죄책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이만 살아와서...아니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으시냐고 너무 다행스러운 거라고 이거는 미안한 게 아니라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이 아이가 살아와서, 너까지 만약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러면 더 절망스럽고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가 살아서 왔다고 해서 그나마 좀 더 낫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된다. 단지 ○○이만 끝까지 지켜달라.

유가족 U

그러한 어려움에도 서로 만나려고 애쓰는 생존자들이 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다. 글을 쓰기도 하고, 추모제에 가기도 하면서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애도하기도 한다. 연결을 통해 애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서로 위로하려는 노력은 적극적 치유 과정이자 공동체적 해결의 과정이다.⁷⁵⁾

75) 「2023.2.25. 뉴스를 봐도 절대 알 수 없는, 그 날의 '1초' - [토요일 오후 6시 34분] 생존자와 유가족의 맞닿은 마음 "그날의 초침을 꿰어보고 싶어요"」, 『오마이뉴스』 2023. 2. 2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2676)

3. 구조자

참사 당일, 18시 34분에 최초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20시 8분 이태원 파출소 32명이 출동했지만 인구 밀집을 해소하고 참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22시 31분 현장에 용산소방서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통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시각인 11시까지 재난 대응 최고 책임 기관인 대통령실·행정안전부는 보이지 않았다.⁷⁶⁾ 이렇게 국가가 없었던 시간 동안 희생자와 생존자를 돌보며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이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현장과 그 인근에 있던 시민들과 상인들이다. 구조자들은 참사를 겪고 목격하고 도움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섰고, 급박한 참사 현장에서 국가의 공백을 메웠다.

참사 이후 언론은 ‘시민영웅’, ‘의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조자를 조망했다.⁷⁷⁾ 물론 구조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의 가치에 사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참사의 생존자이자 목격자이기도 하기에 트라우마, 무력감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지원에 관한 정보 미비, 피해자에 대한 혐오,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구조자의 문제는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일부 언론은 구조자의 피해를 다루었으나⁷⁸⁾ 이들의 피해는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은 대상으로 ‘대응인력’을 구분하고 있기는 있으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 소방 등 공적 구조자와 의료인 일뿐 시민 구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⁷⁹⁾

1) 참사 현장에서 국가의 공백을 채운 사람들

참사 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사람이 압박으로 인해 호흡이 멈추고 심정지가 온 3~5분 내에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CPR 방법을 알고 있는 구조자들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진행했다. 심폐소생술은 2명 이상의 구조자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권고되는데, 참사 당시 부족한 소방·경찰 인력을 시민 구조자들이 교대로 메웠다. 구조자들은 골목에서 사람들을 빼냈고, 구조자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베개처럼 만들어 피해자를 눕히기도 했다. 쓰러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CPR 및 인공호흡을 진행했고,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AED)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태원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지역상인은

76) 「10월29일 ‘골든타임’ 11시까지…대통령실·행안부는 없었다」, 『경향신문』, 2022. 11. 28.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281626001>)

77)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이태원 참사 속 시민 구한 의인들」, 『쿠키뉴스』, 2022. 11. 2.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102005>)

78) 「트라우마 겪는 이태원 참사 생존·목격·구조자…당신과 연결돼 있다고 말하세요」, 『한겨레』, 2022. 11. 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6294.html)

79) “대응인력”은 구조인력, 의료진 등 대응인력을 의미함”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2022. 10.

구급차가 들어오기 유리하도록 교통정리를 하여 현장 구조 활동을 하였다.

현장에 5분 만에 도착했어요. 우리나라 되니까 빨리 올 수 있었죠. 오자마자 아비규환이어서 사람 구출하는데 에너지를 썼어요. 뒤에서 엮어져 있는 사람들 꺼내기도 하고 꺼낸 사람들 인공 호흡하기도 하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소방관 두어명, 사복경찰 3~4명이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시민과 상인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길을 뚫는 게 목표였고, 직선도로가 있는데 한강진역 방향의 길을 트느라고 몇 친구들과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길 여는데도 20-30분 걸렸어요. 길로 소방대원도 오고 경찰도 오고, 길 틈 사이로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지역주민(상인) B

여자분은 의식은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는데 이제 눈도 뜨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이제 몸이 축 늘어진 상태에서 옷은 싹 다 젖어 있었고 (중략) 여자분 제가 안겠다고 안아서 대로변까지 뛰어내려가서 대로변에 이제 눕혀드리고 이제 방탄복을 제가 그때 입고 있어가지고 그거 벗어서 이제 머리에다가 베개처럼 대 드리고 물 달라고 해서 물 마시게 해드리고 담요 덮어드리고 그러고 저는 다시 뛰어 올라갔거든요.

(중략)

경찰도 못 봤고 그 분들은 좀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왔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CPR 할 때 당시에 계속 울부짖는 소리랑 비명 소리랑 그런 소리밖에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구조자 J

경찰분이 대신 심폐소생술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또 막 계속 하는데 30분 넘게 하니깐 그러니까 대로에 나와서 30분 넘게 (중략) 그러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 부여잡고 울고 있는데 여성분 그 전에 남성분이 한 분 오셔서 제가 대신 해드리겠다고 심폐소생술 하고 제가 또 잠깐 사이에 또 체력이 돌아오니까 제가 하겠다고 제가 또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하니깐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여성분이 오셔서 도와드리겠다고 하셔서 여성분이 또 심폐소생술을 해주시고

희생자 지인/생존자 N

2) 참사 이후에 느끼는 무력감과 심리적 고통

이처럼 국가의 공백을 메운 구조자들은 참사로 인한 희생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참사 이후 구조자들은 참사 현장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등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희생자들을 살리지 못했다', '구조 활동을 잘 못했다'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참사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포스트잇을 붙인 한 생존자, 구조자는 "정신없이 심폐소생을 하고 있었다. 내가 조

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한분이라도 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속상함이 크다”고 이야기했다.⁸⁰⁾ 이러한 무력감은 구조자가 참사 피해자로 자신을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도 작동한다.

살려주지 못했다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심폐소생술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쓰러진 분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제 많이 잡고 살려달라고 흔들면서 울었거든요. 친구 살려달라고 막 제 팔 잡고 흔들었거든요. 근데 살리지 못 했죠.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며칠이 지나도 그 부분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죄책감이 더….

구조자 K

또 이제 주변에서도 사람 중에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감정 이입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봤던 게 커플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붙잡고 울고 계신 분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상처 받고 이리신 것도 많이 보고 하니까 좀 그냥 좀 많이 좀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좀 더 일찍 들어갈 걸 괜히 상황 파악한다고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이려고 되게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죄책감도 많이 가지고 그랬었는데 저보다 힘들어했던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중략)

어느 정도 있어서 상담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정부차원) 진료비 (지원) 이런 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그거는 그냥 거절했어요. 굳이 제가 뭔가를 바라고 그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그 참사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생명 구조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참사를 외면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들어갔던 거고, 병원에서 진료비 나오면 서류랑 이태원 때 있었던 증거를 내면 의료비를 다시 지원해서 환불해준다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돈을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구조자 J

많은 구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구조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은 참사의 경우 현장에 접근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전문적인 구조인력이 필요한 것에 비해, 이번 참사의 구조자들은 현장에 희생자와 함께 있었고 CPR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응급조치가 가능했던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의 사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참사 현장의 구조작업은 시민 구조자 개인의 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참사 당시와 이후에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로 인해 참사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추모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구조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80) 「다시 이태원 찾은 생존자들…“더 구조 못해 미안합니다”」, 『한겨레』, 2022. 11. 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8641.html)

3) 참사 이후 어려움과 지원의 부재

구조자들은 동시에 참사의 목격자이기도 하다. 많은 구조자가 수많은 희생자를 지켜봤고 구조 활동을 하며 때로는 눈 앞에서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던 충격을 심리적 부담·외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수면장애, 공황 등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참사 이후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을 지속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처음에 사고 현장 보고 나서 느낀 게 현실감이 아예 안 들더라고요. 그냥 보는 순간 이게 맞나 아니 이게 현실인가 약간 진짜 꿈속에 있는 기분이고. 그렇게 막 심각성은 느끼지만 이게 현실인지 솔직히 잘 이게 안 와닿아가지고. 그냥 CPR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느꼈어요. 그거를 나중에 가서 그다음 날 아침에 좀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느꼈던 게 그거랑 아침에 순간 패닉이 왔죠. 그리고 집 와서 과호흡도 오고 공황도 오고.

(중략)

제가 일을 음식점에서 일을 했는데 알람음이 있었어요. 튀김기나 이런 게 알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알람음이 사이렌 소리랑 이런 거랑 좀 많이 겹쳐서 순간 확 공황이 와버렸어가지고. 이걸 일 못하겠다 싶어서 일 그만두고. 사실 지금도 일을 안 하는 상태예요...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확 긴장이 되고 심장도 빨리 뛰는 게 느껴지고 할 때가

구조자 J

요즘에 잠을 잘 자는데 (그날의 기억으로) 생각에 잠긴다는 게 문제. 일상생활 하다가 생각이 나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일도 있고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 학교에서 문제 풀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 나가지고 문제가 풀 수 없었거든요. 문제 풀 수 없고 생각이 안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구조자 K

그 아는 학생이...사고 후에 제가 사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카톡 오픈 채팅방에 이태원 참사 추모방 여기 들어갔더니 어떤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이태원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뉴스에서 나왔던 친구예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그 사고 이후에 ptsd 64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그나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후부터 그 친구는 거의 매일 열 알씩 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존자 E

그럼에도 구조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재했고, 관련한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구조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지원을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앞에서 이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참사 초기 정부가 만든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 지원 가이드라인>은 지원 대상자 중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에 대해서 심리지원 안내 문자발송, 대면 또는 전화 상담 등 개입 체계를 두고 있지만, 목격자로 분류된 시민 구조자는 직접 전화 상담을 해야 하는 소극적인 개입 체계를 두고 있었다. 나아가 이태원사고 통합심리단 활동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자, 목격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통계 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⁸¹⁾ 의료기관도 구조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들에게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전달하지 못했다.

수면 장애를 겪었어요. 잠 못 자고 잠 잘 때마다 깨고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잘 때 깨거나 그랬어요. (심리지원) 신청하려 했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다 해서 ○○이랑 저랑 같이 자비(자기비용)하고 있었거든요.

구조자 K

(질문 : 어떤 지원이 있다더라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더라 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받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질문 :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심리 지원 관련해서 이거 의료비 청구할 수 있다더라 그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거는 전화로 제가 들었어요. 전화 상담에서. 근데 그냥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신청 안 했죠. 굳이 신청하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질문 : 원래 다니던 병원가서도 이런 경험 같이 상담하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국가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주신 거예요? 의료비 지원 같은 거?)

네. 딱히.

구조자 J

4) 사회적 연결을 통한 치유의 필요성

구조자들은 시민분향소에 수차례 추모하러 찾아 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유가족과 생존자처럼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참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반응 등의 이유로 모이기 어려웠다. 참사의 공동체적 치유와 해결 과정을 어렵게 만든 정부와 사회 환경에서 이들의 문제는 개인이 감당

81) “목격자는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나 심폐소생술(CPR) 등 구조활동을 벌인 이, 단순 목격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응인력은 경찰, 소방관 등 당시 참사 현장에 대응한 이들이다. 특히 유가족과 부상자, 부상자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상담과 관련해선 전체 상담 건수만 있을 뿐 상담 참여 인원을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목격자와 대응인력은 트라우마 위험이 큰 그룹이지만, 1인당 평균 상담 횟수나 상담 시간 등 상담의 지속도를 가늠할 지표도 없는 셈이다.”

『[단독]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상담 평균 5번도 못했다』, 『한겨레』, 2022. 12. 23.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120.html)

해야 할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

저는 제가 도와드렸던 분 중에 혹시나 사신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했고 괜찮은지 한 번 제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싶었어요.

(중략)

아예 없어요. 제가 구조 활동을 했던 분 중에서는 연결되었던 분은 아예 없어요. 그나마 살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은 그때 맨 처음에 제가 살렸던 구조 활동에서 이제 옮겼던 의식 있던 외국인 여성분하고 다리 다쳤던 분하고 두 분 빼고는 사실은 아무도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구조자 J

5) 소방관·경찰관 등 공적 구조자에 대한 지원 부족

위와 같은 시민 구조자 외에도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등 공적 구조자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소에 출동하는 다른 화재·사고 현장보다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이번 참사를 경험한 공적 구조자들은 이후 과호흡, 무기력, 우울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⁸²⁾ 또한 ‘내가 잘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지 않았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어야 하는데’ 등의 후회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⁸³⁾ 이태원역 1번 출구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 중에는 경찰관의 메시지도 있었다.

경찰로서 도우러 오지 못한 점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편히 쉬시고 부디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한 삶 오래오래 살길 바라요.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공간 포스트잇

82) 신진산 이태원119안전센터장은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호흡이 가빠지거나 밥 생각이 없어졌고, 무기력한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현장으로 출퇴근해야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 현장 통제와 구급활동을 함께한 경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오전 이태원지구대 소속 경찰관격자는 “직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울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호흡 가빠지고 무기력해져” 현장 나간 소방관·경찰 트라우마, 『한겨레』, 2022.10.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336.html)

83) 그때 내가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자꾸 후회가 들더라. … 그때 생각하면 유족분들께 면목이 없고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김** 경사]

“유족께 죄송한 마음뿐”…울부짖던 이태원 경찰관의 통한, 『한겨레』, 2022.11.0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328.html)

보통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CPR을 하고 이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 의지와는 달리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때의 그 무력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매우 클 수밖에 없죠.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전문가 “안좋은 분들 더 뉴스 찾는다, 심리치료도 골든타임 있어”, 『YTN』, 2022.11.01.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011318456527)

그럼에도 공적 구조자는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구조활동을 한 것이고 사고·재난·참사를 마주하며 느끼는 심리적 고통 역시 감수해야 할 직업적 의무라는 시선 속에서, 심리적 부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⁸⁴⁾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가운데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기에도 조심스럽다.

소방관들은 원래 이런 일을 하면 이리이러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이러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라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아요. 그런 교육은 없어요...그리고 소방관 특성상 그런 부분에 심리적인 상담을 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재난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는 현장 활동을 하게 되니까, 만약에 자기가 심리 상담을 받게 된다면, 어, 나 조금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이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받아서 남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죠.

소방 공무원 Z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공적 구조자에 대한 심리지원으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추진하였다.⁸⁵⁾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소방관은 1,098명이 긴급심리지원에, 경찰관은 215명이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나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 부족한 인력⁸⁶⁾ 등의 문제로 안정적인 상담·치료가 불가능했다. 이들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채 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상담을 받던 중 긴급하게 출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⁸⁷⁾ 참사 초기와 달리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면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아보기는 어렵다.

84) (소방대원으로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얘기하지만, 유가족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테니까요. [서울중부소방서 신당119센터 권** 대원]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와 내부 혼란 겪는 소방관들」, 『BBC 코리아』, 2022.11.14.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3621754>)

85)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11.13.연합 등] 이태원 사고 대응인력 심리지원 관련」, 2022.11.13.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73660)

86) “근무 특성상 제가 휴가를 가더라도 누군가 제 자리에 들어가야 해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지금 제가 휴가 가면 2교대로 돌아가게 되죠. 지금도 다른 근무자가 일주일 휴가를 가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를 반복하는 중이에요. 제가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때문에 특별 휴가를 받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지금의 처처럼 24시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건데, 그 사람도 또 다른 출동을 나가면서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그러면 내 PTSD를 지우기 위해 남한테 PTSD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인천남동소방서 119안전센터 유** 대원]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와 내부 혼란 겪는 소방관들」, 위 링크와 동일.

87) 「“상담받다 출동” “예약하고도 못 가”...심리치료 쉽지 않은 소방·경찰」, 『경향신문』, 2022.11.15.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152122045>)

대통령실, 정부부처 등이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참사에 대한 책임은 인근 소방서·파출소와 현장에서 대응한 소방관·경찰관에게 맡겨졌다. 가령 행정안전부는 국정조사에서 구급일지 미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유가족과 구급대원 개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소통하도록 했다. 이는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고 진정한 책임자를 감추었다. 결국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경찰관 개인의 책임을 키우는 꼬리자르기에 그친 것이다.

행안부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네들 국정조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구급 일지랑 그런 것들을 해서 오늘도 대응이 나온 게 구급대원이랑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중략)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행안부란 데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급대원이 유가족이랑 일대일로 만나게 전화하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락을 끊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보내줘서. 어떻게 구급대원들도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제 나이대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급대원이면 아마 이런 조직에서 말단일 텐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신경이 날카로운 유가족들한테 일대일로 전화해서 해명하라고 시켰을까. 일 진짜 못한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애네들은 지네 안전 구급대원들을 그냥 소모품으로 알고 있구나.

유가족 S

4. 지역 주민, 상인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는 이태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참사가 발생한 현장 바로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참사를 목격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수습에 참여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참사 소식을 듣고 교통정리를 하며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했다. 어떤 이는 참사 이후 현장을 보존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태원 지역 주민과 상인 역시 목격자, 구조자로서 참사의 피해자이다.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도 큰 흔적을 남겼다. 참사 이후 이태원 지역 상권이 크게 축소되는 어려움과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까지 연이어 일어나며 만들어진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고통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 헬러원이라는 이국적 축제와 이태원 지역에 덧씌워진 낙인과 혐오로 인하여 이태원 주민과 상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며 이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특성

(1) 다양성과 다름이 공존하는 공간

이태원을 상징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아마 ‘다양성’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이태원은 국내 최초의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거리에서는 다양한 출신국가와 인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낙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97년 서울시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2002년부터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렇게 다양성과 다름을 만날 수 있던 공간이기에 어느새부터인가 헬러원을 맞이하면 이태원 일대에서 축제가 이루어졌다. 특정한 주최자가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헬러원 축제는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기억으로,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해방구이기도 했다.⁸⁸⁾ 이태원 지역 주민과 상인 역시 이러한 다양성의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자부심을 가져왔다.

나는 이태원을 너무 사랑해요. 7년 되었는데, 외국적 문화, 자유로운 문화, 표현의 자유가 있거든요.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여성들도 자유롭고, 음악적인 감각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좋고요. 이 어울림이 좋아요.

지역주민(상인) B

88) “어떤 사람에게는 저녁 7시가 하루의 시작일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태원이 삶의 터전이며, 한 숨 토크 터놓고 쉴 수 있는, 청춘이라는 두 글자를 유일하게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그런 곳. 그런 이태원을 많은 청춘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곳에선 안전해요”...이 말을 하고 싶어요 [생존자의 기록], 『한겨레』, 2022. 11. 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988.html)

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 '헬러윈은 미국 거지만은 한국식의 헬러윈은 재밌었어', '우리도 또 가볼래' 이렇게 해서 헬러윈 때뿐만 아니라 연장선상으로 그런 걸 또 지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많은 경제적으로나 청년들한테 즐길 수 있었던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망가뜨렸고, 상인분들한테는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상권이 무너진 거고, (하...한숨)

지역주민 A

(2) 상업과 관광 지구

이태원은 서울의 주요 상권으로서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찾는 공간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부터 이태원은 국제 쇼핑·관광 거점으로 발전해 왔고, 총 2천 27개 업소 중 쇼핑상점이 72.2%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 소상공인이 영업을 해온 공간이기도 하다.⁸⁹⁾ 이처럼 상업과 관광을 위주로 성장해 온 이태원이기에 방문객이 감소하는 상황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온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년여 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 다시 상권이 살아날 시기에 발생한 이번 참사는 상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주었다.

코로나19 때, 내가 아는 사람들 열 명 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자살 한 사람 많았죠. 장례식도 많이 가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버텨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악착같이 일 해서 코로나때 빚을 다 갚아왔죠. 6개월 월세로 살고 있고 가진 보험도 다 해지하면서. 그러고도 남았던 빚을 6개월 동안 갚았으니, 이제는 현금이 없고 그러니 당장 막히는 거예요... (장사를) 한 달만 멈춰도 나가야 할 지출이 엄청난데.

지역주민(상인) B

이제 성실하신 분들은 와서 골목에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다들. 코로나는 언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것도 같이 끝나는 거였는데 이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클럽들이 나가면 이태원이라는 곳이 매력이 남아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

지역주민 A

2) 경제적 피해와 국가의 실질적 지원 부재

참사 직후 이태원 상권이 받은 영향은 심각했다. 참사 25일 뒤인 2022. 11. 24.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사현장이 위치한 이태원 1동은 유동인구가 30.5% 감소했고 매출은 61.7%가 감

8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태원 장소마케팅 전략연구』, 2001

소했다. 현장과 다소 떨어진 이태원 2동 역시 매출의 20.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⁹⁰⁾ 시간이 지나며 유동인구와 매출이 조금씩 상승하였지만 그럼에도 참사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다.⁹¹⁾ 특히 핼러윈 축제시기를 맞아 영업을 시작했던 청년 상인들의 경우 큰 빛과 더불어 심리적 좌절감까지 겪어야 했다. 이는 경제적인 피해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도 지장을 주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진다.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요.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다 집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마저도 안 되는 것 같아. 경기가 안 좋아져서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여기 상가 손님들이 많았던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가 다...

지역주민(상인) D

핼러윈 날 오픈한 가게들도 많아요. 밤새고 인테리어 해갖고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라 예측해서. 그래서 남아 있는 분 중에 다 소진하고 빚으로 다 버티지 못하고 나간 분들 있죠. 그냥 다 털고 나가서 무권리 상태인 가게들도 많았어요. 권리금 다 놓고. 그럼 그게 무권리니까는 권리금이 없으니까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젊은 분들이 이제 시작해보는 단계인데 여기서 좌절을 맞보잖아요. 그 좌절을 맞보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지역주민 A

안 쫓겨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 되는건 대부분의 청년들이예요. 이태원 클래스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초년생들이 꿈을 안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70정도 나갔고, 그런 이들이 70정도 들어온건데 이제 파산선고, 신용불량의 과정을 겪겠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람마음의 단단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처음 해본 일에 상실감도 크고 함께 일했던 이들에 대해 배신감 등에도 흔들리고 있고. 돈이 전부 아니겠지만 돈 때문에 우리 다들 친한 동생들 잡아서 일을 시작한 것 일텐데. 이게 아픔이 이게 두 번째이니까 좌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2년 반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이걸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가 관건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3월 안에 이태원은 끝장나서 70이상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대부분 임대고, 건물주도 사실 대출받아서 샀을 거고, 이자 높은 대출일텐데 건물주도 전화로 제발 살려달라고 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상인) B

90) 서울시, 『(자료제공) 서울시, 매출감소 이태원 소상공인에 자금용자+매출증대 투트랙 긴급 지원』, 2022. 11. 24.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5469)

91) 「[르포] '절망'와 '대개감'이 공존하는 이태원 상권」, 『위즈경제』, 2023. 4. 14. (<https://wikyung.com/news/article?news=1124>)

특히 이태원 지역은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 2020년 5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으로 인한 근거없는 낙인으로 고통을 받았다. 또한 이 당시에도 역시 부족하고 뒤늦은 정부의 지원으로 상인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고 상권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로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태원 발 오명 때문에 이년동안 손님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도 트라우마였죠.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처럼. 택시도 한 정거장 전에 내려줬었죠.

지역주민(상인) B

(코로나때 지원은 실효성 있었나요?) 1년 반 아무 도움 없었고 백만 이백만으로 턱없이 모자라고 큰 업소는 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대상에서 제외. 월세 8천. 월 10억 이상 매출자(소상공) 유흥업 제외 모든 것이 제외되었고 한 번도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 울분이 어느 정도 였나면. 지금은 다 같이 힘들지만 그때는 나 홀로 그래서 많이 부딪혔었어요. 천 명까지도 모아서 옷도 다 벗어보고 마포대교에서. ○○ 횃집 동생들, 장사하면서 선배들 후배들 소통하다보니, 그러다보니 만나는 사람들 (여러 관리들)도 만나고. 세종시에 가서 6시간도 기다려 봤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안주는지 알 수가 없다고. 구청도 가보고 반문해봤자 다 지시대라고. 그래서 청와대 갔었죠. 머리도 깎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도 그런 것들을 자꾸 호소하다보니 문이 열렸죠. 손실보상이라는 프로그램을 10억이상 유흥도 오케이 그래서 1년 반 지나서 받았던 거예요.

지역주민(상인) B

이러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주된 방안은 융자금 지원이었다. 서울시는 2022. 11. 24. 매출감소 이태원 소상공인에게 2% 저리·최대 3천만 원의 융자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2022. 11. 28. 발표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에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⁹²⁾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결국은 상환해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지원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⁹³⁾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역을 한정하여 참사 현장 인근인 한남동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태원 지역의 현실과

92) 중소기업벤처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2022. 11. 28.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lidx=86&bclidx=1037533&parentSeq=1037533>)

93) 서울시, 「(자료제공) 서울시, 매출감소 이태원 소상공인에 자금융자+매출증대 투트랙 긴급 지원」, 2022. 11. 24.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75469)

맞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졌다.⁹⁴⁾ 나아가 이러한 지원들이 선착순으로 제공되거나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적용대상임에도 신청조차 못한 이들도 발생하였다.⁹⁵⁾ 2023년 3월부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이 발행되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이태원 지역의 업종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조치이기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⁹⁶⁾

그래서 내가 7천만 원 그거 대출해 주는 것도 왜 그걸 이태원 1동 2동만 국한을 하나, 도미노다. 보광동서 종점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어차피 같은 라인인데 여기서 이태원에서부터 거기까지 다 연결돼서 종점까지. 그런 데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건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러면 구청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어디 상권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고 하는 거. 여기 건너는 한남동은 못 받는 거야. 바로 여기 옆인데... 오히려 우리 보광동보다 한남동에 더 가깝지. 라인 상으로는 근데 거기도 못 받는 거야. 왜 이태원 1동 2동만이야. 여기 옆에 있는데 (중략)

그리고 나는 솔직히 뭐 신청도 안 해.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게 그냥 어느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은행에서 해주는 건데 그 자격이 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되었어요. 여기 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코로나 대출들처럼 그 자격 심사해 가지고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데, 나는 가 봐야 안 해주지. 코로나 그것도 안 해줬는데 더 심사가 (엄격할 수 있으니까)
지역주민(상인) D

정작 유선상에서는 이거 신용보증센터하고요 구청하고 탄 소리를 해요. 구청에서 애네가 전화하니까 구청에서 확인증을 받아오래요, 참사 확인증을, 그 주소.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구청도 전화 통화하기 쉽지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 기다렸다가 안내문 쪽 나오잖아요. 그런 전화 다 들으면서 통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구청이 아직은 논의 중이래요. 애네는 애네한테서 뭘 받아오라는 걸 확인증 받아오라고 하고, 애네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진흥 등 저도 이거 다 알아보고 답답했는데. 누구한테 내가 설명해 주기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저도 며칠 걸렸어요.

지역주민 A

아무 지원조치, 프로그램 없었어요. 서울시에서 대출프로그램 70억 프로그램 선착순이니

94) 「이태원 참사 지역에서 1,100m 떨어진 업체는 지원, 300m 거리의 업체는 안돼」, 『스트레이트뉴스』, 2023. 1. 10.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45>)

95) 「이태원 돕겠다던 원스톱지원센터... 상인들 “그런 게 있어요?”」, 『국민일보』, 2023. 1. 20.
(<https://v.daum.net/v/20230120040908182>)

96) 「이태원 살리던 지역화폐...명품·담배 매장만 '복적」, 『한국경제신문』, 2023. 4. 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0201811>)

못받은 이도 많았죠. 이게 전부예요.

지역주민(상인) B

3) 참사의 목격자, 구조자로서 겪는 고통

이태원 지역 주민과 상인은 참사의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고 일부는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이들이기도 하다. 참사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더라도 수년에서 수십 년 간 살아온 지역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도 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참사 직후인 10월 30일부터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유가족, 생존자, 목격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심리지원단 운영 자료에 따르면 유가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더러, 목격자와 구조자에 대해서는 전체 상담 건수만 집계되었을 뿐 1인당 평균 상담 횟수나 상담 시간 등 상담의 지속도를 가늠할 지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⁹⁷⁾ 이처럼 내실 있는 심리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참사를 마주한 지역 주민과 상인은 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당해내야만 했다.

아침에 그러고 한 일주일 사건 현장에 일주일 넘게 사건현장에 그냥 있었어요. 시신이 놓여 있던 바닥에 앉아있기도 하고 허망함과 생각들에 집에 갈 수가 없었고 매일 거기 앉아서 울었죠. 그러다가 지치면 가고. 일주일 내내 경찰, 구청, 의원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죠. 그러다가, 보통 5일장하고 49재를 하잖아요 저희가 장례식을 찾아갈 입장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5일 되는 날은 법당에 가서 158개 초도 켜드리고 제삿상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한 삼천만원정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되돌릴 순 없고, 아련하고, 내 맘 편하게도,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 날 함께 있었던 직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왔어요.

지역 주민(상인) B

저도 마음은 잠 잘 자고 잘 먹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몸에 반응이 온 건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오고. 그 이렇게 몸이 좀 아파서 통증도 가고, 도수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그다음에 대상포진 오고. 그 다음에 이는 괜찮은데 옛날에 신경 치료했던 밑부분 염증이 생겼는데 치과 선생님이 그런 저희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이게 면역력 떨어지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시점에 면역력으로 이게 딱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데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분들은 얼마나 허탈할까.

지역 주민 A

97) 「[단독]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상담 평균 5번도 못했다」, 『한겨레21』, 2022. 12. 23.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120.html)

(질문 :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재난구역 선포도 직접 전화 받은 게 없고 그리고 그것도 검색해서 했는데 그 지역도 사실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심리 지원도 전달받은 게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지역 주민(상인) D

4) 연대를 해치는 혐오와 낙인

참사에 대한 혐오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도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장사를 지속했다거나 희생자를 구조하지 않았다는 가짜뉴스와 혐오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특히 현장 골목에 위치한 술집의 경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했음에도 SNS 상에 근거없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사장과 직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⁹⁸⁾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져야 할 국가는 사라진 채 개인의 일탈이 문제인 것처럼 초점을 두면서 발생한 2차 가해였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태원 지역에 붙은 낙인과, 참사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 부상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추모와 기억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이태원을 만들 것을 약속했지만,⁹⁹⁾ 일부의 주민과 상인들이 이태원광장 분향소 앞에 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¹⁰⁰⁾ 그러나 이러한 갈등 구도는 유가족과 지역 주민, 상인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온전한 애도의 공간을 마련하지도, 이태원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하지 않은 국가와 지자체의 무책임으로 인한 것이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그런 게 두렵고. 지금은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내는 게 어려운 것도 있죠.

(중략)

가게는 닫고 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거고, 어디가서 뭘할 수 있는 젊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20년 동안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고통은 크지만, 유족만 하겠어요. 그러나 몇년을 가족을 이루는 과정까지도 본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것을 보는 건 너무 괴로워요.

지역주민(상인) B

98) 「이태원 참사 때 못 들어오게 막았다? 와이키키 펍, 오해와 진실」, 『한겨레 21』, 2022. 11. 21.

99) 「이태원 유족과 상인, 서로 손잡았다…"기억공간-주민지원 필요"」, 『한겨레』, 2022. 12. 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2920.html)

100) 「'녹사평역 분향소를 보는 것같은 시선...'이전' vs '존치'」, 『한국경제신문』, 2022. 2. 1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2107426Y>)

스타일 상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듣는 편이에요. ‘술먹고 그런 동네’, 유흥가 그런 데라고 하고, 사람이 죽은것에 대해 ‘귀신축제다’, ‘왜 외국인 축제를 갖고와서 한국사람 죽는지’ 등등의 이야기는 싫어서 잘 안듣습니다.

지역주민(상인) C

기사에 보면 나도 댓글을 좀 자세히 보거든요. 거기 보면 막 그렇게 위태로운 상인들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아 그것도 사실 문제야. 그러니까 그 2차 가해라는 게 유가족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태원 너네 그거 아침까지 음악 틀고 장사했잖아 팔아주고 싶지도 않아’ 이런 식이고. 그때 왜 여기 옆에 이자카야 같은 게 있나 봐. 여기 이렇게 나도 본 것 같긴 해. 이렇게 벚꽃이랑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랐대. 그러다가 갑자기 옥상까지 하는데 근데 바깥에서 막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줬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 죽은 줄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안에 꼭 찻는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하는 줄 알고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깥에서는 자기네들도 죽을까 봐 안 열어줬다 이렇게 된 거야

(중략)

우리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같은 피해자나 희생자들끼리 연대를 하지 못하냐는 거지. 그거를 이끌어주는 역할이 누군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정치색을 입혀버리거든요. 우리는 인간을 보고 가는 건데 왜 거기다 정치색을 입히려는 거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주민(상인) D

이태원은 삶을 이어가는 공간이다.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고, 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 오고 어울리며 문화를 즐기고, 사랑을 하는 곳. 이태원을 슬픔과 비극의 공간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을 통해 진실의 기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IV 국가의 책무

IV. 국가의 책무

재난의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재난참사로 드러난 생명과 안전의 폐허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은 사람과 생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구체적이었지만 정부는 책임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달라지겠다'며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 순간 뿐이었다. 재난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국가는 없었다.

재난은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다. 반복된 재난참사에도 제대로 된 변화없이 넘어갔던 정부는 필연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만들어냈다. 사회 내부의 구조화된 위험은 현실의 위기와 결합돼 또 다른 참사로 이어졌다. 재난과 참사를 누군가의 불운과 불행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재난참사는 발생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신체적·정신적 부상이나 트라우마,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참사를 마주한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사회가 부재하다는 감각은 상실감과 불신으로 이어진다. 참사의 피해는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피해는 다층적이며 광범위하다. 구체적인 사람, 살아가야 할 사회적 토대와 연결된 문제이기에 대응 역시 사회적이어야 한다. 인권을 기반으로 한 대응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인권적 접근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사람 중심으로 평등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9일 우리는 이태원에서 또 다시 국가의 부재를 확인했다.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에 기반해 대응 계획을 수립해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방관자 국가만이 남았다. 이 장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1.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무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 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의 예방, 대응, 구조에 있어 국가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이태원 참사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및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태원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고'라고 규정하며 참사 자체를 축소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겼다. 시민들의 위험 신고를 무시하고 초기 응급 대응에도 실패한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참사의 진실을 왜곡·은폐함으로써 무엇보다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1)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의 책무 방기

(1) 안전관리대책의 부재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예상되었으나 정부가 안전관리대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해제되고 처음 맞는 할러윈 축제였기에, 이태원에 10만 이상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찰서 등 관련 기관들은 아무런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할러윈 축제 공공 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에는 할러윈 기간 다중인파의 위험성이 담겨 있었다. 참사 발생 나흘 전 이태원 파출소장이 할러윈데이 인파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교통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참사 당일 기동대는 1개 부대도 배치되지 않았다. 정부와 경찰 지휘부는 여러 차례 안전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마약 단속과 집회 관리에만 경찰력을 집중시켰다.¹⁰¹⁾

매년 배치됐던 기동대... 기동대 분들이 인파 통제 관리에 최적화돼 있는 분들인데, 왜 매년 해오던 걸 올해만 안 했냐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저희는 더 답답해요. (중략) 그리고 언론에서는 130명이나 경찰을 투입했고 예년과 다르게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그 130명 중에 20~30명의 파출소 직원만이 통제를 했고 나머지는

101) 「타임라인으로 본 '이태원 참사'의 결정적 순간들」, 『뉴스타파』, 2022. 11. 17.
(<https://newstapa.org/article/uiPft>)

뭘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유가족 X

(참사 당일) 길 통제나 이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대로변도. 그날도 나 혼자 통제하고 있었고 경찰에게도 몇 번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마비인데 통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계속. 신고도 직접 했었고.

지역주민(상인) 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의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재난안전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에 따라 재난 대응 계획 수립 의무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사 직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헬러윈 축제는 ‘주최가 없는 행사’여서 관리도, 책임도 묻기 힘들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¹⁰²⁾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이처럼 정부와 관련자들은 참사 예방 실패와 부실한 사전 대응의 책임을 단순히 관련 제도 및 규정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큰 불신을 갖게 되었다.

이상민이 처음에, 처음에 이 참사가 난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 경찰병력이나 소방병력이 현장에 갔어도, 사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화가 났어요. (중략) 경찰병력이나 소방병력이 갔으면 다 살았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도 아무 변화가 없으리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뻔뻔하게 행안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유가족 M

진짜 마음 아프고 그런 거는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행들이나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경찰을 배치했어도 바뀐 건 없었을 거다” 이런 말들……. 어찌 됐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게, 저는 그게 좀 많이 힘든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후의 보루잖아요, 국가라는 게.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 경찰을 찾아가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 자체가. 근데 국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막 희생자들을 무시하고 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도 정부나 국가고 또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도 정부나 국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죠.

유가족 X

102) 「질문은 달랐지만…'주최가 없는 행사'라 반복한 증대본」, 『imbc』, 2022.11.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2878_35744.html)

(2) 위험신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참사 발생 추정 시각인 오후 10시 15분까지 압사의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이상 있었음에도, 경찰은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은 위 공개된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담·안내했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112신고 조치 및 출동기록을 조작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¹⁰³⁾

(3) 미흡한 초기 응급 대응 과정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상황에서 혼선을 막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찰과 소방 사이의 '긴급신고 통합시스템'과 경찰·소방·의료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대응에 있어 이러한 시스템과 보고·협력체계는 기관 간 높은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방과 경찰간의 긴밀하지 못한 정보 공유로 인해 현장 상황 파악이 늦어졌다. 서로의 공조·지원 요청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구조인력 투입도 더뎠다. 소방청과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경우도 유기적 협력체계 미비 등으로 사망자 및 중증도 분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응급의료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¹⁰⁴⁾¹⁰⁵⁾

(4) 국가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응체계 부재 및 미흡한 현장대응

참사 대응 과정에서 담당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국가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응체계가 부재하여 구조·구급인력의 배치 등 현장 지휘·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관리를 했어야 할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구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뒤늦게 구성되면서 현장 대응이 효율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

미흡한 현장 대응은 희생자의 신원파악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희생자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참사 현장에서 임시영안소, 개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희생자가 안치된 병원을 찾는 데 12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¹⁰⁶⁾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이 어떤 구급조치를 받았고, 언제 사망하였으며, 어떻게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되었는지 알기 위해 구

103) 「참사 직전 '112신고 조치' 조작 정황...수사의뢰(종합)」, 『연합뉴스』, 2022. 12. 02,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129351004>)

104)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 재난 대응 체계 어떻게 작동했나」, 『시사IN』, 2022. 11. 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12>)

105)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 609p.

106) 「[단독] 공개 안 됐던 '이태원 참사 소방 반성문'...'대응 미흡」, 『한겨레』, 2023. 05. 0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8446?cde=news_edit)

급활동일지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구조 당시 신원이 확인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급활동일지를 온전히 제공받지 못했다. 현장 대응 업무의 공백을 보여주듯 제공받은 일부의 구급활동일지에 구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희생자들 검안서에는 사망 시각이 동일하게 참사 발생 시간인 오후 10시 15분경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이유로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¹⁰⁷⁾

경찰이나 그리고 소방 구급일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거의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신 분들 한 스무 분 정도 제외하면 그냥 이 현장에서 거기(장례식장)까지 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새벽 5시,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송 기록이. 그래서 딱 발견됐을 당시에 맥박이 뛰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응급 처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는지 이런 게 전혀 없고...

희생자 형제·자매 Y

2)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무책임한 태도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본인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더 집중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일괄 '변사자'로 처리하여 기계적으로 지침을 따르는 데 급급했고, 참사 현장 유류품에 대한 마약 검사와 유가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이유에 대해 2022년 마약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기 때문에 참사 당시엔 인파관리보다 “마약 등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약범죄 단속은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기보다 단속하는 것을 우선시했음이 드러났을 뿐이다. 국가는 이태원 참사를 관련 없는 마약범죄와 연관지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했다.¹⁰⁸⁾

정부는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등 진실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를 조작, 폐기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107) 「“제2의 이태원 참사 막으려면… 재난대응 매뉴얼 절실」, 『헬스조선』, 2023. 03. 29,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29/2023032901965.html)

108) 「마약에 진심?...이태원 참사 유품 '마약 검사'한 경찰,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프레시안』, 2022. 12. 0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810420606809>)

「“이태원” 인파관리 책임 묻자, 서울청장 “마약 예방이 중요했다”」, 『프레시안』, 2023. 01. 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10412463907943>)

「[사사건건 플러스] “정부 지원 체감 못 해, 이상민 장관 처신도 납득 불가!”...이태원 참사 한 달여 겪은 유가족들은 지금?」, 『KBS NEWS』, 2022. 12. 0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9751&ref=A>)

있다.¹⁰⁹⁾ 현행 법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국정조사, 특수본 수사에서도 참사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정조사에서 정부책임자들은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제대로 된 사실 파악조차 방해했고, 특수본은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하는 등 ‘꼬리자르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참사의 진실에 대한 의문만이 증폭되었다.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최소화하지 못했고 또 책임자들은 경찰 조사는 아예 받지도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냥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몰랐어” 그러면은 뭐 이걸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유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건지 이런 자살한 것 하나하나 저희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고 ‘참사’를 ‘사고’로 바꿔서 이거를 축소하려고 한 것 같은데 (중략) 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그냥 이런 책임 같은 경우에는 힘없는 말단 경찰들이나 소방관들만 책임을 지고 있으니깐. 그냥 그런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왜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위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권력만 사용하기 바쁜 거죠. 사실 권력보다 책임이 더 강한테도 그걸 인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또 모른다고 하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유가족 X

109)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진상규명 방해행위”[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뉴스클레임』, 2023. 04. 18,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384>)

2. 피해자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책무

재난참사에서 피해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피해자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것은 희생자뿐 아니라 유가족, 지인, 형제자매, 생존자, 구조자 등 참사로 연결된 수많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과 참사는 그 자체로 이미 큰 피해이며 사랑하는 존재를 잃거나, 신체적·심리적인 부상을 입고, 일상생활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국가는 피해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재난·참사 발생 직후 희생자들의 존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수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심리적·신체적으로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떻게 피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자들의 권리와 지원은 무엇인지 등 재난참사의 원인과 진행 과정, 후속 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재난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진상규명과도 연결된 고리이다. 참사의 원인과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것 역시 피해자들의 권리이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존엄을 보장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재난참사 대응에 실패했다.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그것은 피해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통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재난참사의 피해를 ‘그곳에 갔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에 더해 참사에 대한 정치인과 정부 관료의 무분별한 혐오 표현은 재난참사의 사회적 인식을 왜곡시키고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는 등 2차 피해를 확산 시켰다. 정부의 무책임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피해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사회적 효과를 만들었다.

1) 희생자의 존엄을 보장할 책무

희생자들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고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것은 재난참사에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태어나는 순간, 살아가는 순간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은 희생자, 유가족 등 남겨진 이들에게도 중요한 절차이자

의례이다.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는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도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희생자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어떻게 이송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뒤늦게 희생자를 만난 유가족에게 사건의 정황이나 희생자의 마지막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는 이도 없었다. 범죄 정황만을 의심하는 부검 제안, 형사 조사만을 우선시했다. 시신을 인도하고 존엄하게 마지막을 보내야 하는 순간마저 처리해야 할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

일요일이잖아요. (오후) 3시 반이나 이렇게 돼서 3시에 4시쯤 됐는데... 애 바로 데리고 데려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장례식장 알아보니 거기 관계자가 사망 신고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급 받느냐니까 “경찰서 가서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막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서를 또 찾아가서, 5시인가, 사망신고서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모르는데?’ 경찰은, ‘우리는 그런 서류가 없는데’(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럼 우리 애를 어떻게 데려가느냐고 따졌어요. 잠깐만 기다리다가 “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으로 왔어요. 거기에 기억으로는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관계자, 용산구청, 여기 세 명의 공무원이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망신고서를 떼어서 가져가고 싶은데 도대체 그거 언제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냥 또 밖에 가서 전화를 막 하고 와. 그러더니 “그게 우리 일이 아니고요” 막 핑계를 막 대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 저녁 7시, 8시 안에 해결이 돼요.” 이렇게 다 이 말만 해. 한 시간 기다리니까 “오늘 안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이제 숙소를 그 옆에다가 잡아주더라고요. 그 병원 가까운 데다 숙소를. 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잡아줬는데 잠이 오나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검안해야 한다는 걸 거부하고 새벽 6시에 경찰서에서 서류가 다 되었다고 연락이 왔죠. 가서 받고 출발이 11시. 내려오니깐 3시 반 정도였어요.

유가족 Q

새벽 1시 반에 검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검안을 해야 서류가 만들어진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이게 검안을 해서 검사가 서류를 해줘야 애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형사 사건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는 게 뭘 줄 아세요. 부검을 해야겠다는 거야. 부검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뭘 개소리냐고 지금 당신들이 뉴스에다가 압사에 의한 사고로 다 해놓고는 애를 뭐 두 번 죽인 일을 하냐고. 나는 부검은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검을 안 했어요. 해야한다고 말하니 하게 된 유가족들도 있죠.

유가족 Q

2) 진실에 대한 책무

정부는 참사의 진실에 대한 책무가 있다. 진실에 대한 책무는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의 대응과 복구, 피해자들의 권리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통은 참사의 예방, 발생, 진행 과정, 후속대책 등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들과의 양방향 소통과 논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참사의 발생과 진행,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브리핑조차 없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연결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방식이었다.¹¹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원스톱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 등을 구성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가지는 못했다.¹¹¹⁾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1:1 지원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을 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아¹¹²⁾ 피해자들이 궁금한 사항은 언론을 통해 확인하거나 스스로 필요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가 찾아와 가지고 (중략)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연락해라 그런 말씀은 하고 가셨고, 말씀하신 그런 세부 내용 있잖아요, 입원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 그런 서비스 방법은 그냥 제가 뉴스에서 본 거예요. 뉴스에서 본 거고…….

유가족 P

사회적인 애도와 추모의 일환으로 녹사평과 시청 앞에 세워진 분향소를 대응하는 서울시의 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입장을 제시했다. 시청 바로 앞에 분향소가 있었지만 유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은 없었다. 언론을 매개로 한 소통은 참사 피해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어제 서울시 공무원 그 얘기 듣고서 그걸 보고서 열 받더라고요. “4월 1일부터 5일까지 합동 분향으로 운영하고 영구적인 추모공간은 (서울시가 제시한) 그쪽으로 알아보겠다”는. 특별

110) 「소통없는 정부에 유가족 뭉쳤다…일방적인 '애도 행정' 바뀔까」, 『시사저널』, 2022.11.29.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465>)

111) 「'출범 3개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단, 유가족과 공식 면담 '0번」, 『경향신문』, 2023.3.1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01740001>)

112) 「1대1 지원한다더니…이태원 참사 부상자·유가족 지원 현황은?」, 『KBS』, 2023.01.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99133&ref=D>)

법이 있어야 돼요. 특별법에 예산과 장소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우리를 탄 데로 빼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또 언론플레이 하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거에 넘어간단 말이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까지 제시했는데 왜 유가족들은 가만히 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언론에 얘기하고 해명을…… 우리도 해명을 해야 되니까, 하려면 많은 시간도 들고, 우리는 또 얼굴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는 통제 가능한데 그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머리도 아프고,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유가족 R

3) 혐오 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

정부는 참사 직후 피해자를 보호하고 혐오 표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참사를 대응하는 국가의 태도와 직결된 문제로, 참사에 대한 사회적인 추모와 애도, 진실규명, 제대로 책임을 묻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다른 재난참사 상황에서 혐오 표현으로 2차 피해가 확산된 것을 수차례 확인했다.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를 향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규정하는 등 참사를 축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참사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켰다.¹¹³⁾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피해자에게도 떠넘기는 모습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참사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부추겼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외면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명이나 사건을 파헤쳐서 문제가 뭐였고 원인이 뭘 어떻게 하면 이제 재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약간 몰아가는 것 같고 반응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런 태도가 너무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부가 좀 안 그래야 국민들도 저희 편에 서고 다 같이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정부부터 먼저 그러니까 국민들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를 좀 품어서 좀 위로해주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유가족들 마음을 좀 안식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는 행동이 속상하죠

희생자 지인/생존자 N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들은 참사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국무총리 한

113) 「윤석열 정부, '이태원 압사 참사' 명명…이튿날 “압사 뼈라”」, 『미디어스』, 2022.12.8.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89>)

덕수, 국회의원 장제원, 창원시의원 김미나 등이다.¹¹⁴⁾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159번째 희생자의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통해 참사를 사회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혐오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 혐오와 차별을 쉽게 허용하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낸다. 정부가 만들어낸 착시효과는 쉽게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녹사평 분향소에서 빈번하게 벌어졌던 신자유연대의 혐오 표현 역시 이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혐오 표현의 용인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참사의 피해를 말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

피해자들은 혐오 표현을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었다.¹¹⁵⁾ 참사의 생존자들은 온라인상의 댓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혐오 표현과 차별적인 시선으로 인해 참사 피해자라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김미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해 소송을, 손해배상을 이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또 2차 가해, 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왜 그러냐면 우리 유가족들을 응원의 어떤 메시지 그런 댓글을 보고 싶어서. 그러면 좀 더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서 좀 좋은 말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댓글이 더 많더라고요. (중략) 저희들이 손배 했더니깐 ‘그래 그럼 그렇지, 결국은 돈이었구나’라는 2차 가해가 또 있어요. 그걸 정부에서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좀 제재할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유가족 O

스트레스죠. 그게 가해죠. 진짜 책임감 없는 말을 함부로 내던진다는 게. 자기네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몰상식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유가족 T

어느 정도 선은 지킬 수 있게 그런 당이나 그런 거에서 좀 아니면 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다, 라는 그런 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저희 유가족의 자유, 유가족의 권리인데.

유가족 S

참사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회피한 정부로 인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

114) 『이태원 참사 49재...막말·정쟁 참사에 두 번 우는 유가족』, 『JTBC』, 2022.12.16

115) 『참사 뒤 부상자가 들은 말...』이태원 갔었다 얘기 못하겠어요』, 『KBS』, 2022.11.2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2338&ref=A>)

회적인 추모와 연대가 저해되었다. 큰 상실을 경험했음에도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 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한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그 사회에 남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재난에 대한 사회 공통의 기억은 인간 존엄성과 타인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 기반이 된다. 기억되는 만큼 진실이 뚜렷해지고 정의가 바로 선다.¹¹⁶⁾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도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부정을 만들어냈다.

4) 책임을 규명하고 사죄할 책무

정부는 수많은 구조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2차 피해만을 확산시켰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 권리보장과 재난참사 해결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아랫선으로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159명이 사망한 참사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애도와 추모의 말 한마디 없는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총족, 증진의 의무가 있으며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재난참사에서 ‘우연히’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만들었다.

정부에서 정말 욕을 들어먹든 어떻게 하든 다 해소가 되게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국민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 담당 부서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경찰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유가족들 앞에 사죄를 하고 그 욕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왜 우리 아들 못 지켜줬냐고 욕하고 막 성토했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끝나요. (중략) 그러면 결국 아픈 마음이야 평생을 가겠지만 정부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태로 이제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고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걸 안 하는…… 그걸 안 하니까 유가족들이 이 분노가 점점 점점 차오르잖아요. 초기에 그렇게 했으면, 초기에 이만큼의 분노만 쏟아 부었으면 끝나버리는 이야기인데 그걸 안 하면 내가 점점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유가족 M

아니 “젊은 사람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다”, 터무니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정말 가슴…… 가슴을 쥐어뜯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는

116) 416재단,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자권리 매뉴얼』(2021), 15p.

대통령께서, 진실로 와서 사과 한 번 하고 눈물 한 번 흘리고, 희생자들을 추모 한 번 해줘야
죠. 그렇게 생각해요.

유가족 T

3. 적절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

정부는 참사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중점에 두고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주체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재난참사의 경험으로 이미 큰 상실과 슬픔을 경험했다. 상실과 슬픔만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안고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거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배제 없는 평등한 지원,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이러한 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관점이다. 피해자를 지원받는 '수동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배제없이 평등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

국가는 참사의 피해자들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배제 없이 평등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피해자의 존재와 피해의 양상을 확인하는 것조차 실패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피해의 현황과 주체들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심리지원으로 증빙한 사람들만을 피해자로 집계하는 등 행정 부처별로 각각 지원을 요구하고 증빙절차를 마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편의적인 숫자로는 참사의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생존자이지만 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정부는 피해자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이들의 권리침해 상황은 파악되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자의 경우에도 피해자 범위로 집계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가로부터 피상적인 내용의 지원안내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지원도 그 협소한 정의에 따른 것으로 한정시키면서 지원 제공에 있어 시혜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고, 적극적 권리주체로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된다. 정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하달식으로 제공되는 지원을 받기만 하게끔 함으로써 피해자를 객체로 전락시킨다. 심지어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희생 후에도 상당기간동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해 지원을 받을 권리조차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9번째 희생자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극복 의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생존자를 비롯한 참사의 피해자들을 파편화된 상태로 방치했을 뿐, 피해자 권리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희생이 늘어나도록 만든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뿐만 아니라 희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으로 일관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 친구들만 해도 개네들은 깔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에 끼겨 있다가 클럽 직원이 이렇게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클럽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클럽 지하에서 있었던 말이에요. 클럽 조명등 이런거 틀어놓고. 근데 이제 그 뒤로 개네들은 약간 트라우마…… 외상은 없으니까 부상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바로 일상 생활로 돌아가고 바로 회사 출근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회사 일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클럽 조명처럼 이렇게 이런 화려한 조망이 있으면 갑자기 공황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친구들은 다 정신과 상담 받고 약 먹고……. 상담을 한 달, 두 달 했어요.

생존자 G

정부에서는 아예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유가족 범위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체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다고 느낀 게 제가 윈스톱 지원센터에 그냥 제가 혼자 전화해서 내가 유가족 범위에 속하는 가족이냐 아니냐를 물어 보니까 거기서 놀랐고 답변을 못 해줬고 다음 날도 답변을 못 해주고 행안부에서 연락을 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떠넘기고, 행안부에서도 그때서야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변명을…… 우리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그래서 연락을 못 한 거고 원래는 자기 복지부나 관계자들끼리 우리를 유가족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요건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 P

2)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권리를 고지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었고, 나아가 피해자 권리를 부정해 왔다. 권리가 아닌 지원 혹은 배보상과 관련된 갈등을 유발하여 책임을 물어버리려 했던 정부의 기조는 피해자들이 경험한 부실한 지원행정과도 일맥상통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피해자들은 ‘권리’가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기로 일방

적으로 결정한 파편적인 '지원' 정보만 문자로 전달받거나, 혹은 피해자 범위로 포괄되지 못해 그마저도 제공받지 못했다.

정부가 참사 직후 기초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체계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제공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수없이 어디서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필요한 게 뭐 있냐고 계속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대략 물어봤죠. 나는 요청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먼저 말씀해달라니까 일단 뭐 밖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유가족 O

3) 즉각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제공할 책무

참사 피해자 지원에 있어 정부는 즉각 필요한 지원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참사 직후 피해자들의 삶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즉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참사 초기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원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이후 2주가 되어가는 시점인 11월 10일경 '원스톱센터'를 운영 개시했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 원스톱센터는 지원에 대한 통합적 정보제공과 행정을 제공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았다. 원스톱센터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도 적었고, 원스톱센터를 내방한 피해자가 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등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은 미흡했다. 원스톱센터에서 파견되었다며 유가족들에 배정된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들의 근황만 수집하는 기관으로 기능했다.

유가족의 경우 정부가 즉각적으로 제공한 것은 기계적인 장례비 지원 행정이었다. 그러나 시신 수습과정에서부터 존엄성을 침해받은 유가족들은 장례 자체를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례비 지원금 수령을 독촉하는 연락을 수차례 받는 일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다. 또한 앞서도 언급했듯이 장례비 액수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마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이들로 여겨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는 참사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공적인 대응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노력을 폄훼하

는 것이었다. 정부가 피해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지원을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장례식장에서 “영수증을 다 모아봐라” 이런 것도 다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이거 모아야 되나 보다 해서 모아놨다가…… 거의 발인 날이 되니까 뭐 얼마 지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랑 대화를 먼저 하고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줘서 이게 전 국민적으로 세금이 나간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유가족 X

처음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거를 처음에는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막 써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할 정신이 없어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고 이런 거 할 정신이 절대 없죠. 근데 왜 그거(증빙기한)를 되게 촉박하게 잡았어요. 기간을 그래서 며칠까지 해라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희 지자체에서. (중략) 계속 너무 연락이 오니까 이제 서울시 공무원한테 다시 전화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때까지 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는데 저희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거 이때까지 꼭 해야 되냐.”

유가족 Y

지금 현황이 없는데 지금 장례가 무슨 문제고 뭐가 문제냐,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여기저기서 막 구청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유가족 O

4)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책무

국가는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과 제공 이후에도 피해자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피해자들이 처한 참사의 피해는 참사 이후 시간에 따라 그 양태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정부가 정해 놓은 지원 기간에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사피해가 유발하는 권리침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설정하거나 정부기관이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권리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일사불란하게, 심지어는 장례식 중에도 장례비 지원금 증빙을 독촉하던 1:1 배정 공무원들은 장례비 지급 이후 유가족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권리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의료기관과 심리지원기관을 통해 의료·심리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마저 정부는 처음 지침에서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정해놓고 6개월 이후 전문가 재평가로 지속여부를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참사의 피해는 시간 흐름에 따라 선

형적으로 감소하는 단순한 역학을 따르지 않는다. 전문가의 평가를 요구하는 조건부 지원은 자체로 권리추구의 장벽이 하나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참사 직후 6개월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후일 요구하게 되는 피해자의 경우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처음에 장례 절차까지는 정말 일사불란했거든요. 장례 지원금까지도 엄청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이후로는 제가 말했듯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장례식장도 와주시고 그 정도 체계적인데, 그 정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딱 장례까지만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우리 다 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유가족 S

처음에 장례치를 동안은 (공무원들의) 모든 연락이 며느리한테 갔고. 장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연락이 전혀 없었고.

유가족 T

비슷한 문제는 세월호 피해자들도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의료·심리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세월호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시행규칙에서 의료지원금은 2016년 3월까지, 심리적증상 검사와 치료비는 2020년 3월까지로 기간을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장되었고 그 기한은 2024년 4월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지원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트라우마 반응은 살면서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지원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¹¹⁷⁾ 해외사례에서는 재난 참사 이후 트라우마 심리지원은 지원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정부는 9.11 테러 후 재난의 희생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이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까지 트라우마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트라우마 지원을 지원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¹¹⁸⁾

117) 「“트라우마 유효기간은 10년?”…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곧 끝나」, 『한겨레』, 2023. 04. 16 (2023년 5월 2일 접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020.html)

118) 「美 9·11 테러 피해자들 14년 넘게 무료 정신과 치료… 국가 차원 ‘고통 분담」, 『한국일보』, 2015. 4. 15. (2023년 5월 2일 접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4171867371375>)

4.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책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희생자들이 어떻게, 왜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참사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책임에 있다는 것이 공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나아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가 규명되고 이행될 것이 약속되었을 때 비로소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진상규명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참사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참사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 정부와 경찰이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조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¹¹⁹⁾

책임자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였다, 그러니까 잘못이 교통 통제를 안 해서 그렇다 아니면은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 누군가의 잘못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과 그래도 적절한 사과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 알고 싶어요. 그런 압사를 당했다 아니면 아버지환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밟혔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조차 모르고 그냥. 뭐 특수본에서 하고 나서 결국 했던 거는 이렇게 사람이 쏠리는 현상에 의해서 그런 거다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한 100일 가까이 조사를 해놓고 그거는 뭐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몰랐던 일들. 제일 궁금한 그런 게 진상규명이 아닐까 싶어요. 책임이 없다고 해도 이런 큰 사건에는 책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유가족 S

경찰이 사망사고가 나면 조사를 심하게 하죠. 근데 이번 사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시신검안서 하나 주고, 그냥 변사로 끝난 거예요. 우리 애가 어디서 압사를 당했고 왜 누구 옆에 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몇 시 몇 분에 애가 어디를 갔고 이 행적 조사라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해야죠. 최소한 이런 거죠.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잖아요. 제가 분노했던 건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제가 살아왔던 삶에 비춰보면 이거는 상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그걸로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걸 스스로 막 느끼니까. 욕이 나오고, 진짜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행적 조사라든지 보고서가

119) 참여연대, 「카드뉴스」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2023. 2. 7.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926024>)

하나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더 열 받는 거예요. 그냥 애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장례 끝내고 조용히 살아.’

유가족 Q

2005년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불처벌에 대한 투쟁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진실을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여기에는 진실위원회나 여타 조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가는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의 제거, 파괴, 은닉,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이다.¹²⁰⁾ 특히 이러한 기록의 보존 및 공개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참사의 기억이 온전히 보존되어야만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부의 무책임과 유가족의 몫으로 남겨진 진상규명

이처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책무가 존재함에도 이번 참사에서 국가가 취한 조치들은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고 유가족들의 연락을 방해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점철되었다. 그 결과 참사 당시 그리고 이후의 대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까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가 아닌 피해자 개인의 몫이 되어버렸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부에 자료를 요구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는 그마저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리고 저는 최근까지도 정보 공개 신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정보 공개 신청을 한 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일 거예요. 구급 일지 두 번 신청했고, 번사 기록서 했고, 그리고 블랙박스, 구급일지, 모든 기록을 다 보여달라고 그냥 다 넣었어요. 그냥 소방청, 경찰청, 정부 행정처까지 전부 다, 행정처까지 전부 다 넣었는데 다 비공개 처리 받았거든요. (중략) 그냥 사유도 없이 비공개 통보 비공개 딱 세 글자였고. 첫 번째 구급 일지는 이제 팩스로 문서를 받았어요. 팩스를, 문서를 받았는데 거기 적혀 있던 걸로는 이제 ‘원본 분실로 인해 대조 작업이 불가해 못 준다.’ (중략) 블랙박스는 이미 한 달이 지나서 없어져서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다섯 번의 정보 공개 신청을 했지만 저는 받은 거라고는 두 번째 구급일지 하나뿐인 거죠.

유가족 V

120)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MPUNITY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to update the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Diane Orentlicher: Addendum-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8 February 2005.

정보 공개 청구를 제가 두 번 했거든요. 두 번 했고, 맨 처음에는 이태원 사건 당일 날 사고 현장에서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이송한 거 구급차 안에 CCTV를 공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1월 6일 날 제가 했거든요. 1월 6일 날 사고 현장에서 ○○대 장례식장까지 구급차 이송 기록지, 그다음에 현장 상황에 대한 기록 요청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구급 활동 일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일지 내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뭐가 없어요. 혈압 맥박 체온 이런 건 기록 아예 없고 (중략) 그래서 그것도 없고 20대 신원미상. 옷차림 이런 기록만 있지 저희는 그날 살아있었는지 사망을 해서 옮겼는지에 대한 걸 모르니까 알려달라는 거였잖아요. 없었어요.

유가족 W

2) 유가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한 폄훼와 연대 방해

정부가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때, 유가족 개개인의 노력으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가족이 모여 유가협을 결성한 이유는 슬픔을 나누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함께 규명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당 국회의원이 유가협 결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¹²¹⁾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모욕하였다. 이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가해였다. 유가협 결성 이후에도 정부는 유가협과 제대로 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고 유가협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권성동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태원 유가족들도 단체화가 되어서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듯이 그분들도 윤석열 퇴진을 외칠까 봐 그게 두려운 거.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2차 가해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생존자 E

국가에서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게 문제죠. 뭔가 대화가 돼야지 실마리를 풀어나가든지 뭐를 서로, 서로 이해관계가 이게 얽히지 않을 텐데. 도대체 우리 알기를……. 우리도 벽에 돌에 바위에 계란치기겠지만. 뭐 상대도 안 해주지, 상충도 안 해주지, 그러니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거를.

유가족 T

아니 지자체가 되게 웃긴 게, ○○도청도. 우리 유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할 곳은 있어야

121) 권성동 “이태원, 세월호와 같은 길 안 돼”...유족 왜 욕보이나” 반발, 『한겨레』, 2022. 12. 11.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1068.html)

되잖아요, 지역별로. 우리가 맨날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실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3시간씩 빌려달라는 것도 안 빌려주잖아요. (중략)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나 이런, 이런 강당, 아니면 그런 사무실 빌려가지고 회의하고…… 아니 서울시의회에 그렇게 회의실 많잖아요. 정부 기관이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뭐 생활지원비까지는 가당치도 않죠.

유가족 L

3) 한계가 남은 국정조사

2022년 12월 19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했다.¹²²⁾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55일 간의 조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확인하였고, 일부 진상이 규명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특위 위원의 질의에 행정기관이 방어하는 시간이 수차례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 여야 합의로 운영되는 위원회 구조에서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사 자체가 파행되는 일이 반복되었다.¹²³⁾ 무엇보다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참여가 배제되는 상황이었다. 유가족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솔직히 불만이 많았던 게 뭐냐면 그 현장에 있었던 부모도 솔직히 많았어요. 그 사고 소식을 듣고 그 현장으로 갔던 부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유가족의 얘기를 먼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들어보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맨 마지막이었죠. 순서가 모든 게 다 끝나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략) 그래서 분명히 잘못을 한 거는 드러났는데 그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중략) 근데 역시나가 됐죠. 그리고 검찰로 넘어 갔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는 솔직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정작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나온게 아무것도 없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겠다고 하고 있고, 절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마음이 없고 자기 자리 챙기기 바쁘고.

유가족 U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처음엔 국정조사를 하니, 안 하니 뭐...결국은 시작을 해도 반쪽짜리

122) 『“국민의힘 빠진 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작…21일 첫 현장조사』, 경향신문 (2022. 12. 19.)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191643001>)

123) 김남근,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 10.29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10.29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2023. 1. 19.

로 시작을 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기 바로 전날, 국힘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서 울고불고 하니까,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가 됐는데 후...그냥 감싸기잖아요. 이상민 장관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나면 “그날 어쩔 수가 없으셨죠? 그때 골든타임 지났었죠?” (중략) 그리고 우선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뭘 조사를 하나 하려면 피해자인 우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궁금해 하는지, 우리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네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증거는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 사진도 갖고 있고, 증거는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이 궁금한 걸 국정조사가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죠.

유가족 L

그래서 참 다 쇼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편지를 썼는데 뭐 거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은 어떻게 보면 그 소중한 시간에 자기네들 장관, 자기 대통령이 뽑은 장관을 지킬 생각만 하고 있고. 민주당이라는 사람들은... 여자친구가 참석을 못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때 사고를. 그 귀중한 시간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 귀중한 시간에 그걸 그냥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라는 게 저런 자리인가 약간 뭔가 감정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고 이런 시간인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귀중한 시간 한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했었죠. 저런 귀중한 시간에.

유가족 S

4) 특별법 제정,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필요성

국정조사에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계가 드러나면서 독립적인 진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10여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들의 연대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023. 4. 20. 국회에 발의되었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진을 받은 1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를 불필요하게 정쟁화하며 특별법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¹²⁴⁾ 앞으로 특별법의 온전한 제정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까지라도 확실하게 밝혀진 게 있다면 그냥 투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아 거기까지는 조사가 됐구나, 라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중략) 그런데 그 무엇 하나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24) 「국힘, 이태원 특별법 반대 “이미 수사결과 나와... 새로 밝혀진 것 없다”」, 『오마이뉴스』, 2023. 4. 18.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19995)

그러니까 계속 불신이 생기고 (중략)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밝혀겠다. 그날의 그 시간을 우리는 밝혀겠다. 우리 아이들이 왜 오지 못했는지. 저희가 그래서 외치는 게 계속...조사기구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독립된 조사기구가 왜 필요하느냐, 특별법이 왜 필요한냐, 특별법이 생겨 만들어져야 조사 기구도 우리가 또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자꾸 계속 묻는 답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계속 외치는 거고.

유가족 U

5) 기록하고 기억할 국가의 책무

앞서 이야기한 유엔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원칙’은 “온갖 법적 절차에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알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참사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만드며,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밝힘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송을 고려했다는 한 유가족의 이야기는 참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나는 소송전을 해야 되겠다.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재판장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증인 신청이라도 해서 재판장에 와서 거짓말하면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략) 나의 그 소송의 목적은 기록을 남기는 거였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족들도 안 모이지 누가 아무 조사도 안 하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유가족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 민사소송에 불러낼 수는 있잖아요. 그럼 기록은 남잖아요.

유가족 Q

그럼에도 2023. 4. 18.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설계 당시 통신기록 보존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기준 때문에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따라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¹²⁵⁾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관련 기록을 백업해 보관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¹²⁶⁾ 그러나 그간 참사에 대하여 정부가 보여준 책임없는 태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과연 이러한 통신기록 보존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기억할 책무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125) 「이태원 유족, 「재난안전통신망 기록 폐기 방지한 이상민 장관 책임져야」, 『경향신문』, 2023. 4. 18.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181521001>)

126) 「행안부 “이태원 참사 재난안전망 기록 백업해서 별도 보관 중”, 『노컷뉴스』, 2023. 4. 19. (<https://www.nocutnews.co.kr/news/5929699>)

5. 추모와 애도를 보장할 책무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온전한 추모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자에게 ① 원상회복(restitution), ② 금전적 배상(compensation), ③ 재활(rehabilitation), ④ 만족(satisfaction), ⑤ 재발방지 보장(guarantee of non-repetition)과 같은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22문단 (g)항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만족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¹²⁷⁾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보고서 역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추모는 국제인권법에서 도출되는 의무이며 따라서 예산과 정치 또는 구조적 갈등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¹²⁸⁾ 국제인권법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비추어보아도 추모와 애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1) 추모와 애도, 연대의 공간으로서의 합동분향소

추모와 애도를 보장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시민들이 함께 만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애도는 홀로 슬퍼하는 것을 넘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곁이 되어주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들을 해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동분향소는 단지 추모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유가족들에게는 이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공간이며 참사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향소에서, 녹사평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세요. 근데 분향소가 차려졌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서울 시청에 이렇게 분향소를 해놓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몰랐던 분들도 이거 뭐야, 라고 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신 분들, 또 많이 물어주신 분들, 내 자식처럼 아침저녁으로 10시부터 새벽 5~6시까지 3천배해주신 분, 같이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유가족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가족 O

그럼에도 참사 초기 국가애도기간에 정부가 설치한 합동분향소는 영정도 위패도 없었다. 심지어

127)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2006. 3. 21.

128)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Memorialization processes in the context of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fifth pillar of transitional justice”, A/HRC/45/45, 2020. 7. 9.

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자체 청사에 위치하라는 지침을 내리기까지 했다.¹²⁹⁾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의 자체적인 연대로 이태원광장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졌고 이후 서울의 중심지인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계속해서 불법점거라는 이유를 대며 철거를 요구하고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희가 시청 분향소로 이전을 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경찰의 방해죠. (중략) 경찰들이 막아서서 압박을 하고 계속 방패 들고 들어오고, 처음 지을 때부터 설치할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경찰들의 방해,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그렇게 빨리 또 왔을 줄도 몰랐고, 저희 분향소 하나 막겠다고 거의 공무원 70명이 왔더라고요 그날 경찰도 거의 몇천 명 오고. 그때 제일 많이 든 생각은 이 인원의 3분의 1만이라도 이태원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 분향소 하나 설치하는 거 막겠다고 몇천 명이 왔는데 거기에 그 3분의1 아니, 열명이라도 거기에 배치해 줬었다면 우리가 이려고 있었겠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유가족 V

이제 시청에 오니까 그런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중략) 여기서 2차 가해는 경찰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경찰들이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찍어요. 채증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그 분향소 앞을 그전에 칸막이 있었어요. 칸막이 있을 때는 저쪽 플라자 호텔 저쪽으로 경찰이 기동대 버스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도 되잖아요. 근데 방패를 들고 굳이 몇십 명이 그 방패를 들고 분향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분향소 앞에, 보통 그런 데를 지나가면 모자를 쓴 사람들도 모자를 벗고 가고 어떤 시민은 이렇게 모자 쓰고 가다가도 지나갈 때 모자를 벗고 가시거든요. 근데 방패랑 경광봉 같은 걸 다 들고 거기를 막 몇십 명이 자유자재로 다니는 거. 너무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유가족 L

2) 참사를 기억하는 추모 공간 마련의 필요성

합동분향소 외에도 장기적으로 추모와 애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모비, 추모공원, 기념관 등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의 참사를 마주하며 참사 현장과도 멀고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곳으로 추모공간을 숨겨버리곤 했다. 인근 동네 주민들조차 그 존재를 알기 어려운 추모 공간은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렇게 잊혀진 기억은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¹³⁰⁾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서

129) 「[단독]합동분향소가 4층에?...'행안부 지침' 있었다」, 『노컷뉴스』, 2022. 10. 31.
(<https://www.nocutnews.co.kr/news/5841796>)

130) 「'삼풍백화점 붕괴 20년' 잊혀진 추모비...교훈은?」, 『KBS』, 2015. 6. 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03482>)

울시가 제안한 추모 공간은 녹사평역 지하 4층과 같이 여전히 시민들이 찾을 수 없는 곳들뿐이었다.¹³¹⁾

이에 비해 외국에서는 참사가 발생한 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며, 그 인근에 위치한 곳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등 사고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높고 일상적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우선으로 한다.¹³²⁾ 대표적인 것인 2001년 미국 911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 부지에 마련된 9.11 메모리얼 파크가 있다. 2001년 일본 아카시시 육교 참사 추모비도 참사날짜, 경위, 희생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육교 한 칸에 설치되어 있고¹³³⁾, 2016년 독일 베를린의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 발생한 테러를 추모하는 기억공간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¹³⁴⁾ 10.29 이태원 참사 역시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와 거리적으로 가깝고 시민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너네들 이제 그만 조용히 입 다물고 지하로 꺼져 줘라, 그리고 기어 나오지 마라, 너네 자리는 거기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너희들끼리 조용히 그곳에서 추모하다 잊혀져라. 난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근데 난 우린 절대 그럴 수 없다, 아직 우린 더 만나야 할 시민들도 많고, 아직 더 들려줘야 할 우리 아이들 얘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도 했고 뉴스에도 나왔고 저희 유가족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내가 볼 때는 귀를 닫고 있나 봐요. (중략)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떠날 마음이 없어요. 앞으로 찾아오는 날이 따뜻해져서 찾아오는 외국 분들도 시민분들도 다 만나 뵙고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 거예요.

유가족 U

대구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뭐, 성수대교 기념비 추모관 이것들이 다 외곽에 가 있잖아요. (중략) 그런 모든 게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공시설 안 되고요. 공공시설은 지하도, 화장실도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녹사평 4층으로 가라는 거예요. 공공시설로 가라는 거 안 되고, 공공기관으로 가서 행안부면 행안부, 서울시면 서울시청 안에 그 추모관이 있어야 돼요. 지네들이 보고 맨날맨날 뼈에 새겨야 되거든요. 안전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

131) 「이 깊고 깊은 녹사평역 지하 4층... 여기, 추모 공간 후보지 맞나요?」, 『경향신문』, 2023. 2. 1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101611015>)

132) 사단법인 한국조경사회, 「국내·외 추모시설 사례 조사분석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2015, p119.

133) 「歩道橋事故20年 遺族が語る安全への思い 明石市の新職員へ」, 『毎日新聞』, 2021. 7. 21. (<https://mainichi.jp/articles/20210721/k00/00m/040/018000c>)

134) Berlin City, Golden crack: memorial for the victims of terror from Breitscheidplatz, 2022. 5. 3. <https://www.berlin.de/sehenswuerdigkeiten/4999992-3558930-goldener-riss-mahnmal-fuer-die-terroropf.html>

아요. (중략) 그거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우리나라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이따위 사고가 나는 거예요. 911 보세요. 참사 난 그 자리가 공원이 되고, 시민들도 그렇고 모든 외국에서도 다 거기를 보러 가잖아요.

유가족 L

참사 직후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포스트잇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이러한 메시지는 정부의 일방적 애도에 맞서는 시민들의 추모와 애도의 목소리다. 생존자, 구조자가 남긴 메시지들은 참사의 의미를 남기는 중요한 기록이기도 하다.¹³⁵⁾ 그럼에도 참사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 속에서 시민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만 유지되고 관리되어 왔다.¹³⁶⁾ 그 후 유가족, 시민대책회의와 이태원 상인들은 함께 협약을 맺고 참사 현장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¹³⁷⁾ 하지만 현장을 기억하고 공간을 조성하며 남겨진 메시지를 기록하는 모든 과정을 시민단체나 피해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결국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어쨌든 공간이 마련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조금 얘기를 잘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가족분들한테는 의견 물을 게 아니라 그분들이 봐서 흡족하게 해드려야죠. 그 역할을 구청이 하고 시청이 해야죠. 그리고 그 역할에는 구청, 시청에 책임자가 있어야죠. 그런 거를 할 능력이 안 되면 차라리 그런 전시회든 뭐든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다가 아웃소싱으로 맡기든가 전문가에게 맡기든가. 못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추모에 대해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몰라서 이렇게 냅두고 있고 모르면 잘하는 사람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역주민(상인) A

3) 연대와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

추모와 애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가족이 함께 모이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다. 이는 합동분향소나 회의실과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추모대회, 문화제, 기자회견과 같은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대회의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¹³⁸⁾ 이후 원칙적으

135) 「이태원, 6천 6백 장의 쪽지…그 마음 이어가려면」, 『KBS』, 2022. 11. 2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1705>)

136) 「추모의 마음 흘러질라…이태원역 매일 쓸고 닦는 사람들」, 『한겨레』, 2022. 11. 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6587.html)

137) 「[르포]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재정비…‘기억과 안전의 길’ 첫발 내딛다」, 『노컷뉴스』, 2023. 3. 20.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840>)

138) 「서울시 “광장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불허”…유족 반발」, 『한겨레』, 2023. 2. 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7876.html)

로 사용신고만 하면 사용가능하고 집회를 보장해야 하는 공간인 서울광장 서편에 낸 사용신고조차 이유도 밝히지 않고 불수리했다. 또한 2023. 5. 8.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농성에 돌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 물품을 내리는 것조차 막는 등 집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¹³⁹⁾

그렇게 유가족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는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해 심각한 혐오와 폭력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방관하였다. 법원 역시 유가협이 이태원광장 분향소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하였다.¹⁴⁰⁾ 이러한 일들은 참사에 있어 추모와 애도, 진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국가가 성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연대의 가해에 대해)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을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는 않은데 가족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죠.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거든요. 무시하면 되고 그냥 사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지는 않지만 아무렇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유가족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화살은 또 정부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2차 가해가 있는데도 너는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얘기를 번지르르 하게 했는데도 사실 집회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냥 그거를 방치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유가족들을 못 만나게 했던 개인 정보라는 이유랑 너무 비슷한 그런 행태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유가족 X

139) 「[영상] 경찰에 맞아 뇌진탕...“1인 모기장·팻말 가지고 있다”」, 『한겨레』, 2023. 5. 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572.html)

140) 「‘2차 가해’ 논란 분향소 앞 현수막...법원 “집회 자유”」, 『경향신문』, 2023. 2. 6.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062138005>)

V

사회의 책무

V. 사회의 책무

인권과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의 책임

가까운 10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가슴기 살균제 참사 등 대형 재난 참사와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감염병 재난, 한해 2천 건 가까이 되는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재난과 참사는 익숙한 나의집, 일터, 학교생활, 여가생활 등 일상의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숨 쉬는 것, 타인과 연결되는 익숙한 행동조차 위험의 신호로 다가왔다. 안전한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을 뿐이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인식은 안전하지 못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반복된 지난 시기, 원인을 규명하거나 진실을 찾는 것은 국가가 아닌 피해자들의 몫이었다. 오히려 국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침묵을 강요해왔다.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도 없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도 개인의 탓으로 떠넘겼다. 거대한 자본과 국가의 부정은 늘 면죄부를 받았다. 나의 안녕을 지켜줄 국가가 없다는 것에 분노와 불신이 쌓였다. 희생의 반복에도 바뀌지 않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 나의 연결은 희미해지고 연대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었다. 무관심과 냉소, 외면 속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멀어져갔다. 그리고 재난과 참사는 또 다시 반복되었다.

정부의 무책임이 비극을 반복케 했지만 우리 사회의 뼈아픈 책임도 묵과할 수는 없다. 참사의 구조적 문제보다 자극인 소재만 부각했던 언론은 참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너무나 쉽게 보도하고 재생산했다. 취재경쟁 속에 피해자의 권리는 뒷전이였다. 재난보도준칙, 인권보도준칙 등 약속은 있었지만 실천은 더뎠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어떠한가. ‘미안하다’는 말은 금세 힘을 잃었다. 그 자리를 냉소와 차별, ‘아직도?’라는 차가운 시선에게 내어주었다. 참사의 진실보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가시 돋친 말들이 온라인 댓글을 장악했다. 인권과 안전한 사회를 외면한 사이 참사는 더욱 확장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재난과 참사를 대하는 언론과 미디어, 사회구성원의 현재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것을 통해 재난참사 상황에서 언론과 사회구성원들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언론 및 미디어의 책무

재난참사 발생 시 언론 및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프레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에 대한 기초정보와 정부 부처의 대응과 평가, 재난을 이겨낼 다양한 방안들 역시 언론을 통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은 재난 보도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와 언론의 의무를 규정한 「재난 보도준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재난참사마다 위 준칙을 무시한 인권침해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출처가 불분명한 SNS 상의 정보와 사진 등을 인용하여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보도들이 쏟아졌다.¹⁴¹⁾ 헐러윈 축제를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기사들도 있었다. 생존자나 유가족에 과도한 취재를 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이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요청했다.¹⁴²⁾ 2022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시민 76%는 참사의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과학적 보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¹⁴³⁾

유튜브, SNS 등에서는 참사 당시의 영상과 사진이 여과 없이 전파되며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켰다. 참사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확산되었고, 이는 참사의 본질적인 원인과 책임을 가려버렸다. 이와 같은 참사에 있어서의 언론 및 미디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왜곡·허위 정보와 혐오의 확대재생산

「재난 보도준칙」 제3조는 “언론은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신속한 보도 못지않게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참사 직후 쏟아진 많은 언론보도는 인터넷 커뮤니티·SNS·유튜브 상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이 통신사 제공으로 출처가 둔갑하기도 했다.¹⁴⁴⁾

141) 김수정, 「이태원 참사와 2차 가해 ‘미디어를 중심으로」, 『참사 100일 토론회 자료집 -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 pp1-21.

142) 「[이태원 참사] 언론단체들 “추측성·무책임 보도 안돼」, 『연합뉴스』, 2022. 10. 31.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1127400005>)

143) 오세욱,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Media Issue 8권 6호』, 2022, p7.

144) 「‘이태원 참사’ 보도 사진·영상 출처, 커뮤니티·SNS·유튜브였다」, 『미디어스』, 2022. 11. 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092>)

나아가 참사의 본질을 가리고 희생자나 생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SNS를 중심으로 제기된 ‘토끼 머리띠를 쓴 사람이 사람들을 밀었다’, ‘각시탈을 쓴 사람들이 바닥에 무언가를 뿌렸다’는 이야기이다. 해당 소문은 출처도 불분명했고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¹⁴⁵⁾ 당시 여러 언론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이러한 허위 소문을 기사화하여, 참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확대재생산하였다.

토끼 머리띠 남성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분은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이었으면 괜히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중략) 게다가 현장에는 토끼 머리띠 남성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거의 비스무리한 분장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외국인 친구들은 저기 텔레토비 분장 텔레토비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근데 길 가다가 외국인 친구들인 줄 알고 딱 보니까 같은 텔레토비 복장을 입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분장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생존자 E

2) 지켜지지 않은 피해자 보호 원칙

재난보도에 있어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은 피해자의 신원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참사 당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희생자의 사진 등 사건 현장을 그대로 노출하여 보도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22년 12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당시의 절박함과 참혹함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희생자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며, 해당 언론사 13곳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¹⁴⁶⁾

이러한 피해자 보호 원칙은 참사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가령 참사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는 유가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서 보도를 하거나 생존자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일도 있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응급실 문 출입문 딱 이렇게 열리면 봉고차가 바로 딱 앞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옮겨서 저희가 차를 같이 탔거든요. 근데 그때도 플래시가, 그러니까 막 찍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 모자이크 돼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 되게 정신없는

145) 「각시탈 ‘토끼 머리띠’ 등 이태원 참사 음모론 모두 “거짓”」, 『한겨레』, 2023. 1. 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628.html)

146) 「이태원 참사 ‘떼창’ ‘심폐소생술’ 영상보도 언론사들 ‘주의’」, 『미디어오늘』, 2022. 12.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44>)

그런 상황들이 다 동영상에 찍혔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유가족 Y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를 해가서 제 사진을 뒷모습만 찍어 보겠다고 허락을 받아서 뒷모습만 찍어서 올렸는데 YTN에서 갑자기 무단 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논지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안쓰러운 피해자를 만들어서 막 뉴스를 내보냈더라고요. YTN에서.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인가 며칠, 며칠 뒤에 왔어요. 당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알아가지고. 다른 한국일보한테 전화하고 YTN에 전화하고 해서 YTN에서 사과 전화 오고. 기사 내리겠다, 다시 우리 지우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마무리 됐는데…….

생존자 G

3) 온전한 애도를 가로막은 취재·보도

반복되는 재난참사마다 언론은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해 과도한 취재를 하며 경쟁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참사에서도 언론은 과도한 취재로 유가족이 온전히 희생자를 추모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장례정보가 유가족도 모르게 언론을 통해 전파된 경우도 있었다. 희생자를 찾고자 애쓰는 유가족에 대해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했으며, 장례 장면을 촬영하여 장례식을 방해하기도 했다. 참사 당시 생존자이자 친구를 잃어 경황이 없는 피해자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다가 뒤늦게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¹⁴⁷⁾ 경쟁적으로 고통을 전시하고자 하는 언론의 과도한 취재·보도로 인하여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참사로 떠나보낸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고 애도할 시간조차 방해받았다.

저는 어쨌든 이제 ○○님이랑 제 동생이 같이 막 부고 기사가 뒀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정말 참사 다음 날부터 그런 2차 가해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되게...그런 거를 대처하느라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중략) 그제 처음에는 한 열 개 이 정도였는데 그게 막 몇십 개로 늘어나고 또 막 사회 처음에는 연예 기사에만 뜨다가 사회 기사 여기에도 올라가고 댓글이 몇백 개씩 달리고. 이거를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2차 가해 악플이 있었어요. (중략) 아직 납골당에 안치도 안 했는데 납골당 정보가 올라와 있다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저희는 되게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너무 좀 충격받고 이랬어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기자들한테 하나하나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기자 연락처가 따로 없더라고요. 기사에는. 메일을 처음에는 보내다가 이게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제 거기 언론

147) 「친구 잃은 피해자 인터뷰 장면 뒤늦게 뺀 KBS」, 『미디어오늘』, 2022. 10. 3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97>)

사에 전화를 했어요. 언론사에 하나하나씩 전화를 하는데 또 이제 언론사마다 다른 거예요. 그 대처를 해주시는 게 어느 언론사는 바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었고.

유가족 Y

언니 어머니가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 9시에 오셨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오시자마자 그 문을 닫아 달라고, 기자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기자들은 다 나가고 여기는 우리끼리 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문을 닫아주기를 요청했고 그러니까 문이 닫히더라고요. (질문자: 오랜 시간 동안 열려 있고 다 노출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신입 기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쭈뼛쭈뼛 걸어와서 “인터뷰 좀 해 주세요.” 아니면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가면 “오늘 친구를 잃으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그냥 대놓고 이제 계속, 계속 해야 하는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희생자 지인 I

한편으로 이렇게 슬픔과 고통에 찬 이른바 ‘피해자다운 모습’을 한 피해자가 보이지 않을 때, 언론은 이들의 목소리에 무관심해지곤 한다. 유가족이 어렵게 자신을 드러내고 장시간의 인터뷰를 했음에도 이를 충실히 전달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에 더해, 좀 더 정제되고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언론이 무관심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협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협의회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할 얘기만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할 얘기만 하게 되니까 요령이 생겨서 지금 이제 유가족이 요령이 생기니까 이제 인터뷰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처럼 저나 ○○엄마나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안 들어와요 전혀 인터뷰를 안 했던 분들한테 또 그래요. 그럼 그분이 인터뷰하고 “나 오늘 4시간 했어요. 5시간 했어요.” 이러는데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전화 와서 “1분 나갔어요.” (중략) 그리고 지면도 그렇고 우리가 한 얘기는 쪽 빠지고 정말 애매한 부분만 딱 올라가고. (중략) 엇그저께 행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가족이 어제 또 모여서 막 울고 또 좌절했죠.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한 개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응, 사과하라고 하니까 정말 어떤 언론도 그날 기자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치지는 거죠. 이제 힘들고 억울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려고 행진을 한 거고 대통령 들으라고 한 건데 언론들이 싹 막으니까 그게 이제 이런 게 2차 가해죠. 취재는 왜 오냐고.

유가족 L

4) 혐오표현 댓글에 대응할 책무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혐오 댓글이다. 참사초기부터 희생자와 생존자를 탓하고, 정부의 일방적 애도에서 촉발되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이 야기들이 댓글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시되었다. 참사 이후 열흘간의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중 58.27%가 혐오 댓글로 분류될 수 있었다.¹⁴⁸⁾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의 혐오는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혐오댓글이 난무한다면, 언론 역시 이에 대해 차단,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혐오표현이 담긴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 노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¹⁴⁹⁾

이에 대해 참사 49재와 100일 추모대회를 앞두고 유가족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참사 관련 댓글 폐쇄를 요청했고 카카오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네이버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댓글로 상처받지 않는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악플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글들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이용자에게 안내하기는 했으나, 댓글 폐쇄 여부는 언론사의 자체 선택에 맡기고 있기에 현재도 여전히 혐오 댓글이 게시되고 있다.¹⁵⁰⁾¹⁵¹⁾

5) 사회구성원의 책임이 요구되는 유튜브, SNS

방송, 신문 등 기존의 언론 외에 유튜브, SNS 등에서도 참사에서의 혐오가 확대재생산 된다. 참사 당시부터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는 현장 사진과 영상이 여과 없이 올라왔고, 일부 사용자들의 자정 호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퍼져나갔다. 헬러윈 축제 당시 모습이 맥락 없이 전파되며 희생자, 생존자, 지역주민과 상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다. 참사 현장에서 상인과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SNS를 통해 퍼졌다.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언론을 통해 확대

148) 「참사 댓글에 '혐오' 58%... 대선 때보다 갈등 심각」, 『국민일보』, 2022. 12. 9.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76955>)

149) 「온라인에 쓴 '혐오 표현' 댓글 삭제된다...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한겨레』, 2023. 4. 28.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89828.html>)

150) 「네이버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댓글창 폐쇄' 요청 무시...유가족 고통」, 『아시아투데이』, 2023. 2. 10.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09010005635>)

151)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태원 참사 댓글 달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언론사는」, 『미디어오늘』, 2023. 2. 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75>)

재생산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¹⁵²⁾

한편으로 정부와 여당이 유가협의 활동을 정쟁화하고 폄훼하는 것을 소재거리로만 활용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유튜버, SNS 이용자는 개인이기에 일률적인 가이드나 규정만으로는 규율이 어렵다. 그렇기에 참사에 연대하고 공감하며, 피해자의 곁에서 아픔을 나눠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요구된다.

네. 각자 색깔의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너무 둘 다 싫더라고요. 반대편은 더 싫고 저희 팀에 있어도...혹시 그 행진도 같이 있으셨나요?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막았어요. 막았는데. 저는 이런 긴 싸움에는 우리 유가족이 비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유가족 대표님이랑 어떻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고 경찰에 얘기하고 있는데 유튜브 분들이. 이 상황이 재밌나 봐요. 그냥 막 “밀어붙여, 밀어붙여” 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유가족 S

152) 「이태원 참사 영상 SNS 유포 여전...삭제 39건 불과」, 『YTN』, 2022. 11. 4.
(https://www.ytn.co.kr/_ln/0102_202211042208082089)

2. 사회구성원의 책임

10.29 이태원 참사는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빚어진 참사다.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 등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그 밤 이태원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삶에 또 다른 슬픔으로 기억된 사건이다. 우리는 이 참사를 누군가의 비극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참사가 일어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159명이 세상을 떠나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삶에 흔적을 남긴 이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국가의 무능과 철저한 외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으로만 참사를 기억할 수는 없다. 모두의 노력으로 진실을 규명한 사건으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온전히 바라보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연대하고 공감해야 할 책임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느끼는 고립감이다. 참사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상실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재난 피해자의 회복은 ‘재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난 이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일’로 이해되어야 한다.¹⁵³⁾ 피해자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와 공감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온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댓글에 시달리게 되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라는 말을 듣거나, 참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피해를 온전히 말할 수 없었다.¹⁵⁴⁾ 악의적인 온라인 댓글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왜 그곳에 갔는가’, ‘철없이 놀다가 일어난’ 사고를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낳았다. 이것은 참사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쌓아 온 사회적 무관심의 결과이기도 하다.

저는 사실 주변 주변에 알고 지냈던 친구로부터 가해자 소리도 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중국 카카오토티라고 불리는 위챗 모먼트에 글을 간단하게 올렸어요. 많이 힘들다고. 누가 인터넷에 악플을 캡처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인데 저한테 댓글로 언니 나는 생존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153) 416재단,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자권리 매뉴얼』(2021), 14p.

154) 『“그저 놀러 간 것뿐인데 무슨 잘못인가요”』, 『연합뉴스』, 2022. 11. 28.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6040900004>)

애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제가 사실 그때 그날 이태원에 여기가 해밀턴 호텔이 있고 이렇게 T자 라인이고 여기가 이태원 역 있었으면 제가 여기쯤에 있었어요. 그 사고는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니까 이걸 제가 이걸 딱 생각을 하니깐 내가 뒤에서 사람을 밀쳐서 내가 움직여서 사람이 죽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막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생존자 E

타인의 아픔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무더요. 지금 너무 무디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 인식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과연 누구 탓인지,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국민들이잖아요. (중략) 그게 언제부터인가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타인에 대한 것들을 외면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외면시해버리는. 근데 그냥 외면시만 돼버리면 괜찮은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의 가장 문제의 핵심이 정치라고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정치권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결핍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바로 해야 되고 제대로 정치권을 질타하지 못하면, 이 상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가족 M

2)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해야 할 책임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추모와 기억의 마음을 담은 포스트잇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어있다. 기억과 추모,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음은 참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들의 그리움,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남긴 애도와 슬픔, 구조에 참여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남은 아쉬움과 부채감, 참사를 지켜본 시민들의 추모와 기억의 정동이 가득하다. 남겨진 이야기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다짐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으로 이어진다. 10월 29일 그 밤처럼 국가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늘 시민들이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공간 포스트잇

97년에 태어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022년 이태원 압사 참사로

또다시 또래 친구들을 잃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고 생명 존중이 우선인 사회

기필코 만들어 내겠다

10.29 이태원 참사 현장 추모공간 포스트잇

참사의 진실규명과 기억, 변화를 다짐하는 것은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시작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현재뿐 아니라 후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재난과 참사, 상실을 경험한 시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모두의 삶과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것에 다름없다. 또한,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 진실과 기억은 우리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며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VI 결론

VI. 결론

1. 10.29 이태원 참사가 새기는 인권의 원칙과 공존을 위한 질문들

반복되는 재난참사가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 사회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키는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159명의 세상을 떠나보내는 참사를 마주하게 되었다. 위험은 언제나 증폭되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험에 취약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안위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재난참사를 정의하고 접근함에 있어 인권과 인간 존엄성이 중요한 까닭이다. 재난은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권리가 박탈되는 과정을 폭력적으로 드러낸다. 우리 사회는 반복된 재난참사에도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위기 상황과 피해만을 간신히 모면하는 대응을 해왔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위험은 현실의 위기와 결부되어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위험을 감시·통제하며 제거하면 된다는 국가와 사회의 기준으로는 비극을 멈출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가 재난 참사에 있어 인권의 원칙을 확인하고 인간 보편의 권리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기록하는 이유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참사를 인권의 원칙으로 ‘다시’ 기록하는 것은 이 참사의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구성원들과 국가가 안전사회를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할 질문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첫째,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그동안 해왔던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며, 대응 체계와 운영의 부재·부실로 더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을 존엄성을 가진 생명이자 안전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로 삼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10월 29일 국가는 없었다.

둘째,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는 참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가는 개인의 책임으로 원인을 돌리면서, 참사로 이끈 사회 구조의 문제를 가리려 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말하지 못하는’ 고통까지 떠안아야 했으며 해결을 위한 연대까지 봉쇄당했다. 이로 인해 비극의 반복을 멈출 진실규명도 문힐 위기에 처해있다.

셋째, 참사 해결의 시적인 추모와 사회적 애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곧바로 혐오와 폭력이 이어졌다.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정된 기한으로 선언된 국가애도는 국가가 사회구성원을 언제, 어떤 이에 한해서, 어떻게 애도할 만한 생명으로 삼는가를 보여줬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나 ‘사고’, ‘본인의 의지’, ‘정쟁의 도구’라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와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차별주의자들에게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

한 혐오가 의견이 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이렇게 국가는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는 혐오와 폭력을 조장, 방치하고 있다.

넷째, 참사 이후 정부 대책은 피해자들과 사회구성원의 의사소통과 참여 없이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 계획되고 발표되었다. 지난 11월, 유가족들의 6대 요구사항으로부터 독립적 수사기구, 특별법 제정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며 의사 결정하는 민주적인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재난참사가 닥쳤을 때, 우리는 누가 어떤 피해와 고통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그 고통과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유보된 권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유보한 것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떤 제도와 가치를 새롭게 할 것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

2. 재난·참사에 관한 인권의 원칙

하나,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 존중의 원칙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재난참사의 반복은 우리에게 상실과 고통 속에서 위험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취약한 조건과 시간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사회구조가 이것을 방치하고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기후위기, 기술발전에 따른 예측·통제 불가능한 위험의 출현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는 단순히 분배나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성을 심화시키며 위험을 증폭시키는 인간 생존과 공존의 문제이다. 불확실한 삶들이 내일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만으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안전이 위험 제로 상태라는 환상에 붙들려 취약한 사람을 위험의 요소로 보고, 개인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그 어떤 가치, 이윤이나 정치적 이해와 권력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해야 할 때다. 따라서 국가는 재난 참사에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둘, 자유·평등·연대로 이어지는 보편적 권리 주체들의 사회적 소통과 참여, 의사 결정 보장의 원칙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은 재난참사의 피해자들이 단지 구제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보편적 권리 주체라는 사실로 이어진다. 자유·평등·연대로 대표되는 보편적 권리들은 인간

존엄성 존중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재난참사의 피해와 고통을 먼저 경험하면서, 박탈된 권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왜 유보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권리는 피해자의 한정된 특권이나 시혜의 이름이 아니라 평등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피해자의 고통을 사회 공통의 문제로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참사에서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존엄을 존중하고, 권리실현을 위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자유·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셋,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를 통한 인권증진의 원칙

재난참사의 해결은 피해자 개인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상실에 대한 애도와 기억, 진실과 책임,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통한 사회적 치유 과정이 피해자, 사회구성원, 국가의 노력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때 재난참사의 해결은 인권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가능성이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상실을 안고서도 삶을 긍정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적 치유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비롯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사회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며 이 과정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별첨

인권실태조사단

활동경과

별첨

인권실태조사단 활동경과

1) 실태조사 준비회의

- 실태조사팀 1차 회의 (2023.1.1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 인권실태조사 목적 및 기획안 정리, 예산안 확정
- 실태조사팀 2차 회의 (2023.1.26.) | 온라인ZOOM
 - 심층면접 대상 섭외 및 심층면접 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논의
 - 심층면접 질문안 정리
- 실태조사팀 3차 회의(2023.2.28.) | 온라인ZOOM
 - 유가족 심층면접 일정 확인 및 질문안 점검

2)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

- 인권실태조사 워크숍 1(2023.2.8.)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 진행한 심층면접 분석 및 보고서 방향 논의
- 인권실태조사 워크숍 2(2023.3.2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 진행한 심층면접 분석 및 보고서 방향 논의
- 인권실태조사 워크숍 3(2023.4.6.)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 진행한 심층면접 분석 및 보고서 방향 논의
 - 보고서 목차 구성안 마련
- 인권실태조사 워크숍 4(2023.4.1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 보고서 목차 구성 완료 및 집필 역할 분담
- 인권실태조사 워크숍 5(2023.4.21.)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 보고서 1차 초안 공유 및 논의, 수정
- 인권실태조사 워크숍 6(2023.4.28.)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 보고서 진행안 논의 및 수정 상황 점검, 보고대회 실무 준비

3) 보고서 작성을 위한 편집팀 회의

- 보고서 집필 및 검토를 위한 편집팀 구성, 보고서 마무리 작업 진행



발행일 2023.5.15

발행하는 곳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 조사단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 조사단 1029dignity@gmail.com

편집 및 디자인 언제나 봄 그대곁에

10.29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용균재단,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TF,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원  **4-16재단** 생명·안전·연속